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 2020년 산청군 -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 목 차 〉

1.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부적정	1
2. 불법 전용농지 단속 부적정	6
3.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신고 업무 부적정	12
4. 불법 전용산지 원상복구 부적정	15
5. 체육분야 보조금 정산검사 부적정	19
6. 물품구매 단가계약 체결 미이행	25
7. 건설기계 정기검사 행정처분 업무처리 소홀	28
8. ○○○○○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소홀	31
9. 근무성적평정 업무 부당 처리	36
10. 직무관련 법인 경비 부담 공무국외여행 부적정	99
11. 화물자동차 불법밤샘주차 단속 이첩내역 처리 부적정	110
12. 공동방제단 운영·관리 부적정	114
13. 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일제점검 미이행 및 행정처분 소홀	118
14.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124
15.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제작·관리업무 부적정	132
16. 산청한방약초축제 추진 부적정	137
17. 산청승마장 민간위탁 추진 부적정	145
18. 내정 소하천 사방댐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150
19. 숲가꾸기사업 수의계약 추진 부적정	154
20. 일반운영비(피복비) 집행 부적정 및 관계서류 구비 소홀	157
21. 주부민방위기동대 관리·운영 및 활동실비 지급 부적정	160
22. 공용차량 관리 부적정	164
23. 특허공법 반영교량 발주 및 관급자재 구매검토 부적정	169
24. 기반시설(도로)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미 이행	174
25. ○○사업 추진 부적정	178
26. 사업 인가절차 미 이행 등 사업추진 부적정	185
27. ○○○○ 신축공사 설계변경 및 준공전 사용 부적정	191
28. 건축물 설계시 특정업체 중목구조제품 지속 반영 부적정	203
29. ○○○○ 신축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212

【일련번호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 요구

제 목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부적정

소 관 기 관 산청군(○○과)

조 치 기 관 산청군(○○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산청군 ○○과에서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농업외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를 위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및 사후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57조, 제58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도시·군 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등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배치도 등 공사 관련 도서, 설계도서,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농지법」 제36조에 따르면 농지를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주(主) 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시장·군수는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또한, 「농지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시에는 사업계획서,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한다),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9조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각 호의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

요한 상당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기간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하거나 불허가 하여야 하고,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요청내용이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산청군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신청서류에 흠이 있으면 「농지법」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기한 내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반려하거나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허가(협의의 경우는 미동의) 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산청군 ○○과에서는 【표1】과 같이 2017년 7월 13일 (주)○○○○○○○○(○○○)이 신청한 ‘골재선별 및 야적장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사업대상부지 4필지의 소유자 4명중 2명의 토지 소유권이나 사용승낙서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서류 보완 요청을 하지 않았고, 구비서류가 미비하여 허가를 할 수 없음에도 2017년 8월 17일 개발행위허가 및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하여줌으로써 개발행위허가 등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미비한 2명(2필지)의 서류를 살펴보면, ○○면 ○○리 ○○○-○번지는 소유자 ○○○(亡)의 상속자 전원(2명)이 아닌 장손자 ○○○의 사용승낙서와 ○○○이 ‘토지사용 승낙에 따른 이의제기시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국토계획법」 및 「농지법 시행령」 별지 신청 서식에 따라 부지의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한다)로서 효력이 없고, ○○면 ○○리 ○○○-○번지는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표1】 개발행위 및 타용도 일시사용 부적정 허가 내역

○ 민 원 명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민원접수번호 0000, 2017.7.13.)

○ 민 원 인 : (주)○○○○○○○○ 대표 ○○○

○ 사용목적 : 산청군의 ○○○지구 하천정비사업 골재선별 및 야적장 조성

○ 지번별 조서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일시사용면적	일시사용기간	소유자	비고
산청군 ○○면 ○○리	000	답	1,661	2017.8.18.~ 2018.12.31.	○○○	사용승낙서(소유자)
	000-0	답	2,387		○○○ (亡)	사용승낙서 및 각서 (○○○의 손 ○○○ 명의) ※ ○○○의 상속자 전체 사용승낙서는 미첨
	000-0	답	1,432		○○○	사용승낙서(소유자)
	000-0	답	2,005		○○○	사용승낙서 누락

* 각서내용 : ○○면 ○○리 000-0번지의 소유자 ○○○(亡)의 상속자 전원(2남2녀)의 사용승낙서가 첨부되어야 함에도, 손자인 ○○○ 1인의 각서 “토지 상속자의 형제가 타지역에 출가하여 상기 토지 승낙에 이의를 제기하면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 질 것을 확인합니다.”만 첨부

출처) 산청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산청군 ○○과에서는 허가 심사시 검토 미숙과 업무연찬 부족, 관리감독 또한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담당자 변경, 업무숙지 미비 등에 따른 관련법 검토의 미숙함이 없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향후 허가(협의)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산청군수는

- ① 「국토계획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농지법 시행령」 제39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

취하 등) 등을 위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여 준 실무담당자 ○○과 지방○○주사보(현, ○○면 지방○○주사) ○○○ 및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하여 준 실무책임자 ○○과 지방○○주사(현, ○○○○과 지방○○사무관) ○○○에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②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시 허가심사 기준 외에 기본적인 구비서류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 요구

제 목 불법 전용농지 단속 부적정

소 관 기 관 산청군(○○과)

조 치 기 관 산청군(○○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산청군 ○○과에서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농업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를 위하여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농지의 사후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농지 전용허가지 주변 불법전용 농지 단속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농지법」 제34조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42조에 의하여 허가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허가취소, 공사 중단 및 원상회복명령 등으로 시정조치 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 여부,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산청군은 관할구역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 당초 허가받은 사항의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하고, 위반시에는 원상회복, 대집행, 허가취소, 공사 중단 등의 시정 조치를 명하고, 행정처분과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고발조치하여 엄격하게 농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산청군 ○○과에서는 2017년 10월 28일 “농업용 제조업소 및 창고시설” 설치 목적으로 전용허가 받은 산청군 ○○면 ○○리 000-0번지의 소유자(○○○)가 사업완료후 000-0번지(답)와 000-0번지(답, 260㎡)를 차고지, 창고, 주차장 등의 용도로 농지전용 허가지 주변을 불법 전용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원상회복을 명하지 않는 등 농지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 농지전용 허가 후 주변 농지 불법전용 현황】

산청군 ○○면 ○○리 000-0(창, 998㎡) / 불법전용(000-0 나대지 및 000-0 우측 차고 및 창고일부)		

출처) 산청군 현장확인 결과

3. 등록 야영장 주변 불법 전용농지 단속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하여 관광객 이용시설업(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부지 면적의 변경,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 등 등록한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업계획서, 부동산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법」 제34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 여부,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가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산청군은 농지에 야영장을 설치하고 관광객 이용시설업(야영장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농지법에 따라 개별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농지를 야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한 행위에 해당함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및 행정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산청군 ○○과에서는 【표】와 같이 “○○○○○○○○” 및 “○○○○○○○○” 등 야영장 2개소에서 당초 사업계획 승인받은 부지 외에 주변의 농지를 허가·신고도 없이 불법 전용하여 야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감사일 현

재 등록 야영장의 불법 농지전용 행위에 대하여 불법 전용여부를 조사하고 원상 회복을 명하거나 고발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등록 야영장주변의 농지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등록 야영장 주변 불법농지전용 현황

연번	등록 업체명	위 치	야영장등록일 (농지전용허가일)	불법 농지전용
1	○○○○○○○○	산청군 ○○면 ○○리 000-0외	201○. ○. ○. (201○. ○. ○.)	○○리 000-0(답, 526㎡) ○○리 000-0(답, 738㎡)
2	○○○○○○○○	산청군 ○○면 ○○리 0000	201○. ○. ○. (201○. ○. ○.)	○○리 0000(답, 467㎡) ○○리 0000(답, 919㎡중 일부) ○○리 0000(답, 512㎡중 일부) ○○리 0000(전, 2,311㎡중 일부)

출처) 산청군 현장확인 결과

【 ① 야영장 주변 불법 농지전용】

산청군 ○○면 ○○리 000-0번지 ○○○○○○○ 캠프장	

000-0번지(답, 불법 골재포설 738㎡)	000-0번지(답, 불법 골재포설 526㎡)

【 ㉔ 야영장 주변 불법 농지전용】

산청군 ○○면 ○○리 0000번지, ○○○○○○○○○○ 캠핑장		

0000번지(답, 족구장)	0000~0000번지(전답, 수영장)	0000번지(전, 야영데크)

출처) 산청군 현장확인 결과

관계기관 의견

산청군 ○○과에서는 담당공무원이 불법 전용농지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업무연찬 부족과 업무미숙으로 불법 전용농지 관리가 소홀하였으며, 관리감독도 철저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관련 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 원상회복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산청군수는

① 「농지법 시행령」 제58조를 위반하여, 등록야영장 주변 농지가 각각 농지전용허가일(201○. ○. ○., 201○. ○. ○.)이후 불법 전용되었음에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책임과 창고시설 농지전용허가지 주변 불법 전용농지(2017년 말)를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책임으로 각각 실무책임자 ○○과(현, ○○면) 지방○○주사 ○○○, ○○과 지방○○주사보(현, ○○○○과 지방○○주사) ○○○에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② 불법 전용농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원상회복하여 주시고, 관내 농지전용 허가지 주변 및 등록 야영장 주변을 포함한 불법 농지전용 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 요구

제 목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신고 업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산청군(○○○○과)

조 치 기 관 산청군(○○○○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산청군 ○○○○과에서는 「문화재 보호법」 및 「경상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업무와 현상변경 행위시 착수 및 완료 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문화재보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경상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25조에 의하면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에 대하여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시설물의 설치, 토지·임야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 또는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조례 제3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지정문화재는 15일 이내에 경상남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도지정문화재는 7일 이내에 경상남도지사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37조 제3항에 의하면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7호 및 제103조 제3항에 따라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¹⁾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는 2019. 10. 16. ‘현상변경 허가 착수·완료 보고 철저 요청’ 공문을 전 시·도에 시행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착수 및 완료 신고를 철저히 받도록 안내하고, 신고를 누락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며, 제출 받은 신고서는 5일 이내에 전자행정시스템으로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당부하였고, 경상남도에서도 문화재청의 공문서를 2019. 10. 17. 전 시·군에 시달하였다.

따라서, 산청군은 문화재청장이나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자가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하였을 때 기한내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산청군 ○○○○과에서는 【표1】 및 【별첨】과 같이 2017년 6월 1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208개중 192건은 착수신고, 76건은 완료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가 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행위에 따른 착수·완료 신고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1】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착수 및 완료신고 현황

구 분	현상변경허가건수			신고완료			미신고			진행중		
	계	국가	도	계	국가	도	계	국가	도	계	국가	도
착수신고	208	61	147	16	8	8	192	53	139			
완료신고				8	4	4	76	27	49	124	30	94

출처) 산청군 제출자료 재구성

※ 미신고건 전체 268건(착수 미신고 192, 완료 미신고 76)에 대하여 각각 1차 위반 100만 원으로 추산시 과태료 부과 대상 금액은 268백만 원임.

1) 국가지정문화재 착수·완료신고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 원이며, 도 지정문화재도 같은 법 준용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부과

관계기관 의견

산청군 ○○○○과에서는 문화재청장 및 경상남도지사 진달 건에 대해서만 착수·완료 신고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였으며, 복합민원의 경우 타 부서에 착공 및 사용승인 신고로 현상변경 착수·완료 신고가 같음이 된다고 오인하였다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향후 관계 법령과 업무편람을 철저히 숙지하여 유사한 사례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철저히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산청군수는

① 「문화재 보호법」 제40조 및 「경상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32조를 위반하여, 현상변경 착수시 착수신고와 완료시 완료신고를 받지 아니한 책임과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실무담당자 ○○○○과(현, ○○○면) 지방○○주사보 ○○○과 실무담당자의 업무 처리에 대해 관리·감독 책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과 지방○○주사 ○○○, ○○○○과 지방○○주사(현, ○○○과) ○○○에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부채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② 현상변경 착수시에는 착수신고와 완료시에는 완료신고를 누락 없이 받도록 하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및 과태료 처분을 철저히 이행하는 등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미신고된 268건의 미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여부를 검토하여 적의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 요구

제 목 불법 전용산지 원상복구 부적정

소 관 기 관 산청군(○○○○과)

조 치 기 관 산청군(○○○○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산청군 ○○○○과에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용산지 단속 및 원상복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 제15조의2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허가신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4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3조 및 제55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한 자에게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²⁾내에 허가권자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660㎡미만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호에 따라 그 조치명령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산지복구의 경우에는 복구설계서를 대신하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 등이 포함된 복구개요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57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부과금액은 【표1】과 같다.

【표1】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자. 법 제40조제1항 전단(법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면적이	법 제57조제1항제2호			
1) 1천㎡ 미만인 경우		25	50	100
2) 1천㎡ 이상 1만㎡ 미만인 경우		50	100	200
3) 1만㎡ 이상 10만㎡ 미만인 경우		150	300	600
4) 10만㎡ 이상인 경우		250	500	1,000

출처)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10]

따라서, 산청군은 산지 불법전용으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복구의무자에 대해서는, 산지복구를 명하고 이후 30일 이내에 산지복구설계서(또는 복구개요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복구계획서(또는 복구개요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산청군 ○○○○과에서는 【표2】와 같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산지소유자 ○○○에게 산지 복구 명령을 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복구개요서가 포함된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지 못하였음에도,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있다.

【표2】 불법 전용산지 복구계획서 미제출 현황

연번	위반자	위반산지 지번 및 면적	복구명령 공문통보일 (복구개요서 제출기한) (산지 원상복구 기한)			사법처리결과	비고
			최 초	1차 촉구	2차 촉구		
1	○○○	○○면 ○○리 산00-00번지 외 0필 (221㎡)	'19.02.19. ('19.03.18.) ('19.08.18.)	'19.11.19. ('19.12.18.) ('20.01.31.)	'20.03.13. ('20.03.31.) ('20.04.30.)	벌금 50만원	

출처) 산청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산청군 ○○○○과에서는 복구이행자가 복구명령 이후 복구개요서를 제출 하지 않았으나, 복구대상 면적이 경미(221㎡)하고 복구이행자가 계속해서 복구를 하고 있었으며, 복구를 완료시키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여 복구설계서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소홀히 한 점이 있었다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 조치하겠으며, 일부 복구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행위자를 독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료 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산청군수는

① 「산지관리법」 제57조를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책임과 총 3차례 복구이행명령에도 산지를 원상복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실무담당자 ○○○○과 지방○○주사보 ○○○, ○○○○과(현, ○○과) 지방○○주사보 ○○○과 실무담당자의 업무 처리에 대해 관리·감독 책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과 지방○○주사 ○○○에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② 현재까지 복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복구대상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원상 복구조치하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체육분야 보조금 정산검사 부적정

소 관 기 관 산청군(○○○○과)

조 치 기 관 산청군(○○○○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산청군 ○○○○과에서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행사, 체육대회 등을 권장하기 위하여 체육분야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정산검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보조사업 관리감독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및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9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의8 및 같은 조례 제26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2조의4 및 같은 조례 제23조에 따라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2조의6 제2항 및 제3항,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결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산청군은 지방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실적심사를 하여야 하고, 심사결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을 인계할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산청군 ○○○○과에서는 【표1】 및 【표2】 와 같이 “2019 ○○○○ 동계 전지훈련 개최” 및 “2020 ○○○○ 동계 전지훈련 개최”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자로 ○○○○○○(이하 “○○○”라 한다)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나 ○○○에서는 (사)○○○○○○○○(이하 “○○○○”라 한다)에서 ○○○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명의를 ○○○로 변경하여 교부신청 하였고, 교부받은 교부금 전액을 ○○○○로 이체하여 사실상 보조사업을 ○○○○가 추진하였다.

위 사업의 실적보고서, 정산서 및 정산증빙서류를 확인한 결과 ○○○의 사업비 집행내역은 전혀 없고 ○○○○에서 ○○○로 제출한 지출내역과 지출증빙서류 등이 그대로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사실상 ○○○○가 보조사업자의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는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자의 지위를 임의로 ○○○○로 인계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산청군 ○○○○과에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심사 및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여 사실상 산청군에서 선정하지 않은 ○○○○가 보조사업을 추진하였음을 정산서류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가 보조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정산 검사를 완료하고 ○○○에게 시정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1】 산청 ○○○○ 동계 전지훈련 보조사업 집행 현황

(금액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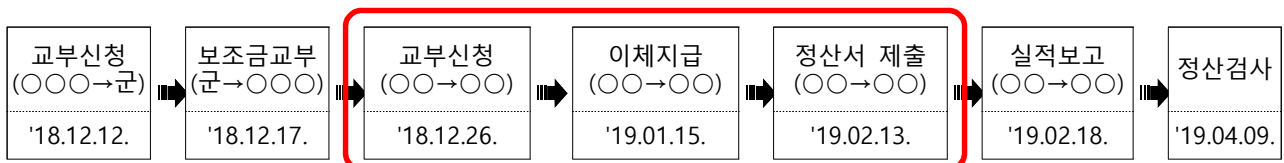
연번	사 업 명	사업비	보조사업자		실제수행자			비고
			명칭	집행금액	명칭	집행금액	집행잔액	
		170,296		0		168,110	2,186	
1	2019년 전지훈련	70,000	○○○	0	○○○○○	69,758	242	
2	2020년 전지훈련	100,296	○○○	0	○○○○○	98,352	1,944	

출처) 산청군 제출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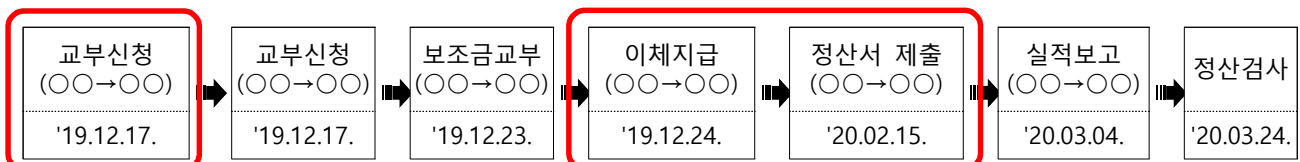
【표2】 산청 ○○○○ 동계 전지훈련 보조사업 사업추진 흐름도

○ 2019년 사업

부적정한 절차 표시



○ 2020년 사업



출처) 산청군 제출자료 재구성

3. 보조사업 정산검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제1항 및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의6 제2항 및 제3항, 같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군수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산청군은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 증빙서류가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사업계획 및 군수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산청군 ○○○○과에서는 【표3】 과 같이 ‘2017년 농산어촌 유청소년진축구 체험’ 등 6건은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 및 정산검사서를 제출받고도 즉시 정산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준비기간에 정산검사를 실시하였고, ‘제10회 경남도지사기 생활체육 시군대항 테니스대회 참가’ 등 2건은 감사일 현재까지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 감독 및 정산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3】 체육분야 보조금 정산검사 지연 현황

(금액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총사업비	보조금교부	정산검사	비고
	8건		180,136			
1	2017년 농산어촌 유청소년 선진축구 체험	○○○○○○○	25,000	'17.07.19.	'20.04.07.	감사 준비기간 정산검사 실시
2	제2회 경상남도테니스협회장배 시군대항 테니스대회	○○○○○○○	20,000	'18.02.20.	'20.04.07.	
3	2019년 경남산청FC U-15 운영비 지원	○○○○○○○	30,000	'19.01.31.	'20.03.25.	
4	2019년 학교체육 육성 지원	○○○○○○○	100,000	'19.03.12.	'20.04.20.	
5	제13회 경상남도지사배 그라운드 골프대회	○○○○○○○	1,356	'19.03.26.	'20.03.30.	
6	제6회 남해군수배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	○○○○○○○	1,300	'19.05.21.	'20.03.20.	
7	제10회 경남도지사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	1,500	'18.04.27.	-	정산검사 미실시
8	제21회 경상남도지사기 생활체육 탁구대회	○○○○○○○	980	'18.06.26.	-	

출처) 산청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산청군 ○○○○과에서는 담당자의 관련 규정 미숙지와 업무 미숙에 따라 발생하였다고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는 전지훈련을 유치 및 지원하는 단체로 ‘○○○○ 동계 전지훈련 개최’ 보조사업자로 적절하다 판단되어 선정하였고, ○○○와 ○○○○간 전지훈련 유치 대행 협약서를 바탕으로 보조사업자의 지위를 인계한 것이 아니라 행사 운영을 대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서류를 기초로 정산검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토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산청군수는

- ① 「지방재정법」 및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의 관리감독과 정산검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책임을 물어 실무담당자 ○○○○과 지방○○주사보 ○○○과 실무담당자의 업무 처리에 대해 관리·

감독 책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과 지방○○주사 ○○○, ○○○○과(현 ○○○○과) 지방○○주사 ○○○에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② 지방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 검토,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보조사업의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는 등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 요구

제 목 물품구매 단가계약 체결 미이행

소 관 기 관 OO군(****과)

조 치 기 관 OO군(****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OO군 ○○○○○ 부속 ◇◇◇◇◇ □□□에서는 2017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매년 ▲▲▲를 구입하여 ▽▽▽가 직접 ☆☆☆, ●●●, ■■■, ♠♠♠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단가계약),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단가계약)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33조(입찰공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인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는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물품의 구매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과에서는 0000년 ▲▲▲를 구입하면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매월 수의계약 방법으로 구매·집행하여 일정기간 계속하여 필요한 &&&개 품목에 대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할 경우 &&&천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단가계약 체결 없이 수의계약 방법으로 구매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OO군 ****과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업무 범위 안에서 미리 단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을 통하여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OO군수는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한약재 구입을 수의계약으로 구매·집행한 실무담당자 @@과(현 ###과) 지방\$\$\$ %%%과 실무담당자의 업무 처리에 대해 관리·감독 책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과 지방\$\$\$ %%%에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물품의 구매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등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 요구

제 목 건설기계 정기검사 행정처분 업무처리 소홀

소 관 기 관 OO군(****과)

조 치 기 관 OO군(****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OO군 ****과에서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해 최고, 과태료부과, 직권말소 등의 행정처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등록의 말소 등), 제13조(검사) 제1항 제2호, 제5항, 제9항, 제44조(과태료)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건설기계 소유자가 정기검사 최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표를 영치한 사실을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 할 수 있고,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차위반시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기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을 가산하여 40만 원 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별표 1]에서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정기검사 최고, 등록번호표의 영치 및 통지, 등록의 말소)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OO군에서는 건설기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는 정기검사를 최고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최고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최고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 영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OO군 ****과에서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총&&건의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총 &&&&천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다.

또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0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정기검사 최고를 하여야 함에도 &&건중 &&건만 최고기간에 최고하였으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최고기간이 지난 후 최고하였고, 최고후에도 최고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을때도 등록번호표 영치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없이 재최고를 반복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OO군 ****과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업무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연찬 부족과 업무의 중요성 인식 미흡에 따라 최고, 직권말소예고 및 직권말소, 등록번호표 영치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감사에서 지적된 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행정절차 준수 및 법규 연찬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OO군수는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13조 제1항 제2호, 제5항, 제9항, 제44조를 위반하여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과태료부과, 등록번호표 영치,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실무담당자 @@과(현 ###과) 지방\$\$\$\$ %%%, @@과 지방\$\$\$\$ %%%, @@과(현 ###과) 지방\$\$\$\$ %%%과 실무담당자의 업무 처리에 대해 관리·감독 책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과(현 ###과) 지방\$\$\$\$ %%%, @@과(현 ###과) 지방\$\$\$\$ %%%에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총&&건의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총 &&&&천원의 과태료 부과처분하고, 최고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을때는 등록번호표 영치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 요구

제 목 00000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소홀

소 관 기 관 00군(****과)

조 치 기 관 00군(****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00군에서는 「0000 000000」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추진하였다.

2.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 (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에 따르면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7조(경상적 경비)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른 경비와 제8조(기준경비)에 따른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제Ⅱ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3-1. 예산 신속집행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내외 경기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도별 재정 신속집행 계획에 따라 예산의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예산집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전년도 이월사업, SOC 계속사업 등 집행이 용이한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0000. 0. 00., 0000. 0. 00. 매년 OO군 ****에서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지침을 전실과, 직속기관에 통보 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에 편성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연도별 재정 신속집행 계획에 따라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 (확인된 문제점)

OO군 ****과에서는 0000년 당초예산에 0000년 개최예정이었던 「제&회 0000000」 행사를 위한 “0000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을 사유로 용역비 &억 원 전액을 0000년으로 명시이월 하였다. 명시이월 된 이후에도 구체적인 집행 계획 없이 집행을 미루다가 회계연도 말이 0000. 00월이 되어서야 「제&회 0000000」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계획(안)을 수립하였고(0000.00.00.), 0000. 00. 00.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하고, 0000. 0. 0. 용역을 착수하였다.

OO군에서는 0000. 0월에 0000년 지방선거로 당선된 ●●●가 당초 2000년 개최예정이었던 행사를 0000년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하여(0000년 &회 행사가 개최되었으므로 &&년 단위의 의미 있는 행사필요 의지) 개최시기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늦었다고 하나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추진시기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해야 하며, 실제 예산이 편성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울 경우 내부검토과정을 거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필요시기에 다시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OO군에서는 0000년에 편성된 예산 &억 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년간 사장하고 있다가 0000년에 비로소 집행을 시작하는 등 예산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한 사실이 있다. 또한, OO군에서는 집행률 제고 및 이월·불용 최소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소극적으로 추진하였다.

3. 평가위원선정 및 수당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르면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OO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5조(구성방법), 제11조(수당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하“평가집행자”라 한다)은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를 심사하고,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위원을 선정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OO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때는 신청서를 접수한 평가위원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예비위원을 선정하여야 하고, 평가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평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 (확인된 문제점)

OO군 *****과에서는 0000. 00. 00. 「제&회 0000000」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평가위원(예비) 모집을 OO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여 &&명이 접수되었으나, 0000. 00. 00. 제안서 평가위원회 예비위원을 구성하면서 평가위원에 대한 위원구성 심사를 이행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위원 &&명을 구성하였다.

또한 평가위원 수당지급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에서 정한 “0000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지침”을 근거로 평가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평가수당은 지침에 따라 자문평가 비용을 지급하였으나, 교통비는 지침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지 않고 근거없이 도내 50,000원, 도외 70,000원으로 정하여 지급하였고, 특히, 평가위원

&명은 거주지가 OO시 소재인데도 교통비를 도외로 책정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OO군 ****과에서는 「0000 00000」를 개최하기 위하여 0000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여 용역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 개최가 타 시·군과의 차별화됨은 물론 필요성과 적정성을 ◆◆◆·□□□와 협의하면서 @@@ 개최시기, 개최규모(예산 등), 성공의 가능성, 인근 지자체의 엑스포 개최 시기 등 종합적인 검토로 개최시기를 0000년으로 변경 하면서 재정 신속집행의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0000 0000000 국제행사 승인을 위한 기본계획용역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함에 있어 우수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엄격한 자체심사를 거쳤으나 내부결재를 득하지는 못하였으며, 교통비 부담지급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통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 명시·사고이월에 대한 질의답변(인터넷질의답변 2009.11.30.)에 따르면 명시이월은 구체적으로 사업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집행 시기가 늦어지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 가능한 것이나, 예산은 그 예산이 편성된 당해연도 내에 지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당해 회계연도내 반드시 지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월제도가 인정된다고 하여 지출이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예산의 편성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였을 때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실제 예산이 편성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울 경우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필요시기에 다시 편성하여야 함에도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을 사유로 &년동안 &억 원의 예산을

사장시켜 예산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였고, 집행률 제고 및 이월·불용 최소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소극적으로 추진한 점이 인정되므로 @@@ 개최 시기조정, 개최규모 등에 따른 협의지연과 이에 따른 신속집행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아울러 “@@@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추진하면서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자체심사를 거쳤으나 내부결재를 득하지는 못하였고, 교통비 부담지급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통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OO군수는

①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7조, 제8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OO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5조를 위반하여 예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하고, 평가위원선정 심사 및 평가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실무책임자 @@과 지방\$\$\$\$ %%%, @@과(현 ###과) 지방\$\$\$\$ %%%에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예산의 편성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예산이 편성된 회계연도 내에 신속히 집행하는 등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징계·훈계·시정 요구

제 목 근무성적평정 업무 부당 처리

소 관 기 관 산청군(○○○○과)

조 치 기 관 산청군(○○○○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산청군 ○○○○과에서는 매년 상·하반기에 평정대상기간 및 평정대상, 평정자 및 확인자³⁾, 통합평정⁴⁾, 작성요령, 근무성적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실적가점 부여기준 및 배점 등의 내용을 포함한 ‘근무성적 평정 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계획을 전 실·과, 읍·면에 통보하여 근무성적평정서와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실적가점 신청서를 제출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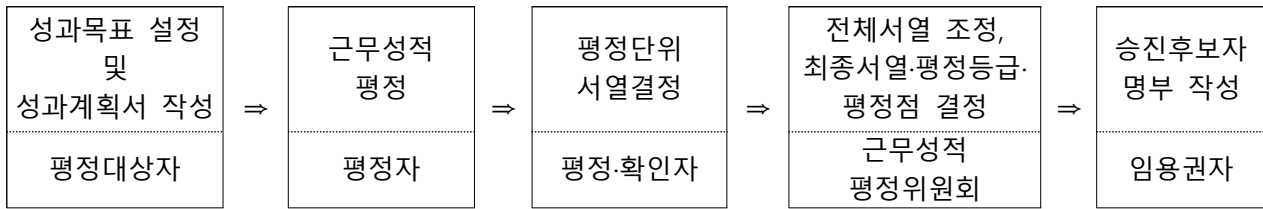
그리고 제출받은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근무성적평정안을 작성하고 부군수(6급 이하, 지도·연구직)와 군수(5급 및 지도관)까지 결재를 받은 후 해당 근무성적평정안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근평위”라 한다)에 상정하여 서면으로 심사·결정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 중간 또는 이후에 근무성적평정점을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이하 “인사랑”이라 한다)에 입력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승진임용시 필요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3) 산청군 근무성적 평정자·확인자

구분	평정자	확인자
5급 및 지도관	부군수	부군수
6급 이하 일반직, 전문경력관(별정직), 지도사, 연구사	실·과장, 읍·면장	부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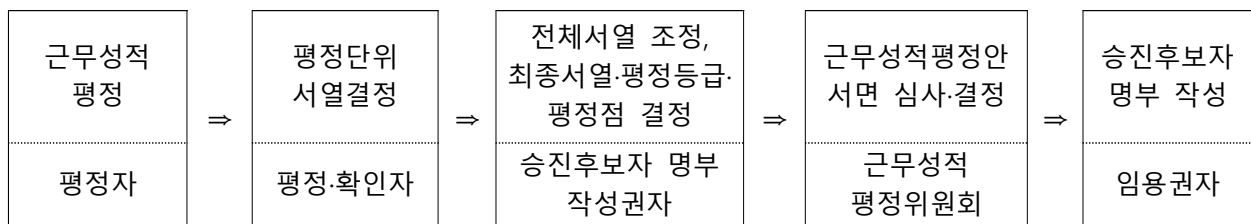
4) 통합평정 대상 : 6급 행정·세무·전산직렬

[그림1]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절차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그림2] 산청군의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절차



2.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제31조의4(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9조(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결정),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에 따르면, 5급 이하 근무성적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해서는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 기관별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근평위를 두어야 하고,

근평위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분포비율⁵⁾에 맞게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평정단위에서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으며, 위원회의 운영결과에 대한 회의록 등을 기록으로 유지하여 위원회의 평정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수(64점 이상 70점 이하) 20% / 우(53점 이상 64점 미만) 40% / 양(32점 이상 53점 미만) 30% / 가(32점 미만) 10%

그리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0조에 따르면 근평위는 평정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인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는 제출된 평정점 결정 결과가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평위에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 제28조(명부의 작성기준일), 제29조(명부의 효력), 제31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정기평정일 기준일 다음 달 말일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명부는 작성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영 제31조의3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정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가산점 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근무성적평정 시 부여한 가점·감점 사유가 소멸하거나 근무성적평정 이후 가점·감점 사유가 새로 발생하여 명부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에는 명부를 조정할 수 있으나, 단순 착오나 누락으로 명부에 명백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사유 및 조정내역에 대하여 근평위의 사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4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산청군 ○○○○과에서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평위 심의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평정 권한이 없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로부터 근평위의 심사·결정 전 근무성적평정안을 확정하여 결재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근평위의 심사·결정에 따라 확정된 개인별 근무성적평정점은 인사랑에 정확히 입력해야 하고, 입력 이후에는 근무성적평정 순위와 평정점을 수정하여 재입력해서는 아니 되며, 평정점 결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평위에 재결정을 요구하여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정기평정일 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진후보자 명부 효력 발생일 이후 명부의 조정사유가 생기지 않는 한 명부를 조정할 수 없으며, 단순 착오나 누락으로 명부에 명백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조정사유 및 조정내역에 대하여 근평위의 사후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3. 위법부당사항

그런데 산청군 ○○○○과에서는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 하반기까지 반기별로 총 5회의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을 기초하여 ‘5급 근무성적평정안’과 ‘6급 이하 근무성적평정안’을 각각 1부씩 작성한 후, 5급의 경우 담당계장, 과장, 부군수, 군수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고, 6급 이하의 경우는 부군수 전결로 결재[그림3]를 받음으로써 근평위 심사 전 근무성적평정안을 확정하는 절차를 가졌다.

[그림3] 2017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안 결재 서류

일반직 5급 평정안(군수 결재)	6급이하 일반직, 연구·지도직 평정안(부군수 전결)

그리고 직급별 평정순위와 등급, 평가점을 기재하고 각 평정위원들의 서명과 서명날짜를 기재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를 별도 작성하지 않은 채 결재 받은 해당 근무성적평정안[그림4]을 그대로 첨부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찾아가 설명하였고, 평정위원들은 별다른 조정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의결서 1부에만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림4] 근무성적평정표 및 산청군 근무성적평정안 비교

5-3-3호 서식(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지 제4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

- 소속:
- 대상직급:
- 평정 대상기간: 부터 까지

평정 순위	성명	평정 등급	평가점

※ 작성요령

- 평정점은 소수점 아래 첫째자리까지 평가하여 부여한다.
- 같은 평정등급 안에서는 평정점수 사이의 간격과 평정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 같은 평정단위에 속하는 평정대상 공무원군에 대해서는 그 상호간의 서열을 변경하여 평정할 수 없다.
 - 같은 평정등급 안에서 비로 위·아래 평정점수 사이의 점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
 - 같은 평정등급 안에서 평정된 인원수가 가장 많은 평정점수와 인원수가 가장 적은 평정점수 사이의 인원수 차이가 2명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 평정점수는 평정등급별로 규정된 평정가능 점수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 평정위원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날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산청군 근무성적평정안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정 한 근무성적평정점은 인사랑에 정확히 입력해야 하나, [표1]과 같이 평정대상 전체의 평정점을 최초로 입력한 후 수 차례에 걸쳐 다수인의 근무성적평정점을 변경하여 재입력한 사실이 있다.

더군다나, 2017년 하반기,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의 경우는 승진후보자 명부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평정점을 임의로 변경하였고, 변경한 최종서열과 평정

등급, 평정점의 내용을 포함한 근무성적평정안을 다시 작성하여 이미 받았던 근평위의결서·결재서류 내용과 교체하거나 추가하였으며, 변경된 근무성적평정안을 근무성적평정위원들에게 다시 설명하거나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2018년 상반기와 2019년 하반기에는 근평위 심사·결정 전에 근무성적평정안을 작성하여 부군수, 군수까지 결재를 받고 근평위 의결도 없이 평정점 입력을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수 차례 평정점을 변경 입력하였으며, 변경 입력된 최종 결과를 반영한 근무성적평정안을 첨부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찾아가 의결서 1부에만 서명을 받는 행위로 심사·결정을 대신함으로써 실제로 인사 관련 법령에 따른 근평위의 권한을 유명무실하게 하였다.

이렇게 근무성적평정의 심사·결정 권한이 근평위에 있음에도 법령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승진후보자 명부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임의로 평정점을 변경 조정함에 따라 [표7]과 같이 2017년 하반기 평정대상 563명 중 107명(○○○급 3명, ○○○○○○○급 28명, ○○○급 56명, ○○○급 9명, ○○○급 11명), 2018년 하반기 평정대상 541명 중 78명(○○○급 3명, ○○○○○○○급 28명, ○○○급 1명, ○○○급 1명, ○○○급 24명, ○○○급 5명, ○○○○○급 1명, ○○○급 15명), 2019년 상반기 평정대상 598명 중 25명(○○○급 4명, ○○○○○○○급 9명, ○○○급 1명, ○○○급 1명, ○○○급 4명, ○○○급 1명, ○○○급 2명, ○○○급 1명, ○○○급 2명)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부당하게 변경되었다.

그리고,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음에도 수 차례 평정점을 변경 입력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평정단위별 서열 순위와는 다르게 최종 서열 순위가 결정됨으로써 [표8]과 같이 2017년 하반기 22명(○○○○○○○○급 14명, ○○○급 8명), 2018년 상반기 2명(운전 7급), 2018년 하반기 2명(○○○급), 2019년 상반기 33명(○○○○○○○○급 7명, ○○○급 4명, ○○○급 6명, ○○○급 3명, ○○○○○급 2명, ○○○급 2명, ○○○급 7명, 지방○○○○○ 2명), 2019년 하반기 3명(○○○급 2명, ○○○급 1명)의 평정점이 평정단위 서열 순위와는 다르게 부여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공무원의 평정점 기재가 누락되거나 중복 기재되는 현상도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추후에 의결서에 교체하거나 추가한 조정 평정안의 평정점마저도 [표9]와 같이 인사량에 잘못 입력함으로써 2017년 하반기 3명, 2018년 하반기 6명, 2019년 상반기 2명, 2019년 하반기 2명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부당하게 변경되는 등 평정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부당한 근무성적평정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반기별 근무성적평정 업무 추진에 있어 구체적인 부당 처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2017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업무 부당 처리사항

산청군 ○○○○과에서는 2017. 10. 18. 2017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계획을 수립하고 전 실·과 및 읍·면에 통보한 후 10. 27.까지 근무성적평정서와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을 제출받았다.

그리고 2017. 11.⁶⁾ 2017년 하반기 근무평정 대상자 현황 보고(○○○ 부군수 전결) 후 산청군근평위위원장을 수신자로 하여 2017년도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 등 심사요구 공문을 시행하였고,

2017. 11.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 지정 운영⁷⁾”,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일반직 6급 이하, 지도·연구직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근무성적평정안)”을 부군수 전결로, “일반직 5급 및 지도관 근무성적 평정”을 군수에게 결재 받았다.

이후 2017. 11. 30. 장소를 부군수실로 하여 “일반직 5급 및 지도관 근무성적 평정 심사·결정” 및 “일반직 6급 이하, 지도·연구직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심사·

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문서를 생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하게 되어 있으나, 해당 문서 모두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문서로 시행일 등의 사실관계와 업무처리 흐름 확인이 어려움.

7) 5급 이상 : 3인(부군수 ○○○, ○○○○실장 ○○○, ○○○○○실장 ○○○)

6급 이하 : 5인(부군수 ○○○, ○○○○과장 ○○○, ○○○○과장 ○○○, ○○과장 ○○○, ○○○○과장 ○○○)

결정”, “2017년도 하반기 실적가점 여부 심사 결정” 세 가지 안전을 상정하여 산청군 근평위를 개최한 것으로 의결서에 기록한 후 “2017년도 하반기 근평위 개최결과 통보” 공문으로 해당 평정결과를 접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 평정위원이었던 ○○○(현, ○○과장)와 ○○○(현, ○○○○과장)에 따르면, 부군수실에서 해당 안전에 대하여 대면 심사한 사실은 없으며, 서면심의를 통해 별다른 조정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원안에 동의하여 서명하였다고 한다.

한편, 산청군 인사량의 기록⁸⁾에 따르면, 당시 인사업무 담당자 ○○○은 2017. 11. 30.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 총 563명의 평정점을 인사량에 최초 입력한 후 [표2]와 같이 11. 30. ○○○급 2명, 12. 1. ○○○급 31명, 12. 2. ○○○급 8명, ○○○○○○○급 50명, 12. 3. ○○○급 77명, ○○○급 18명, ○○○급 25명, 12. 4. ○○○○○○○급 2명, ○○○급 3명의 평정점을 변경 입력하였다.

이미 근평위가 심사·결정한 근무성적평정 순위와 평정점을 평정 권한이 없는 인사담당자가 수정하거나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변경할 수 없고, 또한 이미 입력된 근무성적평정점이 평정대상 공무원의 상대적인 서열에 따라 부여된 것으로 일부 직원의 평정 순위와 평정점을 변경하게 되면 다른 직원들의 순위와 그에 따른 평정점 변경이 함께 발생함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급 ○○○의 경우 민원을 유발시켰다는 이유로 평정점을 당초 60.3에서 52.9로 7.4점이나 하향조정하였고, ○○○급 ○○○에 대해서는 업무의 난이도 및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정점을 당초보다 15.2점이나 상향조정하는 등 근무성적평정점을 5일간 총 216회 조정하고 조정내역에 맞추어 근무성적평정안을 재작성하여 당초 의결서와 결재서류 내용과 교체하였다.

그 결과, ○○○급 ○○○와 ○○○은 당초 평정점에 따르면 승진후보자 명부상 각각 5등, 7등이었으나, 변경 후 각각 6등, 8등으로 1순위씩 하락한 반면, ○○○급 ○○○은 당초 17등에서 15등으로 2순위가 상승하는 등 총 107명의 승진후보

8) 청백-e(개별상시모니터링) 및 SQL 실행 결과

자 명부 순위가 당초보다 부당하게 하락 또는 상승(최대 하락치 7등, 최대 상승치 12등)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에서 제출한 지방○○○급 서열명부에는 ○○○(2위), ○○○(3위), ○○○(4위) 순으로 작성되어 있는데도, 최종서열에서는 ○○○(7위), ○○○(23위), ○○○(28위)순으로 조정하여 입력하는 등 [표8]과 같이 총 22명의 평정단위별 서열순위를 부당하게 변경하였다.

또한, 재작성하여 첨부한 근무성적평정안과 입력된 인사장의 평정점을 비교해보면 [표9]와 같이 총 9건이 상이함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3명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또다시 부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2018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업무 부당 처리사항

2018년 상반기에는 2018. 4. 19. 2018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계획을 수립하고 전 실·과 및 읍·면에 통보한 후 10. 27.까지 근무성적평정서와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을 제출 받았으며,

2017년 하반기 업무처리 절차와 동일하게 2018. 5. 산청군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을 수신자로 하여 2018년도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 등 심사요구 공문을 시행하였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 지정 운영⁹⁾”,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일반직 6급 이하, 지도·연구직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근무성적평정안)”을 부군수 전결로, “일반직 5급 및 지도관 근무성적 평정”을 군수에게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근평위의 심사·결정 절차를 통해 근무성적평정안을 확정된 후 인사장에 평정점을 입력함이 마땅함에도, 당시의 인사담당자 ○○○은 근평위 개최일인 2018. 5. 29. 이전 2018. 5. 27.에 군수와 부군수의 결재를 받은 평정안을 근거로 평정대상 전체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을 입력하였다.

9) 5급 이상 : 3인(부군수 ○○○, ○○○○실장 ○○○, ○○○○○실장 ○○○)

6급 이하 : 5인(부군수 ○○○, ○○○○과장 ○○○, ○○○○과장 ○○○, ○○과장 ○○○, ○○○○과장 ○○○)

그리고 5. 27. 최초 입력 이후에도 인사담당자 ○○○은 [표3]과 같이 ○○○급 ○○○, ○○○급 ○○○, ○○○급 ○○○에 대하여 업무의 난이도 및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기존 평정점에서 각각 16.5점, 10.4점, 12.2점을 가산하여 대폭 상향하는 등 5. 27. ○○○○○급 31명, 5. 28. ○○○○○○○급 및 ○○○급, ○○○급 등 총 151명, 5. 29. 또다시 ○○○○○급 11명, 5. 30. ○○○급 및 ○○○급 6명의 평정점을 변경 입력하였다.

그런 다음, 당초 결재를 받았던 평정안이 아닌 조정내역을 반영한 평정안을 재작성하여 2018. 5. 29. 근무성적평정위원들에게 서면심사로 의결을 받았다.

또한, [표8]과 같이 ○○과에서 제출한 ○○○○○급 서열명부에는 ○○○(1위), ○○○(2위) 순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최종서열에서는 ○○○(1위), ○○○(2위)으로 조정하여 입력하였으며, [표9]에서와 같이 총 5명의 평정점을 의결서와 달리 입력한 사실이 있다.

다. 2018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업무 부당 처리사항

2018년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계획은 2018. 10. 22. 수립하여 통보하였으며, 2018. 11. 5.까지 각 실·과 및 읍면으로부터 근무성적평정서와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을 제출 받았다.

그리고, 2018. 11. 산청군근무성적평정위원회위원장을 수신자로 하여 2018년도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 등 심사요구 공문을 시행하였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 지정 운영¹⁰⁾”, “일반직 6급 이하, 지도·연구직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을 부군수 전결로, “일반직 5급 및 지도관 근무성적 평정”을 군수에게 결재를 받은 후 2018. 11. 19. 근평위를 개최하여 해당 평정안을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받은 후 11. 28. 평정대상 공무원 541명에 대한 평정점을 입력하였다.

10) 5급 이상 : 3인(부군수 ○○○, ○○○○실장 ○○○, ○○○○○실장 ○○○)

6급 이하 : 5인(부군수 ○○○, ○○○○과장 ○○○, ○○○○과장 ○○○, ○○과장 ○○○, ○○○○과장 ○○○)

그러나, 당시 인사담당자 ○○○은 승진후보자 명부 효력 발생일인 12. 1. 이후인 12. 2.에 또다시 ○○○급 ○○○의 경우 업무성취도가 낮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당초 55.5점에서 37.9점으로 17.6점을 하향 조정하고, ○○○급 ○○○을 43.3점에서 56.1점으로, ○○○급 ○○○을 45.1점에서 56.7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총 141명에 대한 평정점을 임의로 변경 입력하였다.

이로 인해, ○○○급 ○○○의 경우 당초 평정점에 따르면 승진후보자 명부상 2등이었으나 평정점 변경에 따라 명부 순위가 4등으로 하락한 반면, ○○○급 ○○○은 4등에서 2등으로 2순위가 상승하는 등 총 78명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당초보다 부당하게 하락 또는 상승(최대 하락치 16등, 최대 상승치 10등)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표8]과 같이 동일 평정단위인 ○○면에서 제출된 지방○○○급 서열명부에는 ○○○(1위), ○○○(2위) 순으로 작성되었는데 최종서열에서는 ○○○(52위), ○○○(56위) 순으로 조정하여 입력하였으며, [표9]에서와 같이 총 11명의 평정점을 의결서와 달리 입력함으로써 6명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부당하게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승진임용에도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라. 2019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업무 부당 처리사항

2019년 상반기에는 2019. 4. 24. 2019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계획을 전 실·과 및 읍·면에 통보한 후 5. 3.까지 근무성적평정서와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을 제출 받았다.

그리고 2019. 5.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지정운영’ 내부결재를 득한 후 산청군근무성적평정위원회위원장을 수신자로 하여 2019년도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 등 심사 요구 공문을 시행하였고, “일반직 6급 이하, 지도·연구직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을 부군수 전결로, “일반직 5급 및 지도관 근무성적 평정”을 군수에게 결재를 받은

후 2019. 5. 28. 근평위를 개최하여 해당 평정안을 심사·결정하였고, 그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기준일인 5. 31.이전까지 근무성적평정점을 입력하여 명부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당시 인사담당자 ○○○은 3일이 도과된 6. 3.에서야 전체 평정대상 공무원 541명에 대한 평정점을 최초 입력하였으며, 최초 입력한 당일에 심사·결정 받은 근무성적평정안의 내용과 달리 ○○○급 10명과 ○○○급, ○○○급, ○○○급, ○○○급, ○○○급, ○○○급, ○○○○○ 각 2명의 평정점을 변경 입력하였다.

또한, 승진후보자 명부 효력 발생일 이후인 6. 4. ○○○○○○○급 41명, ○○○급 3명, ○○○급 2명, ○○○급 1명, ○○○급 14명, ○○○급 3명의 평정점을 임의로 변경 입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6. 5. 또다시 ○○○○○○○급 4명과 ○○○급 6명의 평정점을 재차 변경 입력하였다.

이후 변경한 평정점을 반영한 근무성적평정안을 재작성하여 당초 결재 서류가 포함된 문서철에 추가하여 편철하였고, 변경된 근무성적평정안을 근무성적평정 위원들에게 별도 보고 하거나 사후에 확인을 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부당한 평정점 변경 입력 행위로 인해 ○○○급 ○○○, ○○○의 경우 당초 평정점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상 각각 4등, 13등이었으나 평정점 변경 후 명부 순위가 3등, 12등으로 상승한 반면, ○○○급 ○○○, ○○○은 3등, 4등에서 4등, 5등으로 하락하는 등 총 26명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당초보다 부당하게 하락 또는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표8]과 같이 동일 평정단위인 ○○○○○과에서 제출한 지방○○○급의 서열명부에는 ○○○(1위), ○○○(2위), ○○○(3위), ○○○(4위) 순으로 작성되었는데도 최종서열에서는 ○○○(3위), ○○○(9위), ○○○(46위), ○○○(53위) 순으로 조정 입력하는 등 총 14개 평정단위별 34명의 서열순위를 부당하게 변경하였다.

뿐만 아니라 재작성하여 추가로 첨부한 근무성적평정안과 입력된 인사량의 평정점을

비교해보면 [표9]와 같이 총 11건이 상이함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2명의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에 또다시 부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 2019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업무 부당 처리사항

2019년 하반기에는 2019. 10. 2. 2019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계획을 수립하고 2019. 10. 7. 전 실·과 및 읍·면에 통보한 후 10. 18.까지 근무성적평정서와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 등을 제출 받았으며, 2019. 11. 산청군근무성적평정위원회위원장을 수신자로 하여 2019년도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 등 심사요구 공문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후 근평위의 심사·의결 절차를 통해 근무성적평정안을 확정 한 후 인사랑에 평정점을 입력함이 마땅함에도, 당시의 인사담당자 ○○○는 근평위 개최일인 2019. 11. 20. 이전 2019. 11. 6.에 경력평정 및 가산점 부여 점수를 확인 한다는 이유로 임의로 전체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수를 입력하였으며,

11. 18.에 또다시 인사업무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급 ○○○를 당초 60.3점에서 68.8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급 ○○○을 당초 68.8점에서 60.3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총184명(○○○급 3명, ○○○○○○○급 99명(1~2회 중복 수정 포함), ○○○급 13명, ○○○○○○○급 1명, ○○○급 34명, ○○○급 19명, ○○○급 4명, ○○○급 4명, ○○○○○ 7명)의 평정점을 수정하였다.

그리고 변경입력한 평정점을 반영하여 2019. 11. 19.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 지정 운영¹¹⁾”, “일반직 6급 이하, 지도·연구직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과 “일반직 5급 및 지도관 근무성적 평정”을 작성하여 부군수와 군수에게 보고하는 과정 중 ○○○○○과 ○○○, ○○○○○과 ○○○, ○○○면 ○○○에 대한 조정의견이 있어 ○○○○○○○급 총25명에 대한 평정점을 다시 변경하였고, 변경한 평정점을 반영하여 결재를 받은 후 2019. 11. 20. 근무성적평정위원들에게 서면심의를 통해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1) 5급 이상 : 3인(부군수 ○○○, ○○○○○실장 ○○○, ○○○○○실장 ○○○)

6급 이하 : 5인(부군수 ○○○, ○○○○○과장 ○○○, ○○○○○과장 ○○○, ○○○과장 ○○○, ○○○○○과장 ○○○)

또한, ○○○○과에서 제출한 ○○○○○급의 서열명부에는 ○○○(3위), ○○○(4위) 순으로 작성되어 있는데도, 최종서열에서는 ○○○(4위), ○○○(5위) 순으로 조정하여 입력하였으며, [표9]에서와 같이 인사랑에 8명의 평정점을 의결서와 달리 입력함으로써 2명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부당하게 변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1] 근무성적평정점 변경 입력 현황

(단위 : 명)

구분	평정대상기간	대상인원 (계획)	근무성적 평정 위원회 개최일	승진후보자 명부		근무성적평정점 (인사행정정보 시스템)		변경 횟수 (2~3회 중복변경 포함)	승진 후보자 명부 공개 일시
				작성 기준일	효력 발생일	최초 입력일	변경 입력일		
2017년 하반기	2017. 5. 1.~ 10. 31.	563	11. 30.	11. 30.	12. 1.	11. 30. (563)	계	216	12. 4. 17:00~ 12. 5. 18:00
							11. 30.	2	
							12. 1.	31	
							12. 2.	58	
							12. 3.	120	
							12. 4.	5	
2018년 상반기	2017. 11. 1~ 2018. 4. 30.	586	5. 29.	5. 31.	6. 1.	5. 27. (586)	계	199	6. 1. 10:00~ 18:00
							5. 27.	31	
							5. 28.	151	
							5. 29.	11	
							5. 30.	6	
2018년 하반기	2018. 5. 1.~ 10. 31.	541	11. 19.	11. 30.	12. 1.	11. 28. (541)	계	153	12. 3. 11:00~ 18:00
							12. 2.	7 (최초입력)	
								146	
2019년 상반기	2018. 11. 1~ 2019. 4. 30.	598	5. 28.	5. 31.	6. 1.	6. 3. (583)	계	98	6. 5. 11:00~ 18:00
							6. 3.	23	
							6. 4.	1 (최초입력)	
								64	
							6. 5.	10	
2019년 하반기	2019. 5. 1.~ 10. 31.	556	11. 20.	11. 30.	12. 1.	11. 6. (555)	계	363	12. 2. 11:00~ 18:00
							11. 9.	154	
							11. 18.	184	
							11. 19.	25	

[표2] 2017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점 변경 입력 명세

변경일	직렬·직급	연번	성명	근평당시 소속부서	변경 전	변경 후	점수 변동	비고
2017. 11. 30.	○○○급	1			68.8	62.1	-6.7	수→우
		2			67	60.9	-6.1	수→우
2017. 12. 1.	○○○급	1			62.1	63.9	1.8	2차
		2			70	67	-3	
		3			52.9	59.7	6.8	양→우
		4			61.5	68.2	6.7	우→수
		5			57.9	62.1	4.2	
		6			59.1	61.5	2.4	
		7			67	49.9	-17.1	수→양
		8			46.3	48.7	2.4	
		9			48.1	46.3	-1.8	
		10			57.3	50.5	-6.8	우→양
		11			69.4	67.6	-1.8	
		12			47.5	49.3	1.8	
		13			63.9	68.2	4.3	
		14			60.9	63.3	2.4	2차
		15			63.3	69.4	6.1	우→수
		16			45.7	48.1	2.4	
		17			67.6	56.7	-10.9	수→우
		18			68.8	70	1.2	
		19			56.7	52.9	-3.8	
		20			48.7	47.5	-1.2	
		21			52.3	58.5	6.2	
		22			68.2	60.9	-7.3	수→우
		23			51.7	60.3	8.6	양→우
		24			51.1	52.3	1.2	
		25			59.7	62.7	3	
		26			62.7	57.9	-4.8	
		27			49.3	51.1	1.8	
		28			58.5	51.7	-6.8	우→양
		29			60.3	59.1	-1.2	
		30			50.5	45.7	-4.8	
		31			49.9	57.3	7.4	양→우

변경일	직렬·직급	연번	성명	근평당시 소속부서	변경 전	변경 후	점수 변동	비고
2017. 12. 2.	○○○급	1			60.3	52.9	-7.4	우→양
		2			63.7	62.1	-1.6	
		3			61.5	59.7	-1.8	
		4			60.9	60.3	-0.6	
		5			59.7	62.7	3	
		6			62.1	61.5	-0.6	
		7			52.9	60.9	8	양→우
		8			49.3	49.9	0.6	
	○○ ○○ ○○ ○급	1			49.9	48.7	-1.2	
		2			65.8	65.2	-0.6	
		3			48.7	60.9	12.2	양→우
		4			35.5	37.3	1.8	
		5			60.3	56.7	-3.6	
		6			59.1	61.5	2.4	
		7			42.7	47.5	4.8	
		8			52.3	53.1	0.8	
		9			45.1	57.9	12.8	양→우
		10			62.1	63.3	1.2	
		11			54.9	56.1	1.2	
		12			61.5	58.5	-3	
		13			69.4	70	0.6	2018.12.14. 승진
		14			67	67.6	0.6	
		15			43.3	42.7	-0.6	
		16			45.7	43.9	-1.8	
		17			60.9	62.7	1.8	
		18			67.6	67	-0.6	
		19			65.2	59.1	-6.1	
		20			70	69.4	-0.6	
		21			62.1	61.5	-0.6	
		22			59.1	60.3	1.2	
		23			57.9	57.3	-0.6	
		24			58.5	59.1	0.6	
		25			52.9	52.3	-0.6	
		26			63.9	65.8	1.9	

변경일	직렬·직급	연번	성명	근평당시 소속부서	변경 전	변경 후	점수 변동	비고
		27			38.5	39.1	0.6	
		28			63.3	67	3.7	
		29			56.1	60.9	4.8	
		30			47.5	44.5	-3	
		31			50.5	45.7	-4.8	
		32			43.9	43.3	-0.6	
		33			48.1	51.7	3.6	
		34			62.7	63.9	1.2	
		35			53.7	54.9	1.2	
		36			57.3	48.1	-9.2	우→양
		37			42.1	40.9	-1.2	
		38			67	53.7	-13.3	수→우
		39			60.9	62.1	1.2	
		40			51.7	52.9	1.2	
		41			53.1	45.1	-8	
		42			56.7	54.9	-1.8	
		43			34.3	35.5	1.2	
		44			61.5	62.1	0.6	
		45			40.9	42.1	1.2	
		46			44.5	50.5	6	
		47			54.9	49.9	-5	
		48			33.7	34.3	0.6	
		49			37.9	38.5	0.6	
		50			39.1	33.7	-5.4	
2017. 12. 3.	○○○급	1			43.3	58.5	15.2	양→우
		2			54.3	51.1	-3.2	
		3			51.1	49.9	-1.2	2차
		4			54.9	56.1	1.2	
		5			67	63.3	-3.7	
		6			63.3	59.1	-4.2	2차 평정안 : 63.3
		7			53.1	49.3	-3.8	
		8			61.5	67.6	6.1	우→수
		9			51.1	64.6	13.5	양→수
		10			53.7	59.7	6	

변경일	직렬.직급	연번	성명	근평당시 소속부서	변경 전	변경 후	점수 변동	비고
		11			47.5	43.9	-3.6	
		12			64	58.5	-5.5	수→우
		13			57.9	50.5	-7.4	우→양
		14			57.3	48.7	-8.6	우→양
		15			43.9	40.3	-3.6	
		16			52.3	59.1	6.8	양→우
		17			59.1	63.9	4.8	2차
		18			52.9	57.3	4.4	
		19			58.5	46.9	-11.6	우→양
		20			60.3	59.7	-0.6	
		21			55.5	56.7	1.2	
		22			66.4	65.8	-0.6	
		23			57.3	52.3	-5	
		24			65.8	69.4	3.6	
		25			42.1	36.1	-6	
		26			68.2	64	-4.2	
		27			51.7	60.3	8.6	양→우
		28			69.4	66.4	-3	
		29			64.6	63.3	-1.3	
		30			59.1	51.7	-7.4	
		31			41.5	46.3	4.8	
		32			63.9	55.5	-8.4	
		33			40.3	43.3	3	
		34			67.6	70	2.4	
		35			50.5	44.5	-6	
		36			45.7	68.8	23.1	양→수
		37			63.3	62.7	-0.6	
		38			70	67	-3	
		39			62.1	60.9	-1.2	
		40			68.2	63.9	-4.3	
		41			63.3	61.5	-1.8	
		42			60.3	68.2	7.9	우→수
		43			59.7	53.7	-6	
		44			62.1	60.3	-1.8	
		45			56.7	54.3	-2.4	
		46			63.9	62.1	-1.8	

변경일	직렬·직급	연번	성명	근평당시 소속부서	변경 전	변경 후	점수 변동	비고
		47			62.7	57.3	-5.4	
		48			67.6	63.9	-3.7	
		49			63.9	59.1	-4.8	2차
		50			36.1	59.1	23	평정안 낙 양→우
		51			59.1	52.9	-6.2	우→양
		52			46.9	45.1	-1.8	
		53			37.9	34.9	-3	
		54			48.1	38.5	-9.6	
		55			59.7	54.9	-4.8	
		56			49.9	47.5	-2.4	
		57			57.9	53.1	-4.8	
		58			40.9	37.9	-3	
		59			68.8	68.2	-0.6	
		60			39.1	42.1	3	
		61			44.5	35.5	-9	
		62			60.9	62.1	1.2	
		63			58.5	57.9	-0.6	
		64			46.3	57.9	11.6	양→우
		65			45.1	41.5	-3.6	
		66			65.2	67.6	2.4	
		67			36.7	48.1	11.4	
		68			34.9	36.7	1.8	
		69			56.1	49.9	-6.2	
		70			49.9	51.1	1.2	
		71			42.7	40.9	-1.8	
		72			49.3	45.7	-3.6	
		73			38.5	39.1	0.6	
		74			37.3	39.7	2.4	
		75			39.7	42.7	3	
		76			35.5	37.3	1.8	
		77			48.1	65.2	17.1	양→수

변경일	직렬.직급	연번	성명	근평당시 소속부서	변경 전	변경 후	점수 변동	비고
	○○○급	1			51.7	58.5	6.8	양→우
		2			47.5	49.9	2.4	
		3			51.1	48.1	-3	
		4			56.7	52.9	-3.8	
		5			52.9	46.3	-6.6	
		6			46.9	49.3	2.4	
		7			60.3	59.7	-0.6	
		8			58.5	60.3	1.8	
		9			49.9	51.7	1.8	
		10			59.1	60.9	1.8	
		11			49.3	52.3	3	
		12			52.3	56.7	4.4	양→우
		13			59.7	59.1	-0.6	
		14			57.9	67	9.1	우→수
		15			48.1	47.5	-0.6	
		16			50.5	51.1	0.6	
		17			60.9	46.9	-14	우→양
		18			46.3	57.9	11.6	양→우
	○○○급	1			63.9	63.3	-0.6	3차
		2			67	67.6	0.6	2차
		3			59.7	58.5	-1.2	2차
		4			68.2	50.5	-17.7	2차 수→양
		5			62.1	59.7	-2.4	2차
		6			49.9	56.7	6.8	2차 양→우
		7			48.7	46.9	-1.8	2차
		8			46.9	48.1	1.2	
		9			46.3	45.7	-0.6	2차
		10			50.5	51.1	0.6	2차
		11			67.6	67	-0.6	2차
		12				47.5	-1.8	2차

변경일	직렬·직급	연번	성명	근평당시 소속부서	변경 전	변경 후	점수 변동	비고
		13				63.9	0.6	3차
		14				68.8	-0.6	2차
		15				46.3	-1.8	2차
		16				69.4	12.7	2차 우→수
		17				52.3	-0.6	2차
		18				48.7	1.2	2차
		19				57.9	-0.6	2차
		20				62.1	1.2	2차
		21				52.9	0.6	2차
		22				60.9	3	2차
		23				51.7	0.6	2차
		24				49.9	-1.8	2차
		25				49.3	3.6	2차
2017. 12. 4.	○○○○급	1				52.9	-0.2	2차
		2				53.1	0.2	2차
	○○○○급	1				49.3	-0.6	2차
		2				48.7	-0.6	2차
		3				49.9	1.2	

[표3] 2018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점 변경 입력 명세

변경일	직렬·직급	연번	성명	근평당시 소속부서	변경 전	변경 후	점수 변동	비고
2018. 5. 27.	○○○급	1			52.9	59.7	6.8	
		2			59.7	52.9	-6.8	
		3			60.3	58.5	-1.8	
	○○○급	1			69.4	70	0.6	
		2			59.7	63.9	4.2	
		3			59.1	56.7	-2.4	
		4			51.7	66.4	14.7	양→수
		5			66.4	59.1	-7.3	수→우
		6			56.7	51.7	-5.0	우→양
		7			47.5	45.7	-1.8	
		8			51.1	59.7	8.6	양→우
		9			48.7	48.1	-0.6	
		10			58.5	51.1	-7.4	
		11			49.9	49.3	-0.6	
		12			48.1	57.9	9.8	양→우
		13			57.9	62.7	4.8	
		14			50.5	52.3	1.8	
		15			62.7	47.5	-15.2	우→양
		16			68.2	68.8	0.6	
		17			49.3	48.7	-0.6	
		18			63.3	62.1	-1.2	
		19			67	68.2	1.2	
		20			62.1	60.3	-1.8	
		21			68.8	67.6	-1.2	
		22			45.7	46.3	0.6	
		23			70	69.4	-0.6	
		24			52.3	49.9	-2.4	
		25			63.9	60.9	-3.0	
		26			67.6	67	-0.6	
		27			60.9	50.5	-10.4	우→양
	○○○급	1			46.3	63.3	17.0	양→우
2018. 5. 28.	○○ ○○ ○○ 급	1			63.3	61.5	-1.8	
		2			63.9	63.3	-0.6	
		3			61.5	63.9	2.4	

변경일	직렬·직급	연번	성명	근평당시 소속부서	변경 전	변경 후	점수 변동	비고
	○○○급	1			60.3	52.9	-7.4	우→양
		2			59.7	52.3	-7.4	우→양
		3			62.7	60.9	-1.8	
		4			59.1	51.7	-7.4	우→양
		5			67.6	63.9	-3.7	
		6			58.5	49.3	-9.2	우→양
		7			63.9	63.3	-0.6	
		8			61.5	68.2	6.7	우→수
		9			51.1	58.5	7.4	양→우
		10			68.2	67.6	-0.6	
		11			57.9	51.1	-6.8	우→양
		12			47.5	57.9	10.4	양→우
		13			63.3	50.5	-12.8	우→양
		14			50.5	48.1	-2.4	
		15			51.7	48.7	-3.0	
		16			60.9	62.7	1.8	
		17			49.9	60.3	10.4	양→우
		18			52.9	49.9	-3.0	
		19			62.1	61.5	-0.6	
		20			52.3	62.1	9.8	양→우
		21			49.3	59.7	10.4	
	○○○급	1			57.9	36.1	-21.8	우→양
		2			52.9	53.7	0.8	
		3			68.2	62.7	-5.5	
		4			62.7	68.2	5.5	우→수
		5			45.7	57.9	12.2	양→우
		6			68.8	67.6	-1.2	
		7			53.7	52.9	-0.8	
		8			65.8	67	1.2	
		9			67.6	65.8	-1.8	
		10			55.5	54.9	-0.6	
		11			67	68.8	1.8	
		12			54.9	55.5	0.6	
		13			45.1	42.1	-3.0	
		14			42.1	45.1	3.0	
		15			36.1	45.7	9.6	

변경일	직렬·직급	연번	성명	근평당시 소속부서	변경 전	변경 후	점수 변동	비고
		16			58.5	59.1	0.6	2차
		17			59.1	58.5	-0.6	3차
	○○○급	1			48.7	59.1	10.4	양→우
		2			48.1	47.5	-0.6	
		3			57.3	48.1	-9.2	우→양
		4			50.5	57.3	6.8	양→우
		5			48.1	56.7	8.6	양→우
		6			62.7	59.7	-3.0	
		7			63.3	60.3	-3.0	
		8			60.3	63.3	3.0	
		9			59.7	62.7	3.0	
		10			56.7	50.5	-6.2	
	○○○급	1			50.5	52.3	1.8	
	○○○급	1			70	63.9	-6.1	
		2			63.9	70	6.1	
	○○○급	1			70	69.4	-0.6	2차
		2			56.7	58.5	1.8	2차
		3			58.5	57.9	-0.6	3차
		4			55.5	63.3	7.8	
		5			66.4	68.2	1.8	2차
		6			59.1	60.3	1.2	2차
		7			51.7	49.9	-1.8	2차
		8			45.7	46.3	0.6	2차
		9			59.7	57.3	-2.4	2차
		10			48.1	46.9	-1.2	2차
		11			51.1	56.7	5.6	2차 양→우
		12			61.5	62.7	1.2	
		13			49.3	52.3	3.0	2차
		14			57.9	60.9	3.0	2차
		15			62.7	63.3	0.6	2차
		16			65.8	68.8	3.0	
		17			65.2	69.4	4.2	
		18			52.3	52.9	0.6	2차
		19			47.5	50.5	3.0	2차
		20			68.8	67	-1.8	2차
		21			48.7	51.7	3.0	2차

변경일	직렬·직급	연번	성명	근평당시 소속부서	변경 전	변경 후	점수 변동	비고
		22			62.1	47.5	-14.6	2차 우→양
		23			52.9	59.7	6.8	2차
		24			68.2	70	1.8	2차
		25			60.3	61.5	1.2	2차
		26			61.5	62.1	0.6	3차
		27			57.3	57.9	0.6	2차
		28			57.9	59.1	1.2	3차
		29			63.9	65.2	1.3	2차 평정안 64.6
		30			46.3	51.1	4.8	2차
		31			69.4	68.8	-0.6	2차
		32			64.6	65.8	1.2	
		33			68.2	66.4	-1.8	
		34			64	67	3.0	
		35			69.4	63.9	-5.5	
		36			49.9	48.7	-1.2	2차
		37			60.9	62.1	1.2	2차
		38			62.1	61.5	-0.6	3차
		39			62.1	60.9	-1.2	
		40			61.5	62.1	0.6	
		41			62.1	61.5	-0.6	
		42			63.9	62.7	-1.2	
		43			67	48.1	-18.9	2차 수→양
		44			58.5	60.3	1.8	
		45			50.5	49.3	-1.2	2차
		46			67	64	-3.0	
		47			68.8	63.9	-4.9	
		48			61.5	60.9	-0.6	
	○○○ 급	1			69.4	63.9	-5.5	수→우
		2			50.5	51.1	0.6	
		3			68.8	69.4	0.6	
		4			63.9	68.8	4.9	우→수
		5			51.1	50.5	-0.6	
		6			45.1	41.5	-3.6	
	○○○ 급	1			66.4	68.2	1.8	
		2			41.5	40.9	-0.6	

변경일	직렬·직급	연번	성명	근평당시 소속부서	변경 전	변경 후	점수 변동	비고
		3			63.3	66.4	3.1	
		4			59.1	63.3	4.2	
		5			50.5	57.3	6.8	양→우
		6			56.7	51.7	-5.0	
		7			63.3	67.6	4.3	
		8			53.1	56.7	3.6	
		9			40.3	39.7	-0.6	
		10			49.3	46.3	-3.0	
		11			51.7	45.1	-6.6	
		12			49.9	46.9	-3.0	
		13			48.7	45.7	-3.0	
		14			53.7	47.5	-6.2	우→양
		15			46.9	45.7	-1.2	
		16			56.1	55.5	-0.6	
		17			57.9	56.1	-1.8	
		18			54.3	53.7	-0.6	
		19			60.3	53.1	-7.2	
		20			51.1	48.1	-3.0	
		21			44.5	42.7	-1.8	
		22			46.9	44.5	-2.4	
		23			46.3	54.3	8.0	
		24			42.7	43.3	0.6	
		25			63.3	61.5	-1.8	
		26			45.7	50.5	4.8	
		27			46.9	49.3	2.4	
		28			48.1	49.9	1.8	
		29			43.3	48.7	5.4	
		30			57.3	52.3	-5.0	
		31			67.6	59.1	-8.5	수→우
		32			60.9	59.7	-1.2	
		33			60.9	58.5	-2.4	
		34			62.7	62.1	-0.6	
		35			52.3	51.1	-1.2	
		36			40.9	40.3	-0.6	
		37			59.7	57.9	-1.8	
		38			39.7	67	27.3	양→수 평정안 65.2
	○○○○	1			70	52.3	-17.7	

변경일	직렬·직급	연번	성명	근평당시 소속부서	변경 전	변경 후	점수 변동	비고
	○급	2			52.3	50.5	-1.8	
		3			52.3	70	17.7	3차
	○○ ○○○	1			69.4	68.8	-0.6	
		2			68.8	69.4	0.6	
2018. 5. 29.	○○○급	1			48.1	49.9	1.8	
		2			47.5	51.1	3.6	
		3			51.1	47.5	-3.6	
		4			49.9	48.1	-1.8	
		5			62.7	61.5	-1.2	
		6			61.5	62.7	1.2	
		7			37.9	40.3	2.4	
		8			40.3	42.1	1.8	
		9			42.1	37.9	-4.2	
	○○○급	1			60.3	60.9	0.6	3차
		2			60.9	60.3	-0.6	3차
2018. 5. 30.	○○○급	1			58.5	57.9	-0.6	2차
		2			57.9	58.5	0.6	2차
	○○○급	1			60.3	59.7	-0.6	
		2			52.9	51.1	-1.8	
		3			59.7	60.3	0.6	
		4			51.1	52.9	1.8	

[표4] 2018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점 변경 입력 명세

변경일	직렬·직급	연번	성명	근평당시 소속부서	변경 전	변경 후	점수 변동	비고
2018. 12. 2.	○○○급	1			49.3	52.9	3.6	
		2			52.9	49.3	-3.6	
		3			63.9	62.7	-1.2	
		4			62.7	63.9	1.2	
	○○ ○○ ○○ ○급	1			55.5	37.9	-17.6	우→양
		2			44.5	36.1	-8.4	
		3			59.7	67.6	7.9	우→수
		4			60.3	67.6	7.3	우→수
		5			67.6	61.5	-6.1	수→우
		6			69.4	64	-5.4	
		7			64	63.9	-0.1	2019.8.16. 승진
		8			64.6	64	-0.6	평정안 66.4
		9			66.4	67.6	1.2	평정안 59.7 2018.12.14. 승진
		10			70	69.4	-0.6	2019.4.5. 승진
		11			67.6	68.8	1.2	2018. 12. 14. 승진
		12			43.9	54.3	10.4	양→우
		13			59.7	60.9	1.2	
		14			69.4	70	0.6	2019.8.16. 승진
		15			50.5	47.5	-3.0	
		16			68.8	64.6	-4.2	
		17			58.5	57.3	-1.2	
		18			48.7	46.3	-2.4	
		19			46.9	56.1	9.2	양→우
		20			46.9	39.7	-7.2	
		21			52.3	52.9	0.6	
		22			63.9	63.3	-0.6	
		23			60.9	59.7	-1.2	
		24			56.1	55.5	-0.6	
		25			57.9	58.5	0.6	

변경일	직렬·직급	연번	성명	근평당시 소속부서	변경 전	변경 후	점수 변동	비고
		26			37.9	42.7	4.8	
		27			57.3	57.9	0.6	
		28			62.1	69.4	7.3	우→수
		29			59.1	59.7	0.6	평정안 59.1
		30			36.7	43.9	7.2	평정안 56.7
		31			57.3	58.5	1.2	
		32			56.7	57.9	1.2	
		33			58.5	45.1	-13.4	우→양
		34			46.3	45.7	-0.6	
		35			62.1	57.3	-4.8	
		36			52.9	52.3	-0.6	
		37			47.5	50.5	3.0	
		38			57.9	60.3	2.4	
		39			61.5	62.1	0.6	
		40			63.3	62.7	-0.6	
		41			48.1	48.7	0.6	
		42			62.7	62.1	-0.6	
		43			54.3	43.3	-11.0	우→양
		44			40.3	33.1	-7.2	
		45			56.1	55.5	-0.6	
		46			51.7	42.1	-9.6	
		47			41.5	48.1	6.6	
		48			39.7	41.5	1.8	
		49			43.3	56.1	12.8	양→우
		50			42.1	51.7	9.6	
		51			45.1	56.7	11.6	양→우 평정안 43.9
		52			36.1	37.3	1.2	
		53			35.5	36.7	1.2	
		54			42.7	35.5	-7.2	
		55			37.3	40.3	3.0	
	○○○급	1			68.2	63.9	-4.3	수→우
		2			63.9	68.2	4.3	우→수
		3			52.9	52.3	-0.6	
		4			52.3	52.9	0.6	
	○○○급	1			69.4	70	0.6	

변경일	직렬·직급	연번	성명	근평당시 소속부서	변경 전	변경 후	점수 변동	비고
		2			63.9	69.4	5.5	우→수
		3			70	63.9	-6.1	수→우
	○○○급	1			52.3	55.5	3.2	
		2			52.9	48.7	-4.2	
		3			62.7	59.1	-3.6	
		4			37.9	41.5	3.6	
		5			60.3	60.9	0.6	
		6			45.7	46.9	1.2	
		7			68.2	67.6	-0.6	
		8			59.1	57.9	-1.2	
		9			68.2	68.8	0.6	
		10			54.3	53.7	-0.6	
		11			53.7	54.3	0.6	
		12			68.8	69.4	0.6	
		13			49.3	37.9	-11.4	
		14			68.8	68.2	-0.6	
		15			46.9	49.3	2.4	
		16			57.3	45.7	-11.6	우→양
		17			42.7	48.1	5.4	
		18			62.1	62.7	0.6	
		19			69.4	68.2	-1.2	
		20			62.7	61.5	-1.2	
		21			51.1	50.5	-0.6	
		22			61.5	59.1	-2.4	
		23			61.5	62.1	0.6	
		24			55.5	57.3	1.8	
		25			57.9	61.5	3.6	
		26			61.5	63.3	1.8	2차
		27			53.7	54.3	0.6	
		28			54.3	53.7	-0.6	
		29			50.5	51.1	0.6	
		30			48.7	52.3	3.6	
		31			60.9	56.7	-4.2	
		32			62.1	62.7	0.6	
		33			63.3	62.1	-1.2	

변경일	직렬·직급	연번	성명	근평당시 소속부서	변경 전	변경 후	점수 변동	비고
		34			49.9	52.9	3.0	
		35			45.7	49.9	4.2	
		36			56.7	60.3	3.6	
		37			41.5	46.9	5.4	
		38			59.1	63.3	4.2	
		39			63.3	61.5	-1.8	
		40			70	69.4	-0.6	
		41			48.1	36.1	-12.0	
		42			36.1	42.7	6.6	
		43			48.7	56.1	7.4	
	○○○급	1			46.9	48.1	1.2	
		2			63.3	61.5	-1.8	
		3			63.9	62.7	-1.2	
		4			67	63.9	-3.1	수→우
		5			62.1	63.9	1.8	
		6			63.9	67	3.1	2차 우→수
		7			57.9	51.1	-6.8	우→양
		8			61.5	63.3	1.8	
		9			62.7	62.1	-0.6	
		10			51.1	57.9	6.8	양→우
		11			49.3	46.9	-2.4	
		12			48.1	49.3	1.2	
	○○○○ 급	1			62.7	69.4	6.7	
		2			69.4	62.7	-6.7	
	○○○급	1			59.7	62.1	2.4	
		2			61.5	64.6	3.1	
		3			54.9	57.3	2.4	
		4			60.3	67	6.7	우→수
		5			64.6	59.7	-4.9	수→우
		6			57.9	63.9	6.0	평정안 62.7
		7			65.2	51.7	-13.5	수→양
		8			53.1	56.1	3.0	
		9			69.4	70	0.6	

변경일	직렬·직급	연번	성명	근평당시 소속부서	변경 전	변경 후	점수 변동	비고
		10			57.9	66.4	8.5	우→수
		11			57.3	63.9	6.6	
		12			68.2	53.1	-15.1	평정안 60.9
		13			58.5	61.5	3.0	
		14			63.3	65.8	2.5	
		15			57.3	58.5	1.2	
		16			60.3	63.3	3.0	
		17			61.5	68.2	6.7	우→수
		18			56.1	54.9	-1.2	
		19			62.7	57.9	-4.8	
		20			57.3	60.3	3.0	
		21			51.7	53.1	1.4	
		22			59.7	65.2	5.5	우→수
		23			62.1	67.6	5.5	우→수

[표5] 2019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점 변경 입력 명세

변경일	직렬·직급	연번	성명	근평당시 소속부서	변경 전	변경 후	점수 변동	비고
2019. 6. 3.	○○○급	1			52.3	49.9	-2.4	
		2			49.9	48.7	-1.2	2차
		3			48.7	49.9	1.2	
		4			49.9	52.3	2.4	
		5			52.3	52.9	0.6	2차
		6			70	63.9	-6.1	수→우
		7			63.9	69.4	5.5	우→수
		8			69.4	70	0.6	2020.1.1. 승진
		9			59.7	51.1	-8.6	우→양
		10			52.9	59.7	6.8	양→우
		11			51.1	52.3	1.2	
	○○○급	1			62.1	69.4	7.3	우→수
		2			69.4	62.1	-7.3	수→우
	○○○급	1			63.3	63.9	0.6	
		2			52.3	51.7	-0.6	
	○○○급	1			60.9	52.3	-8.6	
		2			52.3	60.9	8.6	
	○○○급	1			70	63.9	-6.1	수→우
		2			63.9	70	6.1	우→수
	○○○급	1			66.4	62.7	-3.7	수→우
		2			62.7	66.4	3.7	우→수
	○○○ ○○○	1			70	68.8	-1.2	
2				68.8	70	1.2		
2019 .6. 4.	○○○ ○○○ ○○○급	1			61.5	60.9	-0.6	
		2			66.4	65.8	-0.6	
		3			42.1	41.5	-0.6	
		4			70	69.4	-0.6	2019.8.16. 승진
		5			52.3	54.3	2.0	
		6			54.3	53.7	-0.6	2차
		7			62.1	59.7	-2.4	
		8			62.1	61.5	-0.6	
		9			60.3	60.9	0.6	2020.2.14. 승진

변경일	직렬·직급	연번	성명	근평당시 소속부서	변경 전	변경 후	점수 변동	비고
		10			64	63.9	-0.1	
		11			60.9	60.3	-0.6	
		12			59.1	58.5	-0.6	
		13			67.6	67	-0.6	
		14			53.1	52.3	-0.8	
		15			69.4	70	0.6	2020.2.14. 승진
		16			61.5	63.3	1.8	
		17			59.1	58.5	-0.6	
		18			65.8	65.2	-0.6	
		19			67	66.4	-0.6	2020.2.14. 승진
		20			33.7	68.8	35.1	양→수
		21			68.8	33.7	-35.1	수→양
		22			64.6	70	5.4	
		23			58.5	59.1	0.6	
		24			60.9	62.1	1.2	
		25			62.1	62.7	0.6	
		26			56.1	59.1	3.0	
		27			53.7	54.3	0.6	
		28			65.2	63.9	-1.3	
		29			56.7	56.1	-0.6	
		30			59.7	62.1	2.4	
		31			70	67.6	-2.4	
		32			63.9	64	0.1	
		33			62.7	61.5	-1.2	
		34			54.3	53.1	-1.2	
		35			41.5	42.1	0.6	
		36			63.3	62.7	-0.6	
		37			62.7	62.1	-0.6	
		38			68.8	33.7	-35.1	수→양
		39			33.7	68.8	35.1	양→수
		40			58.5	56.1	-2.4	
		41			63.9	64.6	0.7	양→수
	○○○급	1			64.6	64	-0.6	
		2			56.1	56.7	0.6	
		3			63.9	64.6	0.7	

변경일	직렬·직급	연번	성명	근평당시 소속부서	변경 전	변경 후	점수 변동	비고
	○○○급	1			51.1	51.7	0.6	
		2			51.7	51.1	-0.6	
	○○○급	1			52.9	52.3	-0.6	
	○○○급	1			52.3	48.7	-3.6	
		2			67.6	68.8	1.2	
		3			68.8	68.2	-0.6	2차
		4			68.8	67	-1.8	
		5			50.5	58.5	8.0	양→우
		6			48.7	49.3	0.6	
		7			68.2	68.8	0.6	
		8			67	67.6	0.6	
		9			58.5	52.3	-6.2	우→양
		10			49.3	50.5	1.2	
		11			57.9	45.1	-12.8	우→양
		12			56.7	57.9	1.2	
		13			55.1	55.5	0.4	
		14			45.1	56.7	11.6	양→우
	○○○급	1			63.3	63.9	0.6	
		2			70	63.3	-6.7	수→우
		3			63.9	70	6.1	우→수
2019 .6. 5.	○○○○급	1			53.7	53.1	-0.6	3차
		2			52.3	52.9	0.6	2차
		3			53.1	53.7	0.6	2차
		4			52.9	52.3	-0.6	
	○○○급	1			57.3	58.5	1.2	
		2			56.7	58.5	1.8	2차
		3			59.1	56.7	-2.4	
		4			60.9	59.7	-1.2	
		5			58.5	57.3	-1.2	
		6			59.7	60.9	1.2	

[표6] 2019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점 변경 입력 명세

변경일	직렬·직급	연번	성명	근평당시 소속부서	변경 전	변경 후	점수 변동	비고
2019. 11. 9.	○○○○○급	1			33.1	50.5	17.4	
		2			43.3	34.3	-9.0	
		3			40.3	51.7	11.4	
		4			63.3	64	0.7	
		5			68.8	45.7	-23.1	
		6			42.7	46.3	3.6	
		7			60.3	62.7	2.4	
		8			63.3	62.1	-1.2	
		9			59.1	52.3	-6.8	
		10			62.1	60.9	-1.2	
		11			65.2	63.9	-1.3	
		12			59.7	68.8	9.1	
		13			68.2	44.5	-23.7	
		14			40.9	48.1	7.2	
		15			62.7	60.9	-1.8	
		16			69.4	70	0.6	2020.2.14. 승진
		17			60.9	58.5	-2.4	
		18			57.3	58.5	1.2	
		19			57.9	48.7	-9.2	
		20			68.2	67.6	-0.6	
		21			39.1	49.3	10.2	
		22			45.7	41.5	-4.2	
		23			63.9	63.3	-0.6	
		24			67	62.7	-4.3	
		25			56.7	59.1	2.4	
		26			65.8	64.6	-1.2	
		27			69.4	70	0.6	2020.2.14. 승진
		28			48.7	56.7	8.0	
		29			62.1	60.3	-1.8	
		30			61.5	59.7	-1.8	
		31			67	61.5	-5.5	
		32			56.1	55.5	-0.6	
		33			70	68.8	-1.2	
		34			61.5	59.7	-1.8	

변경일	직렬·직급	연번	성명	근평당시 소속부서	변경 전	변경 후	점수 변동	비고
		35			36.7	40.3	3.6	
		36			62.7	62.1	-0.6	
		37			41.5	57.3	15.8	
		38			42.1	52.9	10.8	
		39			66.4	65.8	-0.6	
		40			67.6	60.3	-7.3	
		41			55.5	53.7	-1.8	
		42			51.7	57.3	5.6	
		43			37.3	35.5	-1.8	
		44			68.8	67	-1.8	
		45			58.5	42.7	-15.8	
		46			57.9	56.1	-1.8	
		47			46.9	51.1	4.2	
		48			49.3	33.7	-15.6	
		49			70	65.2	-4.8	
		50			52.9	68.2	15.3	
		51			59.1	56.1	-3.0	
		52			64	63.3	-0.7	
		53			60.9	59.1	-1.8	
		54			51.1	43.9	-7.2	
		55			59.7	57.9	-1.8	
		56			34.3	33.1	-1.2	
		57			48.1	53.1	5.0	
		58			58.5	49.9	-8.6	
		59			63.9	61.5	-2.4	
		60			45.1	39.1	-6.0	
		61			52.3	43.3	-9.0	
		62			56.7	69.4	12.7	
		63			54.3	39.7	-14.6	
		64			50.5	54.3	3.8	
		65			33.7	36.7	3.0	
		66			53.7	46.9	-6.8	
		67			43.9	45.1	1.2	
		68			44.5	38.5	-6.0	
		69			60.3	69.4	9.1	
		70			46.3	68.2	21.9	

변경일	직렬·직급	연번	성명	근평당시 소속부서	변경 전	변경 후	점수 변동	비고
		71			37.9	56.7	18.8	
		72			39.7	37.3	-2.4	
		73			47.5	67	19.5	
		74			35.5	36.1	0.6	
		75			67.6	66.4	-1.2	
		76			36.1	37.9	1.8	
	○○○급	1			68.8	67.6	-1.2	
		2			57.3	54.9	-2.4	
		3			60.9	68.8	7.9	
		4			40.3	39.7	-0.6	
		5			55.5	51.1	-4.4	
		6			68.2	69.4	1.2	
		7			63.3	60.3	-3.0	
		8			57.3	55.5	-1.8	
		9			69.4	70	0.6	2020.1.1. 승진
		10			57.9	58.5	0.6	
		11			51.1	49.9	-1.2	
		12			45.7	42.7	-3.0	
		13			51.7	67	15.3	
		14			59.7	57.3	-2.4	
		15			56.1	50.5	-5.6	
		16			59.1	65.2	6.1	
		17			56.7	57.3	0.6	
		18			63.3	59.1	-4.2	
		19			59.1	58.5	-0.6	
		20			63.9	61.5	-2.4	
		21			48.1	47.5	-0.6	
		22			35.5	37.3	1.8	
		23			53.1	56.1	3.0	
		24			62.1	61.5	-0.6	
		25			40.9	45.7	4.8	
		26			62.7	62.1	-0.6	
		27			49.3	60.3	11.0	
		28			52.9	53.1	0.2	
		29			65.2	59.7	-5.5	

변경일	직렬·직급	연번	성명	근평당시 소속부서	변경 전	변경 후	점수 변동	비고
		30			65.8	63.9	-1.9	
		31			60.3	68.8	8.5	
		32			49.9	52.3	2.4	
		33			58.5	63.9	5.4	
		34			61.5	67	5.5	
		35			41.5	40.3	-1.2	
		36			59.7	57.9	-1.8	
		37			64	65.8	1.8	
		38			36.7	54.3	17.6	
		39			33.7	34.3	0.6	
		40			58.5	56.7	-1.8	
		41			50.5	59.7	9.2	
		42			55.5	53.7	-1.8	
		43			68.8	68.2	-0.6	
		44			68.2	37.9	-30.3	
		45			47.5	46.9	-0.6	
		46			44.5	43.9	-0.6	
		47			54.9	48.7	-6.2	
		48			42.1	41.5	-0.6	
		49			62.1	69.4	7.3	
		50			60.3	60.9	0.6	
		51			36.1	49.3	13.2	
		52			53.7	57.9	4.2	
		53			43.9	40.9	-3.0	
		54			63.9	62.7	-1.2	
		55			48.7	48.1	-0.6	
		56			70	67.6	-2.4	
		57			57.9	56.7	-1.2	
		58			34.3	33.1	-1.2	
		59			61.5	62.1	0.6	
		60			37.3	38.5	1.2	
		61			67.6	68.2	0.6	
		62			67	42.1	-24.9	
		63			69.4	63.3	-6.1	
		64			37.9	34.9	-3.0	
		65			46.3	36.7	-9.6	

변경일	직렬·직급	연번	성명	근평당시 소속부서	변경 전	변경 후	점수 변동	비고
		66			52.3	51.7	-0.6	
		67			39.7	39.1	-0.6	
		68			45.1	44.5	-0.6	
		69			33.1	33.7	0.6	
		70			67	63.3	-3.7	
		71			54.3	36.1	-18.2	
		72			42.7	46.3	3.6	
		73			39.1	52.9	13.8	
		74			67.6	64	-3.6	
		75			46.9	59.1	12.2	
		76			34.9	35.5	0.6	
		77			38.5	45.1	6.6	
		78			56.7	55.5	-1.2	
2019. 11. 18.	○○○급	1			60.3	68.8	8.5	우→수
		2			68.8	60.3	-8.5	수→우
		3			63.3	61.5	-1.8	평정안 63.3
	○○○○급	1			50.5	40.3	-10.2	
		2			40.3	37.9	-2.4	
		3			51.7	51.1	-0.6	
		4			64	64.6	0.6	
		5			45.7	41.5	-4.2	
		6			62.7	63.3	0.6	
		7			52.3	56.1	3.8	
		8			60.9	57.9	-3.0	
		9			63.9	59.1	-4.8	
		10			44.5	42.1	-2.4	
		11			48.1	48.7	0.6	
		12			48.7	49.3	0.6	
		13			60.9	59.1	-1.8	
		14			58.5	57.3	-1.2	
		15			48.7	35.5	-13.2	
		16			67.6	67	-0.6	
		17			49.3	37.3	-12.0	
		18			37.3	47.5	10.2	
		19			41.5	39.7	-1.8	
		20			63.3	62.7	-0.6	

변경일	직렬·직급	연번	성명	근평당시 소속부서	변경 전	변경 후	점수 변동	비고
		21			62.7	62.1	-0.6	
		22			59.1	56.7	-2.4	
		23			64.6	63.9	-0.7	
		24			70	64.6	-5.4	2020.2.14. 승진
		25			64.6	64	-0.6	
		26			56.7	57.3	0.6	
		27			57.3	45.7	-11.6	우→양
		28			57.3	45.1	-12.2	우→양
		29			60.3	63.9	3.6	
		30			59.7	56.7	-3.0	
		31			61.5	63.3	1.8	
		32			63.3	61.5	-1.8	
		33			56.1	53.1	-3.0	
		34			53.1	52.9	-0.2	
		35			55.5	51.7	-3.8	
		36			68.8	68.2	-0.6	
		37			59.7	70	10.3	우→수 2020.2.14. 승진
		38			40.3	40.9	0.6	
		39			40.9	48.1	7.2	
		40			64.6	65.2	0.6	
		41			62.1	61.5	-0.6	
		42			57.3	54.3	-3.0	
		43			54.3	54.9	0.6	
		44			52.9	52.3	-0.6	
		45			65.8	66.4	0.6	
		46			60.3	59.1	-1.2	
		47			59.1	60.3	1.2	
		48			53.7	54.9	1.2	
		49			54.9	54.3	-0.6	
		50			57.3	55.5	-1.8	
		51			35.5	36.7	1.2	
		52			42.7	49.3	6.6	
		53			49.3	46.9	-2.4	
		54			51.1	52.9	1.8	
		55			52.9	53.1	0.2	

변경일	직렬·직급	연번	성명	근평당시 소속부서	변경 전	변경 후	점수 변동	비고
		56			33.7	36.1	2.4	
		57			65.2	65.8	0.6	
		58			56.1	55.5	-0.6	
		59			63.3	62.1	-1.2	
		60			62.1	60.3	-1.8	
		61			59.1	57.9	-1.2	
		62			43.9	37.9	-6.0	
		63			37.9	40.3	2.4	
		64			57.9	60.9	3.0	
		65			33.1	36.1	3.0	
		66			36.1	37.3	1.2	
		67			53.1	53.7	0.6	
		68			49.9	39.1	-10.8	2차
		69			39.1	42.7	3.6	3차
		70			61.5	60.9	-0.6	
		71			39.1	43.9	4.8	
		72			43.9	39.1	-4.8	
		73			43.3	38.5	-4.8	
		74			38.5	33.7	-4.8	
		75			54.9	67.6	12.7	2차
		76			67.6	44.5	-23.1	3차 우→양
		77			53.1	61.5	8.4	
		78			61.5	62.7	1.2	
		79			69.4	68.8	-0.6	
		80			39.7	40.3	0.6	
		81			40.3	49.9	9.6	
		82			54.3	57.3	3.0	2차
		83			57.3	63.3	6.0	3차
		84			36.7	59.7	23.0	양→우
		85			46.9	43.9	-3.0	
		86			49.9	67.6	17.7	양→수
		87			45.1	43.3	-1.8	
		88			38.5	42.7	4.2	
		89			42.7	38.5	-4.2	
		90			68.2	59.7	-8.5	수→우
		91			56.7	50.5	-6.2	

변경일	직렬·직급	연번	성명	근평당시 소속부서	변경 전	변경 후	점수 변동	비고
		92			50.5	40.9	-9.6	
		93			37.3	49.9	12.6	
		94			49.9	50.5	0.6	
		95			67	67.6	0.6	
		96			36.1	45.7	9.6	2차
		97			45.7	57.3	11.6	3차 양→우
		98			66.4	69.4	3.0	
		99			37.9	58.5	20.6	양→우
	○○○급	1			52.3	57.9	5.6	
		2			68.8	67.6	-1.2	
		3			67.6	68.8	1.2	
		4			60.9	60.3	-0.6	
		5			49.9	58.5	8.6	양→우
		6			60.3	59.7	-0.6	
		7			51.1	52.3	1.2	
		8			59.7	51.1	-8.6	우→양
		9			51.1	49.9	-1.2	
		10			59.1	51.1	-8.0	우→양
		11			58.5	60.9	2.4	
		12			57.9	58.5	0.6	
		13			58.5	59.1	0.6	
	○○○○ ○○○급	1			63.96	63.9	-0.1	
	○○○급	1			67.6	64	-3.6	
		2			54.9	54.3	-0.6	
		3			39.7	37.9	-1.8	
		4			38.5	47.5	9.0	
		5			47.5	48.7	1.2	
		6			55.5	56.1	0.6	
		7			49.9	51.7	1.8	
		8			42.7	42.1	-0.6	
		9			57.3	57.9	0.6	
		10			37.3	39.1	1.8	
		11			56.1	56.7	0.6	
		12			45.7	38.5	-7.2	
		13			59.7	53.7	-6.0	

변경일	직렬·직급	연번	성명	근평당시 소속부서	변경 전	변경 후	점수 변동	비고
		14			63.9	63.3	-0.6	
		15			52.3	52.9	0.6	
		16			54.3	59.1	4.8	
		17			34.3	39.7	5.4	
		18			56.7	57.3	0.6	
		19			59.7	43.3	-16.4	우→양
		20			53.7	56.1	2.4	
		21			68.2	68.8	0.6	평정안 68.2
		22			37.9	34.3	-3.6	
		23			43.3	42.7	-0.6	
		24			49.3	55.5	6.2	
		25			57.9	54.9	-3.0	
		26			56.1	49.3	-6.8	
		27			38.5	45.7	7.2	
		28			42.1	59.7	17.6	양→우
		29			51.7	49.9	-1.8	
		30			39.1	37.3	-1.8	
		31			63.3	63.9	0.6	
		32			52.9	52.3	-0.6	
		33			64	67.6	3.6	
		34			59.1	59.7	0.6	
	○○○급	1			59.1	52.3	-6.8	
		2			49.9	48.7	-1.2	
		3			47.5	48.1	0.6	
		4			62.1	61.5	-0.6	
		5			60.3	63.9	3.6	
		6			58.5	62.1	3.6	
		7			51.1	46.9	-4.2	평정안 47.5
		8			48.1	59.1	11.0	
		9			63.3	52.9	-10.4	우→양
		10			52.3	49.9	-2.4	
		11			52.9	60.9	8.0	양→우
		12			63.9	63.3	-0.6	
		13			59.7	51.1	-8.6	우→양
		14			60.9	60.3	-0.6	
		15			48.7	47.5	-1.2	46.9

변경일	직렬·직급	연번	성명	근평당시 소속부서	변경 전	변경 후	점수 변동	비고
		16			50.5	49.3	-1.2	
		17			46.9	57.9	11.0	양→우
		18			61.5	59.7	-1.8	
		19			49.3	58.5	9.2	양→우
	○○○급	1			62.1	63.9	1.8	
		2			63.3	62.7	-0.6	
		3			62.7	62.1	-0.6	
		4			63.9	63.3	-0.6	
	○○○급	1			63.9	63.3	-0.6	
		2			52.9	70	17.1	양→수
		3			70	63.9	-6.1	수→우
		4			63.3	52.9	-10.4	우→양
	○○ ○○○	1			60.3	60.9	0.6	
		2			61.5	62.1	0.6	
		3			62.1	62.7	0.6	
		4			60.9	61.5	0.6	
		5			62.7	52.9	-9.8	우→양
		6			52.9	60.3	7.4	
		7			59.9	49.9	-10.0	우→양
2019. 11. 19.	○○ ○○○ ○○급	1			37.9	35.5	-2.4	4차
		2			41.5	42.1	0.6	3차
		3			63.3	62.7	-0.6	3차
		4			42.1	43.3	1.2	3차
		5			58.5	57.3	-1.2	2차
		6			35.5	42.7	7.2	3차
		7			47.5	37.9	-9.6	4차
		8			39.7	40.3	0.6	3차
		9			62.7	63.3	0.6	3차
		10			56.7	56.1	-0.6	3차
		11			51.7	53.1	1.4	3차
		12			54.9	52.3	-2.6	4차
		13			52.3	51.7	-0.6	3차
		14			60.3	60.9	0.6	4차
		15			56.1	56.7	0.6	2차
		16			53.1	54.9	1.8	4차

변경일	직렬·직급	연번	성명	근평당시 소속부서	변경 전	변경 후	점수 변동	비고
		17			60.3	62.7	2.4	4차
		18			40.3	41.5	1.2	4차
		19			60.9	60.3	-0.6	3차
		20			42.7	46.3	3.6	4차
		21			62.7	63.3	0.6	3차
		22			63.3	60.3	-3.0	4차
		23			43.3	47.5	4.2	3차
		24			40.9	39.7	-1.2	4차
		25			57.3	58.5	1.2	4차

출처) 산청군 인사행정정보시스템 내 근무성적평정 변경이력 자료 재구성

[표7] 승진후보자 명부 효력 발생 이후 평정점 변경 입력에 따른 순위 변경 내역

구분	변경일	직렬 직급	성명	근무성적 평정점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순위 변동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2017년 하반기	12. 2.	○○ ○○급 (3명)		52.9	60.9	17	15	-2	
				60.3	52.9	7	8	1	
				60.9	60.3	5	6	1	
		○○ ○○○○급 (28명)		63.3	67	12	11	-1	
				42.7	47.5	51	48	-3	
				34.3	35.5	77	75	-2	
				54.9	56.1	47	45	-2	
				52.9	52.3	31	32	1	
				56.1	60.9	29	26	-3	
				44.5	50.5	67	66	-1	
				52.3	53.1	40	39	-1	
				61.5	58.5	26	27	1	
				48.1	51.7	68	67	-1	
				53.1	45.1	41	42	1	
				48.7	60.9	77	74	-3	
				67	67.6	5	4	-1	2018.12.14. 승진
				61.5	62.1	23	22	-1	
				57.3	48.1	59	63	4	
				49.9	48.7	59	62	3	
				45.1	57.9	53	51	-2	
				63.9	65.8	19	18	-1	
				35.5	37.3	62	58	-4	
				50.5	45.7	49	52	3	
				62.1	61.5	22	23	1	
				65.2	59.1	66	68	2	
				62.7	63.9	17	16	-1	
				38.5	39.1	83	82	-1	
				42.1	40.9	75	76	1	
				57.9	57.3	38	40	2	
				56.7	54.9	75	77	2	
				47.5	44.5	42	46	4	
	12. 3.	○○ ○○급		63.9	62.1	22	24	2	

구분	변경일	직렬 직급	성명	근무성적 평정점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순위 변동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51.1	64.6	58	55	-3	
				60.3	59.7	28	30	2	
				64.6	63.3	13	15	2	
				59.7	54.9	18	19	1	
				51.7	60.3	71	69	-2	
				67.6	70	2	1	-1	2018. 7. 6. 승진
				63.3	62.7	9	10	1	
				57.3	52.3	37	43	6	
				48.1	38.5	55	57	2	
				59.7	53.7	25	32	7	
				59.1	51.7	25	30	5	
				68.2	64	12	14	2	
				43.3	58.5	46	39	-7	2018. 2. 21. 근속 승진
				56.1	49.9	37	38	1	
				49.9	51.1	38	37	-1	
				70	67	5	7	2	2018.10.15. 승진
		(56명)		50.5	44.5	17	20	3	
				62.7	57.3	25	27	2	
				41.5	46.3	64	63	-1	
				58.5	46.9	37	40	3	
				52.3	59.1	72	68	-4	
				59.1	63.9	68	67	-1	
				42.1	36.1	52	53	1	
				45.7	68.8	79	67	-12	
				36.7	48.1	80	78	-2	
				64	58.5	14	17	3	
				56.7	54.3	29	33	4	
				52.9	57.3	44	43	-1	
				63.3	61.5	22	23	1	
				57.3	48.7	48	50	2	
				48.1	65.2	64	56	-8	
				37.9	34.9	38	39	1	
				47.5	43.9	70	71	1	
				44.5	35.5	48	51	3	

구분	변경일	직렬 직급	성명	근무성적 평정점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순위 변동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57.9	50.5	37	41	4	
				36.1	59.1	83	80	-3	
				66.4	65.8	9	11	2	
				45.1	41.5	73	74	1	
				49.9	47.5	61	64	3	
				60.3	68.2	12	5	-7	2018.10.15. 승진
				49.3	45.7	61	62	1	
				69.4	66.4	1	3	2	2018. 1. 1. 승진
				39.7	42.7	71	70	-1	
				63.9	55.5	14	18	4	
				63.3	59.1	18	22	4	
				68.2	63.9	25	26	1	
				60.9	62.1	7	6	-1	2019. 1. 7. 승진
				46.3	57.9	66	61	-5	
				59.1	52.9	25	30	5	
				67.6	63.9	8	13	5	
				63.9	59.1	13	16	3	
				57.9	53.1	25	27	2	
				54.3	51.1	38	40	2	
				51.1	49.9	40	42	2	
				53.1	49.3	26	31	5	
		○○○○ (8명)		46.3	57.9	30	29	-1	
				58.5	60.3	16	13	-3	
				49.9	51.7	25	24	-1	
				60.3	59.7	14	15	1	
				60.9	46.9	33	34	1	
				56.7	52.9	18	19	1	
				52.3	56.7	21	18	-3	
				49.3	52.3	23	20	-3	
		○○○○ (11명)		56.7	69.4	22	21	-1	
				49.3	47.5	16	17	1	
				46.9	48.1	20	19	-1	
				63.3	63.9	2	1	-1	2018. 1. 1. 승진

구분	변경일	직렬 직급	성명	근무성적 평정점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순위 변동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평정점 3차 변경
				63.9	63.3	1	2	1	
				49.9	56.7	29	27	-2	
				60.9	62.1	13	12	-1	
				46.3	45.7	12	13	1	
				67.6	67	7	8	1	
				62.1	59.7	9	11	2	
				68.2	50.5	25	29	4	
	12. 4.	○○ ○○급 (1명)		48.7	49.9	22	20	-2	
2018년 하반기	12. 2.	○○ ○○급 (3명)		52.9	49.3	2	4	2	
				62.7	63.9	4	2	-2	
				63.9	62.7	9	10	1	
		○○○○ ○○○○급 (28명)		55.5	37.9	15	31	16	
				59.7	67.6	56	50	-6	
				60.3	67.6	52	42	-10	
				62.1	69.4	34	28	-6	
				48.7	46.3	42	45	3	
				67.6	61.5	33	35	2	
				48.1	48.7	50	49	-1	
				56.1	55.5	29	30	1	
				46.9	56.1	73	69	-4	
				58.5	57.3	28	29	1	
				52.9	48.7	38	44	6	
				44.5	36.1	40	45	5	
				54.3	43.3	39	47	8	
				68.8	64.6	7	8	1	2020.2.14. 승진
				39.7	41.5	77	75	-2	
				67.6	68.8	3	1	-2	2018.12.14. 승진
				50.5	47.5	43	48	5	
				64.6	64	24	26	2	
				58.5	45.1	37	41	4	
				40.3	33.1	48	54	6	
				57.9	60.3	12	11	-1	
				62.7	62.1	22	23	1	

구분	변경일	직렬 직급	성명	근무성적 평정점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순위 변동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63.3	62.7	9	10	1	
				52.3	52.9	54	53	-1	
				60.9	59.7	24	25	1	
				51.7	42.1	48	55	7	
				56.7	57.9	47	43	-4	
				47.5	50.5	60	59	-1	
		○○ ○○급 (1명)		52.9	52.3	15	16	1	
		○○ ○○급 (1명)		63.9	69.4	2	1	-1	
		○○ ○○급 (24명)		61.5	62.1	17	15	-2	
				59.1	57.9	47	49	2	
				57.3	45.7	64	66	2	
				49.3	37.9	42	50	8	
				48.7	52.3	53	52	-1	
				62.7	61.5	22	23	1	
				59.1	63.3	30	29	-1	
				63.3	61.5	29	30	1	
				55.5	57.3	24	22	-2	
				46.9	49.3	45	42	-3	
				68.2	68.8	36	35	-1	
				63.3	62.1	6	7	1	
				42.7	48.1	63	62	-1	
				61.5	59.1	22	25	3	
				45.7	49.9	56	55	-1	
				57.9	61.5	71	70	-1	
				49.9	52.9	49	48	-1	
				48.1	36.1	31	36	5	
				48.7	56.1	68	67	-1	
				56.7	60.3	45	43	-2	
				51.1	50.5	40	41	1	
				53.7	54.3	29	28	-1	
				54.3	53.7	28	29	1	
				52.3	55.5	35	32	-3	
		○○ ○○급		63.3	61.5	7	8	1	

구분	변경일	직렬 직급	성명	근무성적 평정점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순위 변동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5명)		49.3	46.9	21	22	1	
				61.5	63.3	8	7	-1	
				51.1	57.9	22	20	-2	
				57.9	51.1	16	18	2	
		○○○○급 (1명)		62.7	69.4	4	2	-2	2019. 7. 1. 승진
		○○○○급 (15명)		61.5	68.2	33	26	-7	
				65.2	51.7	11	15	4	2019. 7. 1. 승진
				57.9	63.9	10	9	-1	2019. 1. 7. 승진
				64.6	59.7	12	13	1	2019. 1. 7. 승진
				57.3	63.9	14	11	-3	
				59.7	65.2	33	32	-1	
				69.4	70	8	7	-1	2019. 1. 7. 승진
				63.3	65.8	8	5	-3	2019. 1. 7. 승진
				60.3	63.3	9	6	-3	2019. 1. 7. 승진
				58.5	61.5	9	8	-1	2019. 1. 7. 승진
				68.2	53.1	11	17	6	2019. 7. 1. 승진
				56.1	54.9	36	37	1	
				61.5	64.6	7	4	-3	2019. 1. 7. 승진
				57.9	66.4	34	29	-5	
				62.1	67.6	33	28	-5	
2019년 상반기	6. 3.	○○○○급 (4명)		49.9	52.3	4	3	-1	
				59.7	51.1	3	4	1	
				70	63.9	4	5	1	
				52.9	59.7	13	12	-1	
		○○○○급 (1명)		62.1	69.4	3	2	-1	
		○○○○급 (1명)		52.3	51.7	4	5	1	
		○○○○급 (1명)		52.3	60.9	12	11	-1	
		○○○○급 (2명)		70	63.9	2	3	1	

구분	변경일	직렬 직급	성명	근무성적 평정점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순위 변동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63.9	70	3	2	-1	
		○○ ○○급 (1명)		62.7	66.4	3	2	-1	2019. 7. 1. 승진
	6. 4.	○○ ○○○○급 (9명)		64.6	70	6	5	-1	
				62.1	61.5	13	14	1	
				58.5	56.1	77	78	1	
				54.3	53.7	33	32	-1	
				58.5	59.1	18	17	-1	
				62.7	61.5	15	16	1	
				65.8	65.2	8	9	1	
				62.1	62.7	38	37	-1	
				65.2	63.9	7	8	1	
		○○ ○○급 (2명)		56.1	56.7	40	39	-1	
				63.9	64.6	9	8	-1	
		○○ ○○급 (2명)		67.6	68.8	12	11	-1	
				67	67.6	9	8	-1	
	6. 5.	○○ ○○급 (3명)		60.9	59.7	11	12	1	
				56.7	58.5	39	38	-1	
				57.3	58.5	21	20	-1	

출처) 산청군 제출자료 재구성

[표8] 평정단위별 평정서열 부담 변경 내역

구분	직렬·직급	평정단위	성명	부서 서열 순위	근무성적평정 결과		비고
					최종서열 순위	평정점	
2017년 하반기	○○ ○○ ○○급	○○과		5	65	45.7	
				6	64	46.3	
		○○ ○○과		4	66	45.1	
				5	52	53.1	
		○○ ○○과		2	54	52.3	
				3	38	57.9	
		○○면		1	43	56.7	
				2	61	48.1	
				3	41	57.3	
		○○면		1	59	49.3	
				2	29	60.9	
		○○○면		1	69	43.3	
				2	70	42.7	
				3	62	47.5	
	○○○급	○○ ○○○		2	23	62.1	
				3	28	60.9	
				4	7	68.2	
		○○ ○○과		6	-	59.1 (전산입력 점수)	근무성적 평정안 기재 누락, 동일평정점(59.1) 인원 수 : 3명
		○○과		2	54	49.3	
				3	39	57.3	
		○○과		2	33	59.1	
				3	19	63.3	평정안 중복 기재
					34	59.1 (전산입력 점수)	
2018년 상반기	○○○급	○○과		1	2	63.9	
				2	1	70	
2018년 하반기	○○○급	○○면		1	56	46.9	
				2	52	49.3	

구분	직렬·직급	평정 단위	성명	부서 서열 순위	근무성적평정 결과		비고
					최종서열 순위	평정점	
2019년 상반기	○○ ○○ ○○급	○○ ○○과		1	9	67.6	
				2	3	69.4	2019.8.16. 승진
				3	53	52.9	
				4	46	55.5	
		○○과		3	52	53.1	
				4	40	57.3	
				5	44	56.1	
	○○○○급	○○ ○○과		4	9	51.7	
				5	-	51.7 (전산입력 점수)	근무성적 평정안 기재 누락
				6	7	52.9	
		○○면	1		6	62.1 (전산입력 점수)	평정안 중복 기재
					8	52.3	
	○○○○급	○○ ○○과		4	33	59.1	전산입력점수 60.9
				5	31	59.7	전산입력점수 60.9
		○○ ○○과		1	51	52.3	
				2	47	54.3	
		○○ ○○과		1	39	57.3	전산입력점수 58.5
				2	36	58.5	
	○○○○급	○○ ○○과		2	5	52.3	
				3	3	63.3	
				4	4	52.9	전산입력점수 52.3
	○○○○○ ○급	○○읍		1	11	52.9	
				2	10	60.3	
	○○○○급	○○ ○○과		3	12	62.1	
				4	8	65.8	
	○○○○급	○○과		1	37	51.7	
				2	12	63.9	
		○○면		2	49	44.5	
				3	47	45.7	

구분	직렬·직급	평정 단위	성명	부서 서열 순위	근무성적평정 결과		비고
					최종서열 순위	평정점	
		○○면		1	4	68.2	평정단위별 서열순위 동일 기재
				1	31	54.9	
				1	34	53.1	
	○○○○ ○○○	○○ ○○과		1	3	68.8	
				2	2	69.4	
2019년 하반기	○○○급	○○ ○○과		3	5	52.9	
				4	4	62.7	
	○○○급	○○면		2	-	49.3 (전산입력 점수)	근무성적 평정안 기재 누락

출처) 산청군 제출자료 재구성

[표9] 의결서와 다른 근무성적평정점 입력 현황

구분	직렬·직급	연번	성명	근무성적평정점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비고
				의결서	시스템	의결서 기준	시스템 기준	
2017년 하반기 (9건)	○○○급	1		70	63.9	2	2	
		2		63.9	70	3	3	
	○○○○○급	1		70	62.7	5	6	
		2		63.9	70	1	1	
		3		62.7	52.9	3	4	
		4		52.9	52.3	6	5	
		5		52.3	63.9	2	2	
	○○○급	1		52.3	52	6	6	
	○○○급	1		46.3	45.3	36	36	
2018년 상반기 (5건)	○○○급	1		52.3	51.7	9	9	
	○○○○○급	1		62.7	63.3	2	2	
		2		63.3	63.9	3	3	
	○○○급	1		64.6	65.2	11	11	
		2		65.2	67	25	25	
2018년 하반기 (11건)	○○○○○급	1		66.4	64	26	28	
		2		59.1	59.7	14	13	
		3		56.7	43.9	72	72	
		4		43.9	56.7	82	82	
		5		59.7	67.6	7	1	동일평정점 (67.6) 인원 수 3명/ 우→수 '18.12.14. 승진
	○○○급	1		70	69.4	1	1	
		2		69.4	70	2	2	
	○○○급	1		70	63.9	1	2	
		2		63.9	70	2	1	
	○○○급	1		62.7	63.9	9	9	
		2		63.9	53.1	12	17	
2019년 상반기	○○○급	1		63.3	63.9	3	3	동일평정점 (63.9) 인원 수 2명

구분	직렬·직급	연번	성명	근무성적평정점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비고
				의결서	시스템	의결서 기준	시스템 기준	
(11건)	○○○급	1		63.3	63.9	3	3	동일평정점 (63.9) 인원 수 2명
	○○○급	1		63.9	64	7	7	
		2		60.9	59.7	19	19	
		3		59.7	60.9	44	44	
		4		59.1	60.9	16	15	
		5		57.3	58.5	26	26	동일평정점 (58.5) 인원 수 3명
		6		51.7	51.1	30	32	
	○○○급	1		63.3	63.9	3	3	
		2		63.9	63.3	1	1	
	○○○급	1		52.9	52.3	5	5	동일평정점 (52.3) 인원 수 2명
2019년 하반기 (8건)	○○○급	1		63.3	61.5	9	9	동일평정점 (61.5) 인원 수 2명
	○○○급	1		68.2	68.8	65	65	동일평정점 (68.8점) 인원 수 3명
	○○○급	1		50.5	57.9	15	15	동일평정점 (61.5) 인원 수 2명
		2		47.5	46.9	18	18	
		3		46.9	47.5	22	22	
	○○○급	1		40.9	40.5	38	38	
	○○○급	1		52.9	63.3	23	13	
		2		63.3	52.9	2	1	

출처) 산청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산청군 ○○○○과에서는 근평위의 최종서열·평정등급·평정점 결정 전 평정 권한이 없는 군수와 부군수에게 근무성적평정안을 결재 받고 확정하는 행위를 한 사유에 대해 담당자의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연찬 부족임을 답변 하였고, 더불어 근평위의 권한을 침범할 의도나 평정점을 확정하기 위한 행위는 아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 하반기까지 총 5회의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평정안을 작성한 후 모두 담당계장, 과장, 부군수, 군수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는 절차를 가졌고, 결재 받은 평정안 그대로 근평위의 심사·결정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근평위를 개최하기도 전에 이미 결재 받은 평정안을 근거로 평정대상 전체 공무원에 대한 평정점을 인사랑에 입력한 사실을 볼 때,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인 임용권자가 실제 근무성적평정의 심사·결정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업무담당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근평위 근무성적 평정 심사·결정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설령 추후에 근평위를 개최하여 위원들로부터 해당 평정안에 대해 서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의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근무성적평정위원들이 임용권자의 결정에 구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절차를 통해 정당성이 부여되는 근무성적평정 제도를 부정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근무성적평정점을 임의로 수정하여 재입력하거나, 승진후보자 명부 효력 발생 이후에도 평정점을 변경 입력하고,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 변경, 근평위 결정내용과 다르게 평정점 입력 등 일련의 감사지적에 대해 근무성적평정업무에 대한 이해와 인사랑에 대한 이해 부족, 평정업무에 대한 부담감에서 기인한 것으로, 업무착오일 뿐 의도적 변경 입력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위법·부당행위의 근본원인은 산청군 ○○○○과에서 전체 서열

조정과 최종 서열·평정등급 결정 시 직위의 조직 내 비중, 평정대상 간 성과의 상대적인 차이, 조직에 대한 기여도 등 객관적인 적용기준을 정하여 순위를 조정·결정하여야 함에도 순위조정에 대한 별도 심의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임의로 작성한 근무성적평정안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에게 확정 받은 후 평정위원들이 날인하여 최종서열·평정등급·평정점을 결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 운영 결과에 대해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 등 산청군 근평위의 유명무실한 운영에 있다.

그리고 업무담당자가 관련 규정의 정확한 숙지와 업무연찬 부족으로 평정점을 의도적으로 변경 입력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근무성적평정점은 평정대상 공무원의 상대적인 서열에 따라 부여되므로 일부 직원의 평정 순위와 평정점이 변경되면 다른 직원들의 순위와 평정점이 함께 변경된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그런데도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특정인의 순위와 평정점을 변경하였고, 그로 인해 [표2]에서부터 [표6]까지와 같이 매년 다수인의 평정점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표8]과 같이 평정단위별 평정서열이 부당하게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표9]와 같이 근평위 의결서와 다르게 평정점이 입력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 세 차례 근무성적평정업무를 처리한 ○○○은 전체 서열 조정과 최종서열·평정등급 결정 시 객관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계장, 과장과 평정대상에 대해 논의한 후 최종 서열과 평정등급을 결정하였고, 인사랑에 평정점을 최초 입력한 후 개인별 업무수행능력이나 일의 적극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특정인의 평정등급을 양에서 수로, 수에서 양으로 변경하거나 평정점을 10점 이상씩 상승 또는 하락시키는 등의 변경 행위를 수차례 하였다.

2019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업무를 처리한 ○○○ 역시 전체 서열 조정과 최종 서열·평정등급 결정 시 객관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평정안을 작성하였으며, 당초 평정안의 점수를 근거로 작성했던 예상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와 인사랑에 입력한 후 도출된 순위가 다르자 3일에 걸쳐 평정점을 변경 입력하였다.

2019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업무를 처리한 ○○○은 근평위 심사·결정 후 평정점을

인사랑에 입력해야 함에도 근평위가 심사·결정하기도 전에 가점과 경력평정을 확인해보기 위해 임의로 평정점을 입력하였고, 이후에도 객관적인 적용 기준 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변경 입력을 계속하였으며, 최종 변경한 평점점을 반영한 평정안을 작성하여 결재와 근평위 심사·결정을 받는 등 정당한 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특히, ○○○과 ○○○의 경우 근평위의 결정 내용에 대해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없으며, 설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에게 보고하고 근평위에 재결정을 요구할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만 했다.

그런데도 평정 권한이 없는 실무담당자가 임의로 평정점을 변경하였고, 변경 입력한 내용에 대하여 평정위원들에게 별도 보고를 하거나 사후에 확인을 구한 사실도 없다.

뿐만 아니라 담당, 과장, 부군수, 군수까지 결재를 받고 이를 근거로 근평위의 심사·결정을 받은 평정안을 담당자가 임의로 파기하고 재작성하였으며, 재작성한 평정안은 당초 결재·의결 받은 서류와 교체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이러한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2017년 하반기의 경우 총 107명, 2018년 하반기에 총 78명, 2019년 상반기에 총 25명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변경되었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근무성적평정점 평균, 경력평정점, 가산점을 합산하여 점수 순으로 작성되는 바, 결국 평정권한이 없는 인사담당자가 근무성적평정점을 계속하여 변경 입력한 이유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임의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근무성적평정 전 ○○○○과장이 직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와 차이가 클 경우 조직의 안정성이 저해되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과 ○○○은 이를 반영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맞춰 근무성적평정점을 지속 변경 입력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그리하여 근평위의 심사·결정 내용과 다르게 평정점이 확정되고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었으며,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은 실무책임자로서 실무담당자의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고 근무 성적평정 업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책임이 막중하다.

당시 ○○○○과장인 ○○○, ○○○도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감독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산청군수는

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내용을 파기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근무성적평정점을 임의로 변경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변경한 ○○○○과 실무담당자 지방○○○○ ○○○(현, ○○과), 지방○○○○ ○○○(현, ○○면)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중징계」 처분하고, (중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근무성적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한 ○○○○과 실무담당자 지방○○○○ ○○○(현, ○○○○○과)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징계)

그리고,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여 실무담당자의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 실무책임자 지방○○○○○ ○○○(현, ○○ ○○)과 지방○○○○○ ○○○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징계」 처분하고, 지방○○○○○ ○○○(현, ○○○○과)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며,

당시 ○○○○과 감독책임자 지방서기관 ○○○(현, ○○○○○○○○)와 지방서기관 ○○○(현, ○○○○○○○○)은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징계·훈계)

② 또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를 위반하여 근무성적평정 최종서열을 부당하게 변경한 평정대상 공무원들의 평정점을 당초 평정단위별 서열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근무성적평정 확정 기준일 이후 변경 입력한 근무성적평정점과 의결서와 일치하지 않은 근무성적평정점을 당초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심사·결정 내용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시정 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게 운영될 있도록 조치하고, 근무성적평정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과에 대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징계·훈계·주의 요구

제 목 직무관련 법인 경비 부담 공무국외여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산청군(○○○○과)

조 치 기 관 산청군(○○○○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산청군 ○○○○과에서는 「지방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산청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이하 “산청군 공무원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는 등 복무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산청군 공무국외여행 규정」, 「재단법인 산청군 ○○○○○○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와 산청군○○○○○¹²⁾(이하 “○○○”라 한다) 운영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매년 ○○○의 요청(2017년 제외)으로 ○○○에서 실시하는 “중·고교생 ○○ ○○○○ 우수학생 해외 연수”에 1~4명의 담당 공무원을 공무국외여행 허가 후, 인솔 명목으로 동행시키고 있으며, 연수 참가 공무원의 국외여행경비는 ○○○에서 부담(2019년 3명 제외)하였다. 감사대상기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위 연수에 참가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2) 1999. 8. 3. : 사단법인 설립 허가
1999. 8. 12. : 사단법인 설립 등기
2018. 10. 29. : 재단법인 설립 허가
2018. 11. 7. : 재단법인 설립 등기
2019. 2. 25. : 사단법인 해산 (2019. 8. 19. 청산종결)

[표1] 공무국외여행 허가사항

(단위 : 천 원)

연도별	여행 목적	여 행 자			여행기간	여행 국가	여행 경비	경비부담
		소속	직급	성명				
2017	(사)산청군○○○○○ 주최 2017년 중·고교생 ○○○○대회 입상자 국외연수 실시에 따른 관계자 출장	○○ ○○○	○○ ○급	○○○	2017. 8. 7.~ 2017. 8. 13.	뉴질 랜드	3,253	(사) 산청군 ○○ ○○○
2018	(사)산청군○○○○○ 주최 2018년 중·고교생 ○○○○대회 입상자 국외연수 실시에 따른 관계자 출장	○○ ○○○	○○ ○급	○○○	2018. 8. 8.~ 2018. 8. 14.	뉴질 랜드	2,751	(사) 산청군 ○○ ○○○
2019	(재)산청군○○○○○ 2019년도 중·고교생 해외연수에 따른 학생 인솔	○○ ○○○	○○ ○급	○○○	2019. 8. 4.~ 2019. 8. 9.	싱가 포르	2,371	군비 (국외여비)
			○○ ○○○	○○○			2,371	
	(재)산청군○○○○○ 2019년도 중·고교생 ○○○○대회 우수학생 해외연수에 따른 학생 인솔	○○ ○○○	○○ ○급	○○○	2019. 8. 7.~ 2019. 8. 12.	싱가 포르	2,371	(재) 산청군 ○○ ○○○
			○○ ○급	○○○			2,371	군비 (국외여비)

2.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 하고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산청군 공무원 행동강령¹³⁾ 제2조¹⁴⁾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란 산청군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군수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출연한 단체 및 그 소속원”을 말한다.

한편, 「산청군 공무국외여행 규정」¹⁵⁾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에 따르면, 군수는 ‘타 기관·유관단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시’와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허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6조(심사기준)에 따라 ‘시찰·견학·현장체험 등을 위한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의 목적, 필요성, 여행장소, 여행기간, 여행인원 및 경비 부담의 적절성 여부’와 더불어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항공료, 체재비 등의 과다 여부’와 ‘감독기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여행 시 산하기관에 비용전가 금지’ 등으로 여행경비의 적정성을 중점 심사하여야 한다.

또한, 2019. 2. 25. 전부 개정된 「산청군 공무국외여행 규정」(훈령 제365호)에서도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군 공무원이 외부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아서는 아니 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3) 2016. 12. 6. 일부개정(규칙 제1165호)

14) 2018. 6. 4. 전부개정(규칙 제1183호)으로 “직무관련자”란 「공무원 행동강령」제2조 제1호의 직무관련자를 말한다.’로 조문 개정됨

15) 2016. 10. 17. 일부개정(훈령 제349호)

공무국외여행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은 외부 위원 1명 이상으로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타당성을 심사하여야 하고, 제8조 제3항에서 역시 별표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으로 ‘여행자의 적합성¹⁶⁾’과 ‘여행경비의 적절성¹⁷⁾’ 등을 정하여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산청군 ○○○○과에서는 산청군이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출연한 단체는 직무관련자가 되므로 이 단체들로부터 공무여행 경비를 부담 받는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무국외여행을 허가함에 있어서도 「산청군 공무국외여행 규정」의 심사기준에 따라 외부기관·단체로부터 경비의 전부를 지원 받는 국외여행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만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

그런데 산청군 ○○○○과에서는 사단법인 산청군○○○○○(현, 재단법인)가 산청군이 출연하여 설립한 장학 목적의 공익법인으로서 「산청군 ○○○○○ 육성 조례」를 근거로 출연금¹⁸⁾을 지원받고 있고, 「산청군 사무분장 규정」 제3조에 따라 ‘○○○○○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중·고등학생 ○○○○대회 및 어학연수 추진’ 사무가 ○○○○과 내 ○○담당 사무로 분장되어 있어, 산청군○○○○가 산청군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 따라 직무관련자임에도,

매년 산청군○○○○가 주최하는 중·고교생 ○○○○대회 입상자 국외연수에

16) “3. 여행자의 적합성 심사기준” 중 :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여행은 금지함

17) “5. 여행경비의 적절성” 중 :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 여부, 감독기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여행 시 산하기관에 비용전가 금지

18) 1999년(최초 설립 시) 10백만 원, 2000년~2018년(사단법인) 8503백만 원, 2019년(재단법인 변경 후) 1,510백만 원, 2020년 1,597백만 원

○○○○○ 운영 및 지원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2017년)와 같은 부서 내 공무국외여행심의 업무 담당자(2018년), ○○○○○ 업무 총괄 담당(2019년)을 인솔자로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공무국외여행 경비를 ○○○○○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공무국외여행 신청을 하였다.

더군다나, 2019년의 경우 동일 목적의 공무국외여행허가 신청자 4인 중 3명은 국외여비를 확보하여 공무국외여행을 추진하였으며, 나머지 1명만 ○○○○○ 기금을 지원 받았다.

또한, ○○○○○과에서는 해당 공무국외여행신청서에 여행경비 부담이 산청군 ○○○○○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산청군 공무국외여행 규정」의 심사기준에 따라 여행경비의 적정성을 중점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안에 중점 심사내용 및 검토의견 등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2019년의 경우, 경비의 전부를 외부 단체가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은 외부 위원 1명 이상으로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내부 위원 6명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는 등 공무국외여행 심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 ○○○, ○○○ 3인은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탁금지법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산청군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를 위반하여 직무관련자인 산청군○○○○○로부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비를 부담 받고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산청군 ○○○○○과에서는 「재단법인 산청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7조¹⁹⁾ 및 「재단법인 산청군○○○○○ 운영세칙」 제14조²⁰⁾의 규정에 따라 ○○○

19) 제7조(공무원의 파견 등) 군수는 ○○○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에 파견하거나 겸임하도록 할 수 있다.

업무를 수행하였고, ○○○의 사무국 직원으로 ○○○ 기금을 받아 국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나,

감사기간 중 “겸임” 임용의 근거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관련 공문이나 방침 등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에 따르면, “겸임”은 본직기관의 직위 외에 다른 기관의 직위를 부여하여 2개 이상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서 특정직위의 전문인력 확보,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 확보 등이 목적이고, ‘겸임의 범위’를 ①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일반직공무원 간, ② 연구직렬 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다른 일반직 공무원간, ③ 일반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 및 그 부설 연구소의 교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²¹⁾ 제1항 각 호의 어느

20) 제14조(사무국) ① ○○○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사무국을 두되 별도의 사무실 확보 필요시까지 산청군 ○○○○○ 담당과에서 이를 대행한다.

② 사무국에는 국장 1명, 간사 1명을 두되 국장은 현행 ○○○ 이사인 산청군 ○○○○○ 담당과장이 겸임하며, 간사는 산청군 ○○○업무담당으로 한다.

21)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직원간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겸임을 하려면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서 임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단법인 산청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7조를 살펴보면, ‘군수는 ○○○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에 파견하거나 겸임하도록 할 수 있다’로 공무원의 “파견”과 “겸임”의 근거를 명시하였으나 이는 재량규정²²⁾에 불과하며, 별도의 임용 절차 없는 겸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 ○○○ 이사장이 조례를 근거로 산청군수에게 “겸임” 동의를 구하더라도, 산청군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의 겸임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하여 임용해야만 한다.

산청군 ○○○○과에서는 그동안 ○○○의 업무를 직접 수행해왔으나, 겸임 임용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 사무국 직원이 아닌 산청군 공무원으로 「산청군 사무분장 규정」(○○○○과 ○○담당에 분장된 “○○○○○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구나, 해당 조례는 2019. 3. 29. 제정되었으며, 이전 조례인 「산청군 ○○○○○ 육성 조례」²³⁾에 따르면 “겸임”의 근거도 없으므로 ○○○과 ○○○이 겸임을 근거로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왔음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국외여비를 확보하지 않고, 임용 받지 않은 겸임을 이유로 직무관련자인 ○○○로부터 경비를 부담 받고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왔음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조례상 “겸임하도록 할 수 있다”는 표현은 겸임의 요건이 맞을 때 겸임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당 문구 자체가 상위법에 저촉되는 등의 법령 체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23) 조례 제2022호(2012. 12. 31. 일부개정)

한편, 산청군 ○○○○과에서는 이 건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에 해당하여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예외사유임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청탁금지법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과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자료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에 따르면,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제6호) 해당 여부 체크 리스트”에서 모든 항목에 체크된 경우에만 공식적 행사가 성립하고, 어느 하나라도 체크되지 않은 경우 행사는 명목에 불과하고 단순한 사적 모임에 해당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의 이 건 행사를 체크해보면, 우선 산청군 관내 학생들의 외국어 구사에 대한 자신감 고양과 실전능력 향상 등을 위한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함에도 매년 패키지 관광 위주의 여행 프로그램²⁴⁾으로 구성한 점, 인솔자 선정

24) <2017년~2018년 해외연수 일정> : 2일차 코렐대학 탐방 / 3일차 와이토모 동굴, 타우포 관광 / 4일차

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참석자를 특정하지 않고 적정하게 선정하여야 하고, 담당부서의 직원만이 학생들의 인솔자 역할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매년 담당부서 내 직원만을 특정하여 추천한 점, 2017년 22명의 중·고등학생에 대하여 여행사 가이드 2명을 포함하여 지도교사 2명과 ○○○○협의회 산청지역협의회장 1명이 인솔자로 동행하고, 2018년 역시 23명의 중·고등학생에 대하여 여행사 가이드 2명, 지도교사 2명이 인솔자로 동행함에도 담당부서 공무원인 ○○○, ○○○이 각각 동행하여 출장비를 지원 받은 점, 2019년 청탁금지법 저촉 우려에 교육지원청 추천 지도교사가 참여하지 않고, 동일 목적의 해외연수에 참여하는 3명의 직원은 국외여비를 확보하여 공무국외여행을 추진하였음에도 교육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 ○○○ 특정인만이 ○○○ 경비를 지원받은 점을 볼 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의 요건뿐만 아니라, ‘일률적 제공’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18. 11. 15.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방안²⁵⁾”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민간기관·단체 등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공직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직무관련 민간기관·단체로부터 수익자부담 규정 등 법령·기준에 근거하여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됨을 알 수 있고,

해당 해석기준²⁶⁾이 2018. 11. 26. 산청군 전 부서에 전파된 바도 있어, 만약 해당

양소, 팜투어, 농장식 중식, 폴리네시아 디럭스 스파 / 5일차 스카이라인 곤돌라 탑승 및 조식, 테푸이아 지열지대 마오리 민속마을 관광, 마오리 민속마을 방문 / 6일차 반지의 제왕 촬영지인 호비튼 무비 세트장 관광, 오클랜드 시내 관광

<2018년 해외연수 일정> : 2일차 시청광장, 머라이언 공원, 에스플러네이드 외관 및 거리관광, 주룽새 공원(울스타버드쇼, 트램탑승),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견학 / 3일차 센토사섬 관광, 루지, 스카이라이더 탑승, 아쿠아리움 관광, 유니버설 스튜디오 / 4일차 보타닉 가든, 싱가포르국립대학 캠퍼스 투어, 리틀인디아, 아랍스트리트, 하지레인 거리, 가든스바이더베아, 랩쇼디쇼 관람 / 5일차 술탄모스크, 부기스 재래시장 관광, 차이나타운, 오차드로드 관광, 리버보트 탑승(야경감상)

- 25) 국민청원, 언론보도 등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 지원을 받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파악, 제도보완 등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범정부 점검단 구성 및 점검 실시('18. 5. 1.~6. 30.) 후 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방안”이 통보됨.

※ 해외출장 등의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 청원 : 26만 여 명('18. 4. 16.~5. 16.)

※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 온 전 금융감독원장 사임 사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직무관련 민간단체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았다면 그 위법의 책임은 더욱 엄중할 수밖에 없다.

다만, 산청군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직무관련 사단법인(현, 재단법인) 경비 부담의 공무국외여행임에도 기관 승인이 있었다는 점, 이를 근거로 ○○○, ○○○이 「지방공무원법」 제53조와 청탁금지법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위반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해외연수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인솔자의 역할을 수행한 점, ○○담당 ○○○은 조례의 검임 규정과 청탁금지법을 엄격히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함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검임을 전제로 구두 질의하여 확인한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경비를 제공 받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2007년부터 ○○○○대회 우수자 해외연수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2014년 한 해를 제외(세월호 참사 발생)하고는 매년 담당공무원이 ○○○ 경비를 부담 받고 인솔 공무원으로 참여²⁷⁾해 온 점을 볼 때 감사 대상기간 중 해외연수를 참여한 ○○○, ○○○, ○○○에게만 그 위법의 책임을 전부 지우기도 어려운 점도 있다.

조치할 사항 산청군수는

① 관련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직무관련 법인으로부터 경비를 제공 받고 공무국외여행을 다녀 온 ○○○○과 실무담당자 지방○○○○보 ○○○(현, ○○○면), 지방○○○○보 ○○○(현, ○○○면)과 ○○○○과 실무책임자 지방○○○○ ○○○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징계」 처분하고, 제공 받은 공무국외여행 경비 일체를 (재)산청군○○○○○에 반환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경징계·여행경비 반환)

그리고 「산청군 공무국외여행 규정」의 심사기준에 따라 외부기관·단체로부터 경비의 전부를 지원 받는 국외여행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26)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방안 알림(산청군 ○○○○○○-11988호)

27) 2007년 싱가포르 1명, 2008년 싱가포르 1명, 2009년 호주 2명, 2010년 호주 1명, 2011년 미국 1명, 2012년 호주 1명, 2013년 호주 1명, 2015년 호주 1명, 2016년 호주 1명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 실무책임자 지방○○○○○ ○○○
(현, ○○○○)와 지방○○○○○ ○○○은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앞으로 공무국외여행 경비는 자체예산으로 집행하시기 바라며, 「산청군 공무
국외여행 규정」의 심사기준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허가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과에 대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 요구

제 목 화물자동차 불법밤샘주차 단속 이첩내역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산청군(○○○○과)

조 치 기 관 산청군(○○○○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산청군 ○○○○과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 관련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2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등 지정된 시설 및 장소에서만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3]에서는 이를 위반 시 행정청은 위반차량 운행정지(5일) 또는 과징금(일반화물 20만원, 개별화물 10만원) 처분을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적발한 위반 차량이 처분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적발통보서를 관할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청군에서는 타 시·군 등에서 이첩되어 온 범규위반 차량에 대한 행정 처분(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을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감사 시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산청군 ○○○○과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타시·군 등으로부터 화물자동차 불법밤샘주차 위반 차량으로 통보(이첩)되어 온 ○○건의 위반차량에 대해 적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나, ○○건 차량에 대해서는 감사 일 현재까지 인지조차 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1】 불법밤샘주차 단속 이첩내역 미처리 현황

연번	소유자	차량번호	단속일자	이첩일자	단속장소	이첩 기관
1	○○○○○	○○○○○ ○○○○	2019.12.20. 00:14-01:19	'19.12.23.	-----	○○○○
2	○○○○○	○○○○○ ○○○○	2019.11.200. 00:25-01:39	'19.11.22.	-----	○○○○
3	○○○○○	○○○○○ ○○○○	2019.10.25. 00:11-01:14	'19.10.27.	-----	○○○
4	○○○○○	○○○○○ ○○○○	2019.10.17. 00:22-01:23	'19.10.18.	-----	○○○○
5	○○○○○	○○○○○ ○○○○	2019.10.11. 00:20-01:35	'19.10.14.	-----	○○○
6	○○○○○	○○○○○ ○○○○	2019.09.18. 00:13-01:27	'19.09.19.	-----	○○○○
7	○○○○○	○○○○○ ○○○○	2019.9.04. 00:30-01:35	'19.09.04.	-----	○○○

연번	소유자	차량번호	단속일자	이첩일자	단속장소	이첩 기관
8	○○○○○	○○○○○ ○○○○	2019.7.31. 00:41-02:14	'19.08.03.	-----	○○○
9	○○○○○	○○○○○ ○○○○	2019.5.15. 00:58-02:10	'19.06.25.	-----	○○○
10	○○○○○	○○○○○ ○○○○	2019.6.18. 00:22-01:27	'19.06.18.	-----	○○○
11	○○○○○	○○○○○ ○○○○	2018.12.01. 00:31-02:01	'18.12.03.	-----	○○○
12	○○○○○	○○○○○ ○○○○	2018.11.15. 01:40	'18.11.22.	-----	○○○
13	○○○○○	○○○○○ ○○○○	2018.11.30. 00:47-02:25	'18.12.05.	-----	○○○○
14	○○○○○	○○○○○ ○○○○	2018.10.27. 00:26-01:36	'18.11.01.	-----	○○○
15	○○○○○	○○○○○ ○○○○	2018.9.6. 01:01-02:47	'18.10.05.	-----	○○○
16	○○○○○	○○○○○ ○○○○	2018.9.11. 00:47-01:48	'18.09.17.	-----	○○○
17	○○○○○	○○○○○ ○○○○	2018.09.08. 01:06	'18.09.14.	-----	○○○
18	○○○○○	○○○○○ ○○○○	2018.3.21. 00:20-01:21	'18.03.29.	-----	○○○
19	○○○○○	○○○○○ ○○○○	2018.01.31. 00:31-03:33	'18.02.02.	-----	○○○
20	○○○○○	○○○○○ ○○○○	2017.09.15. 00:39-02:01.	'17.09.19.	-----	○○ ○○○

출처) 산청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산청군 ○○○○과에서는 불법밤샘주차 위반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적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처리가 미흡하였다고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전국 기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 관련 문서(공람문서 포함)를 연간 수만 건 접수하는 과정에서 문서 분류에 착오가 있었고, 앞으로는 문서접수에 주의를 기울이고 업무 담당자 연찬을 통해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화물자동차 관련 수신문서가 많아 문서 접수 및 분류에 착오가 있어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으나, 업무 담당자는 관련 공문 접수 시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문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공문을 접수하였더라면 공시송달 등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발송되는 문서와 행정처분 이첩의 문서는 충분히 구분 가능한 사항으로 산청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산청군은 차고지 외 불법밤샘주차로 적발되어 이첩된 ○○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운송사업에 종사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성실하게 법령을 준수하는 운송사업자와의 형평성과 행정처분의 적시성을 일실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산청군수는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 불법밤샘주차 위반으로 통보(이첩)된 차량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실무담당자 산청군 ○○○○과(현, ○○○면) 지방○○○○○ ○○○, ○○○○과 지방○○○○○ ○○○, ○○○○과(현, ○○○○○과) 지방○○○○○ ○○○에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② 불법밤샘주차 위반으로 통보(이첩)된 차량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인사발령 시 업무인수인계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 요구

제 목 공동방제단 운영·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산청군(○○○과)

조 치 기 관 산청군(○○○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산청군 ○○○과에서는 상대적으로 방역이 소홀해 지기 쉬운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의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을 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초과)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사료제조업자, 비료제조업자 등은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제1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축의 소유자,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식용란 수집판매업자 등)가 운영하는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차량을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해당 차량의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정보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 등 대상 지

역을 출입하는 경우 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57조 제3의3호에서는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상남도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사업 실시요령」에 따르면 군수는 방제단별 대상농가 2개 이상을 무작위로 방문하여 소독실태를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방제단의 비용집행내역을 점검 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공동방제단 운영 장비 및 실태가 부실한 공동방제단은 강력한 제재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산청군 ○○○과에서는 사업기간(연중) 동안 방제단별 대상농가 2개 이상을 무작위 방문하여 공동방제단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방제단의 비용집행내역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공동방제단 운영 장비 및 실태(차량무선인식장치 전원 상태, 훼손·제거 여부 등)가 부실한 공동방제단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 시 확인된 문제점

감사기간 동안 산청군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으로 등록된 공동방제단 소속의 차량 ○대의 차량운행 현황(2017. 6. ~ 감사일 현재까지)을 확인한 결과 GPS 운행기록은 있으나 운행일지 내역은 없는 경우, GPS 운행기록은 없으나 운행일지 내역은 있는 경우, GPS 운행기록과 운행일지 내역 전부 없는 경우 등 차량운행일지와 GPS 운행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표]와 같이 다수 확인되었음에도 산청군 ○○○과에서는 이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해 공동방제단 차량이 장기간 축산관계시설 방문 GPS 기록 없이 운행되도록 하는 등 공동방제단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정기적으로 방제단의 비용집행내역(유류비 등) 점검, 공동방제단 운영 장비 및

실태 점검, 공동방제단과 합동으로 축산관계시설 방문 등을 하고 있으므로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 상태, 결합 여부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여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1】 공동방제단 차량무선인식장치 운행내역 미확인 현황

(단위 : 일)

연번	차량번호	등록 운전자	GPS 운행기록 유 / 운행일지 내역 무	GPS 운행기록 무 / 운행일지 내역 유	GPS 운행기록 무 / 운행일지 내역 무
1	○○○○○○○○	○○○	142	123	35
2	○○○○○○○○	○○○	19	300	43
3	○○○○○○○○	○○○	21	188	6
4	○○○○○○○○	○○○	25	253	14
5	○○○○○○○○	○○○	15	258	27

출처) 산청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산청군 ○○○과에서는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운행기록은 ○○○○○○부장관에게 차량출입정보의 열람을 청구해야 확인할 수 있어 방제단 차량운행의 지도·점검에 한계가 있었다고 하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4 및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차량출입정보를 요청하여 열람하여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번거롭더라도 신청자정보, 기간, 목적 등을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승인을 받아 차량출입정보의 열람이 가능하고, 관리·감독부서는 주기적으로 차량출입기록을 열람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 중인 방제단 차량운행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산청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산청군수는

- ① 산청군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및 「경상남도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사업 실시요령」에 따라 공동방제단 차량의 무선인식장치의 작동 여부를 점검 하지 않아 공동방제단 차량이 장기간 축산관계시설 방문 GPS 기록 없이 운행되도록 하는 등 공동방제단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과 지방○○○○ ○○○**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②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 요구

제 목 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일제점검 미이행 및 행정처분 소홀
소 관 기 관 산청군(○○○과)
조 치 기 관 산청군(○○○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산청군 ○○○과에서는 가축사육업 허가·등록과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축산업 허가·등록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기 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축산업 허가제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일제점검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2018. 12. 31. 개정(시행: 2020. 1. 1.)된 「축산법」 제28조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2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전 「축산법」 제28조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상남도 ○○과에서도 ○○과-○○○○호(2017.○○Q) 「축산업 허가제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일제점검 계획 알림」 및 ○○과-○○○○호(2019.Q○○) 「2019년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 추진계획 알림」에 따라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기준 적합 여부, 축산업 허가·등록자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축산업 허가자 등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 휴업·폐업·재개업 및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산청군 ○○○과는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정기점검(2년에 1회 또는 1년에 1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감사 시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산청군 ○○○과는 2017년에는 자체점검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고, 읍·면 협조 공문 발송, 현장점검표 작성 등 점검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전체 대상농가(○○○호)가 적합농가인 것처럼 도 축산과에 보고하였다.

2019년 일제점검에서도 ○○○ ○○개 농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지 않았음에도 전체 대상농가(○○○호)가 적합농가인 것처럼 도 축산과에 결과를 보고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3. 교육 미이수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과태료 부과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축산법」 제33조의2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축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한 자는 2년에 1회 이상 지정된 교육

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56조에서는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별표4]에 따라 과태료(허가대상: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400만원 / 등록대상: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청군 ○○○과에서는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중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감사 시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산청군 ○○○과에서는 【표1】과 같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 등 ○개 농가에 대해 과태료(총 ○○○만원)를 부과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였다.

【표1】 보수교육 미이수 축산업 농가 현황

(단위 : 원)

연번	사업장명칭	권리주체	구분	최종교육일	과태료 미부과 금액	비고
	합계				-----	
1	○○○○○	○○○	등록대상	-	-----	
2	○○○○○	○○○	등록대상	-	-----	
3	○○○○○	○○○	등록대상	-	-----	
4	○○○○○	○○○	등록대상	2013.11.08	-----	
5	○○○○○	○○○	등록대상	2014.01.07	-----	
6	○○○○○	○○○	등록대상	2014.01.08	-----	
7	○○○○○○○	○○○	허가대상	2017.12.08.	-----	

출처) 산청군 제출자료 재구성

4. 휴업·폐업 등 미신고 농가 행정처분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축산법」 제22조 제6항에 따르면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폐업(3년 이상 휴업한 경우를 포함)한 경우,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56조에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허가대상: 1회 15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 등록대상: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 제1항 2호에 따르면 3개월 이상 휴업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별표2] 축산업 허가·등록 취소 및 영업정기기준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산청군에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3개월 이상 휴업 등을 한 자에 대해서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감사 시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산청군에서는 감사일 현재 폐업(미사육)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폐업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표2】의 ○○개 농가에 과태료(총 9,000만원) 부과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고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하였음에도 허가 취소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표2] 미사육 농가 파악 현황

(단위 : 원)

연번	사업장명칭	권리주체	구분	과태료 미부과 금액	비고
	합계			-----	
1	○○○○	○○○	등록대상	-----	
2	○○○○	○○○	등록대상	-----	

연번	사업장명칭	관리주체	구분	과태료 미부과 금액	비고
3	○○○○	○○○	등록대상	-----	
4	○○○○	○○○	등록대상	-----	
5	○○○○	○○○	등록대상	-----	
6	○○○○	○○○○	등록대상	-----	
7	○○○○	○○○	등록대상	-----	
8	○○○○	○○○	등록대상	-----	
9	○○○○	○○○	등록대상	-----	
10	○○○○	○○○	등록대상	-----	
11	○○○○	○○○	등록대상	-----	
12	○○○○	○○○	등록대상	-----	
13	○○○○	○○○	등록대상	-----	
14	○○○○	○○○	등록대상	-----	
15	○○○○	○○○	등록대상	-----	
16	○○○○	○○○	등록대상	-----	

출처) 산청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산청군 ○○○과에서는 법령·지침 숙지 및 전반적인 업무 연찬이 부족해 관련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축산업 보수교육 미이수 및 휴·폐업 미신고 농가에 대해서는 자진 교육과 신고 기간을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축산업 허가·등록 일제점검 미이행과 관련해서는 2017·2019년 축산업 일제점검 시 축산농가의 경영시기를 고려하여 10~11월 경 점검을 하였으나, 이 시기가 구제역·고병원성AI 특별방역기간(10월~다음해 2월말)으로 축산농가 방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올바르게 점검을 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나

2017년도는 자체점검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고, 일제점검 추진과 관련하여 읍·면에 협조공문 발송내역이 없으며, 현장점검표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는 등 점검을 처음부터 전혀 추진하지 않고 결과를 적함으로 도에 보고하였고, 2019년도 일제점검의 경우 경상남도 ○○○과에서 ○○○과-○○○○(2019.○○)호 「2019

년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 추진계획 알림」 공문을 ○. ○○일자에 도내 시군에 발송함에 따라 구제역·고병원성AI 특별방역기간 전에 일제점검을 완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으므로 산청군 ○○○과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산청군수는

- ① 「축산법」 제28조, 제56조를 위반하여 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일제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보수교육 미이수 농가 및 휴업·폐업 등 미신고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과(현 ○○○면) 지방○○○○○○○○○○, ○○○과(○○○ 전출) 지방○○○○○○○○○○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②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가와 휴업·폐업 등 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하여 적의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경징계·훈계·주의 요구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산청군(@@@@과,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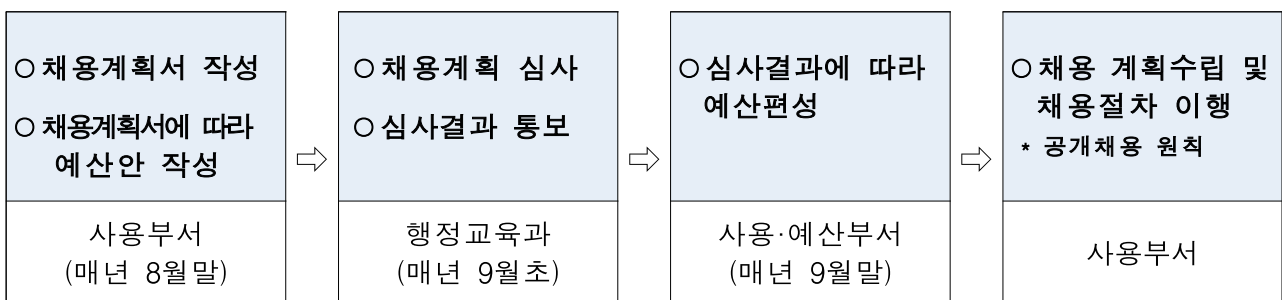
조 치 기 관 산청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산청군에서는 「산청군 공무원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절차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절차】



출처) 「산청군 공무원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2019.3.29.전부개정)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청군 공무원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2017. 11. 15. 시행) 제9조에 따르면 사용부서에서는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일간신문, 군 홈페이지 등에 채용관련 내용을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다만, 신속한 충원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 한다.

그리고 2019. 3. 29. 전면개정 된 「산청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용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8월말까지 채용목적, 인원, 기간 및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심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9월말까지 심사결과를 예산부서 및 사용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 채용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규정 제18조,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신문,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채용예정 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기간 및 근로조건 등을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다만, 신속한 충원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단축할 수 있음),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용자격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고령자(55세 이상)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청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신문,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공개채용하여야 하고, 다만 신속한 충원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3일 이상)을 단축할 수 있다.(2019. 3월 이전 채용 기간제 근로자는 신속한 충원 또는 특수한 사정 등으로 공고절차를 거치기 곤란할 경우 공고 생략가능)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산청군 @@@@과, #####과에서는 2018년, 2019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당시 기존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기간이 12월 말에 만료됨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신속한 충원이나 특수한 사정 등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하지 않고, 필기시험 등 적격자를 확인하는 절차도 생략한 채, 일용인부 사역 내부 결재 공문(과장전결, 1매)에 계약서 등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특정인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등 [표1]과 같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였고,

특히, @@@@과에서는 2020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2019. 3. 29. 전부개정 된 「산청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등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전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때, 바뀐 규정에 따라 채용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채용공고를 실시하지 않는 등 공개채용 원칙을 위반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

【표1】 기간제 근로자 부당 채용 내역

부서명	채용목적	채용기간	채용일자	성명	채용방법	관련공무원	
						실무 책임자	실무 담당자
@@ @@과	**** 관리	2018. 1. 1. ~ 12. 31.	2017.12.28.	aaa (00.00.00)	공개채용절차 미이행, 내부결재(사역 건의)	fff (0000)	eee (0000)
	**** 관리	2019. 1. 1. ~ 12. 31.	2018.12.26.	aaa (00.00.00)	공개채용절차 미이행, 내부결재(사역 건의)	ggg (0000)	hhh (0000)
	**** 관리	2020. 1. 1. ~ 12. 31.	2019.12.23.	aaa (00.00.00)	공개채용절차 미이행, 내부결재(사역 건의)	iii (0000)	jjj (0000)
## ##과	!!!! 관리	2018. 1. 1. ~ 12. 31.	2018. 1. 3.	bbb (00.00.00) ccc (00.00.00)	공개채용절차 미이행, 내부결재(사역 건의)	kkk (0000)	mmm (0000)
	!!!! 관리	2019. 1. 1. ~ 12. 31.	2018.12.28.	bbb (00.00.00)	공개채용절차 미이행, 내부결재(사역 건의)	nnn (0000)	ppp (0000)

출처) 산청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1. **** 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적정

산청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신문,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공개채용하여야 하고, 다만 신속한 충원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3일 이상)을 단축할 수 있다.(2019. 3월 이전 채용 기간제 근로자는 신속한 충원 또는 특수한 사정 등으로 공고절차를 거치기 곤란할 경우 공고 생략가능)

그런데도, @@@@과에서는 2018년, 2019년, 2020년 ***** 관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기존 기간제근로자 채용기간이 12월 말에 만료됨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신속한 충원이나 특수한 사정 등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하지 않고, 필기시험 등 적격자를 확인하는 절차도 생략한 채, 일용인부 사역 내부 결재 공문(과장전결, 1매)에 계약서 등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특정인을 부당하게 채용하였다. 특히, 2020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경우, 2019. 3. 29. 전부개정 된 「산청군 공무원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등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전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때, 바뀐 규정에 따라 채용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채용공고를 하지 않고 특정인을 부당하게 채용하였다.

@@@@과에서는 ***** 관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산청군 공무원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공개채용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산청군 공무원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특수한 사정에 의한 공고절차 생략 가능한 경우로 판단하였다.

@@@@과에서는 *****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 완공 후 *****이 자체운영 및 관리하기로 하였고, 2013. 9. 16. 최초 기간제근로자 채용 당시 *****운동에 참여한 137인 중 한사람인 ddd의 후손인 aaa을 채용하였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인 aaa은 채용당시 57세(1956.00.00.생)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판단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은 준공 시부터 현재까지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지 않고 산청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직접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 후손의 채용이 필요하다면 공개채용하면서

해당 사항에 가산점 부과 등의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한 점을 볼 때, 공고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 할 수 있고, 다만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2년의 범위를 넘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지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채용절차 또는 갱신 계약절차 등을 생략하고 계속하여 사용가능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설립 취지, 2013년 최초 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특수성(****의 관리 필요성), 최초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까지 계속하여 근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특정인을 새롭게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공고 등 공개채용 절차를 고의적으로 생략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과(현 \$\$\$\$) OOOO eee, @@@@과(현 #####과) OOOO jjj에 대해서는 행위 시 근무 경력이 2년 이하로 짧은 점과 해당업무를 맡은 기간이 2개월 이하인 점을 고려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9. 3. 29. 전부개정 된 「산청군 공무원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등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전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때, 바뀐 규정에 따라 채용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채용공고를 하지 않고 특정인을 채용하는 등 기간제 근로자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실무책임자 @@@@과 OOOO iii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되므로 「경징계」 처분하고, 「산청군 공무원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해 공개채용 절차를 생략하는 등 기간제 근로자 채용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실무책임자 @@@@과(현 %%%과) OOOO ggg, @@@@과(현 &&&&) OOOO fff, 실무담당자 @@@@과 OOOO hhh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2. !!!! 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적정

또한, #####과에서는 2018년과 2019년 !!!! 관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산청군 공무원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공개채용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산청군 공무원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특수한 사정에 의한 공고절차 생략 가능한 경우로 판단하였다.

#####과에서는 2016. 4. 22. ~ 27.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2016. 5. 4. 주변에 수소문한 끝에 bbb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였고, !!!!가 혐오시설로 지원자가 거의 없었으며, !!!! 인근 지역 주민들의 높은 소득수준으로 사실상 최저 임금 수준으로는 !!!! 관리 업무 가능자를 구하기 어려웠으며, 기간제 근로자인 bbb은 채용당시 56세(1957.00.00..생)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판단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비록, !!!!가 혐오시설로 근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적다하더라도,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갱신에 대해 미리정하여 계약하여야 하고, 다른 사정으로 계약을 갱신 한다면 최소한 갱신계약의 필요성 및 사유에 대하여 내부결재를 받는 등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채용 공고를 통하여 공개채용 하여야 한다. 또한 !!!! 주변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높다는 사실은 지원자가 적은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채용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당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기존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기간이 당해연도 1.1.부터 12.31.까지로 정해져 있고, 해당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연장·갱신에 대한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않은 점이다. 최근 판례(해고무효확인소송, 2019나12172)에서 근로계약서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절차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 내용만으로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는 점을 본다면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 갱신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은 근로계약에 대하여 계약 갱신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 할 수 있고, 다만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2년의 범위를 넘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지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채용절차 또는 갱신계약 절차 등을 생략하고 계속하여 사용가능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6. 4월 공개채용 당시 지원자가 없었다는 점, 기존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에 해당하여 2년의 범위를 넘어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특정인을 새롭게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공고 등 공개채용 절차를 고의적으로 생략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산청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해 공개채용 절차를 생략하는 등 기간제 근로자 채용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실무책임자 #####과(현 ★★★★★과) 0000 nnn, #####과(현 ●●●●과) 0000 kkk, 실무담당자 #####과(현 ○○○○○) 0000 ppp, #####과(현 @@@@과) 0000 mmm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산청군수는

① 「산청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기간제 근로자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실무책임자 @@@@과 0000 iii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되므로 “**경징계**” 처분하고, 실무책임자

@@@@과(현 %%%과) 0000 ggg, @@@과(현 &&&) 0000 fff,
####과(현 ★★★★★과) 0000 nnn, ####과(현 ●●●●과) 0000 kkk, 실무
담당자 @@@과 0000 hhh, ####과(현 ◎◎◎◎) 0000 ppp, ####과
(현 @@@과) 0000 mmm에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징계·훈계)

②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
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15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제작·관리업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산청군(●●●●●과)

조 치 기 관 산청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산청군 ●●●●●과는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제작 현황】

구분	P.E.봉투		P.P.마대		비고
	수량(매)	금액(천원)	수량(매)	금액(천원)	
2017년	360,000	19,436	140,900	76,595	
2018년	350,000	20,534	191,500	89,345	
2019년	330,000	21,878	190,000	81,700	
2020년 4월말	180,000	15,081	128,500	57,825	

2. 세출예산 집행절차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7조, 「지방회계법」 제6조에 따르면 당해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그리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산청군 재무회계 규칙」 제23조 등에 따르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청군에서는 세출예산을 집행할 경우, 당해 회계연도 경비는 당해 예산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세출예산 집행절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산청군 ●●●●과에서는 0000년 0월경 읍·면사무소에 배부하여 종량제 봉투판매소로 판매하는 50리터 규격 P.P.마대 쓰레기 종량제 봉투(이하 “종량제 봉투”)의 재고가 부족하자, 종량제봉투 제작업체(주식회사 ◆◆◆◆◆)에 구두상으로 대금은 이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종량제봉투 25,000매(제작금액 : 10,750천원)를 선제작하여 해당 물량을 0월부터 0월까지 읍·면사무소에 배부하였다. 이후 0000.00.00. 쓰레기 종량제봉투(PP포대) 제작을 건의하는 예산집행품의(●●●●과-00000호)를 하여 0000.00.00. 납품받은 것처럼 제작업체로부터 납품서를 제출받은 후 물품검사(수)조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0000.00.00. 대금 10,750천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12월 초에도 연말까지 사용할 물량이 부족하자 당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재정법」 제7조, 「지방회계법」 제6조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여, 종량제봉투 제작업체(주식회사 ◆◆◆◆◆)에 다음연도(0000년) 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을 구두상으로 약속하고, 종량제봉투 10,000매(제작금액 : 4,300천원)를 납품받아 0000년 말까지 읍·면사무소에 종량제봉투 9,920매를 배부하였다. 이후

0000.00.00. 쓰레기 종량제봉투(0000년 제작 계약분) 대금 57,825천원을 지급하면서, 기존 종량제봉투 10,000매 제작금액 4,300천원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등 또다시 세출 예산 집행절차를 무시하고 종량제봉투 제작 업무를 처리하였다.

3. 종량제봉투 제작용 인쇄원판 관리 및 검수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군수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고, 폐기물의 종류, 양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군수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하고,

또한,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하고,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 방지 및 처벌규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상남도○○○○과에서는 「종량제봉투 제작 계약 및 재고 관리 철저 협조 요청」(○○○○과-30517, 2017. 12. 19.)을 통해 각 시군에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방지를 위해 ‘종량제봉투 제작 중에도 제조업체를 수시 지도·감독’하고 ‘제작 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 할 때, 민간 제조업체에 종량제봉투 잔량이 남아 있지 않도록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종량제봉투 검수 공무원은 검체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험기관에 적합여부를 직접 의뢰하여 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청군에서는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쇄원판 관리와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산청군 ●●●●과에서는 종량제봉투 제작을 위한 인쇄원판 불출대장 및 제작업체와의 인쇄원판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아 동판의 불출내역을 알 수 없으며, 0000.00.00. 현재 50리터 P.P.마대 종량제봉투 인쇄원판이 ●●●●과에서 관리하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지 않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인쇄원판 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방지를 위해 종량제봉투 제작업체를 수시로 지도·감독해야 함에도 000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지도·점검을 실시한 기록이 없으며, 종량제봉투 적합여부 분석의뢰 시 담당공무원이 제작업체에 출장하여 검체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험기관에 의뢰해야 함에도 제작업체에서 임의로 검체를 시험기관에 의뢰하도록 하는 등 종량제봉투 검수를 소홀히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산청군 ●●●●과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종량제봉투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재고파악을 철저히 하고, 종량제봉투 제작비 본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관리하고 부족할 경우 추경확보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종량제봉투를 제작·관리토록 하겠으며,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종량제봉투 인쇄원판 불출대장 및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종량제봉투 제작업체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 검수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산청군수는

① 세출예산 집행절차 및 회계연도 독립의 법칙을 위반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고,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위반하여 쓰레기종량제 인쇄원판 관리 및 제작업체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과 ○○○○ qq, 실무담당자 ●●●●과 ○○○○
rrr에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
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② 아울러, 담당직원에 대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및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등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징계·훈계·시정요구

제 목 산청한방약초축제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산청군(○○○○○○과)

조 치 기 관 산청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산청군 ○○○○○과에서는 2017. 3. 17. 제정된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축제 지원 조례」에 따라 축제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조사업자로서 2017~2019년까지 산청한방약초축제를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다.

2. 산청군 주관 축제·행사에 민간행사보조금 집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는 민간행사보조금은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 집행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축제·행사가 민간단체 명의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집행·정산보고 등은 민간단체에서 하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내용의 적정성 조사·검토,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행사비 집행 등에 대한 지도·감독과 정산검사 업무는 산청군에서 수행함으로써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산청군 ○○○○○과에서는 2017~ 2019년까지 ‘산청한방약초축제’를 추진하면서 군수가 직접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축제 전반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추진하여야 함에도 위원회의 간사를 축제 업무 담당계장이 하고 보조사업자가 해야 할 예산 집행 및 정산서 제출 등 업무를 축제담당자가 직접 하였으며, 서류상 위원회에서 결재는 했으나 보조금 신청·집행 및 정산검사가 같은 담당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위원회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인 종합계획 수립 및 행사 지원 등 축제 관련 제반사항을 산청군에서 직접 주관하고 ㉠㉠㉠㉠㉠㉠위원회는 계획 보고(정산보고 포함) 및 사업비 집행만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한 만큼 직접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민간행사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편법으로 추진한 사실이 있다.

3. 수익금(입점료, 기부금) 승인 없이 집행 및 미반환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제8호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을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16조제2항에는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하고, 제19조, 제22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말까지(12. 31.) 집행하고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이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정산 결과,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제3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회계연도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등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 시 수익금(이자 포함)의 반환 또는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한다고 되어 있고, 보조단체 등이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적립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 교부 시 축제·행사로 인해 발생될 수익금의 집행계획을 부가하여 교부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정산결과 보조금 및 수익금의 집행잔액은 반환 조치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산청군 ○○○○○○과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2017~2019년까지 산청한방약초축제의 경우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농산물 판매장 입점료, 체험행사 부스 사용료, 협찬금 등 수익금이 발생되는 것을 알면서도 군비 보조금 교부 시 축제행사로 인해 발생될 수익금의 집행(반환)계획을 부가하여 교부 통지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보조사업자는 20**~20**년 동안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수익금을 행사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수익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20**년도 축제·행사로 발생된 협찬금 등 수익금을 20**, **, **,~**, *. 기간 동안 셔틀버스 임차, 홍보비 등에 **,***천 원, 20**, *. *.~*. **, 기간 동안 광고료 및 워크숍 비용으로 **,***천 원('**년 위원회 결산 총회 시 집행 계획), 총 **,***천 원을 군수에게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행사비 명목으로 집행하였으며, 또한 매년 보조사업 수행완료 후 실적보고서 제출 시 입점료에 대한 수익금 현황은 제출하였음에도 수입금에 대한 반환 검토 없이 정산검사를 하였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이월된 수입금 및 협찬금이 보조사업자의 수입금 계좌에 ***,***천 원이 있음에도 반환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어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기부금품에 대한 기부심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회는 군수가 설치·운영하고, 민간행사보조금을 지원하여 산청군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는 단체이며, 실제 산청군에서 주관하는 행사이므로 자발적 기탁의 경우라도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면 산청군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산청군 ○○○○○과에서는 아래 【표3】 과 같이 20**~20**년에 산청한방약초축제 행사를 추진하면서 축제 협찬비 명목으로 (주)***** **지점으로부터 20**. *. *. *. **,***천 원, 20**. *. *. *. **,***천 원을 산청군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는 접수할 수 없음에도 산청한방축제위원회 수입금 계좌로 직접 받아 접수하였으며, 또한 20**년도 관내업체로부터 기부받은 물품 **건, 20**년도 **건도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접수하여 행사용으로 직접 사용하여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5. 1인 수의(분할)계약 체결로 예산낭비 초래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에 의하면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6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포함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2017~2019년 산청 한방약초축제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 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 지급 등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는 민간행사사업보조 집행 시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 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한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절차를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용역·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수의계약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에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르면 공사, 용역·물품 구매 시에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시 1인 견적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시 관련규정 및 교부조건에 따라 5천만 원 이상의 용역을 계약할 경우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용역·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수의계약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산청군 ○○○○○과에서는 2017~2019년까지 산청한방약초축제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교부 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였음에도, 보조사업 추진 시 아래 【표4】와 같이 **건 *,***,***천 원의 행사장 설치·임차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을 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2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1인 견적 수의(분할)계약 체결로 다수업체의 공정한 참여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으며, 용역 낙찰하한율(88%) 적용 시 ***,***천 원 정도의 예산낭비가 예상됨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및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산청군 ○○○○○과에서는 ㉸㉸㉸㉸㉸㉸㉸위원회 조직에 축제기획을 비롯한 전문가 부족 등의 열악한 제반 환경을 극복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축제 업무 담당부서에서 각종 축제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게 되었고, 담당자의 업무 연찬 부족과 긴급성을 요하는 업무적 특성으로 본 건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잘못된 행정절차 등은 바로 잡아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고, 민간행사보조금 집행을 위해 (가칭)㉸㉸㉸㉸㉸㉸㉸ 설립을 추진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산청군수는

① 2018년 1인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산청한방약초축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실(현, ◇◇◇◇과) 지방○○○○○○, 2019년 1인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산청한방약초축제 업무를 부적정 하게 처리한 ○○○○○실(현, ○○○○○과) 지방○○○○○○, 2017~2018년 1인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산청한방약초축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책임자 ○○○○○실(현, ○○○○○) 지방○○○○○○, 2019년 1인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산청한방약초축제 업무를 부적정 하게 처리한 실무책임자 ○○○○○실(현, ◇◇◇◇처) 지방○○○○○○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되므로 “경징계” 처분하시고,(경징계)

또한, 2017년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산청한방약초축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실(현, ◇◇◇◇과) 지방○○○○○○에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② 산청군에서 직접 주관함에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보조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집행잔액 ***,***천 원은 산청군으로 반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③ 앞으로 관련법령 연찬을 통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1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요구

제 목 산청승마장 민간위탁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산청군(○○○과)
조 치 기 관 산청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산청군 ○○○과에서는 20**. *. **. 산청군 ■■■ ■■■ ■■■-■번지 일원에 부지는 ㉠㉠㉠ 외 2명으로부터 15년 무상으로 제공 받아 부지면적 **,***m²에 시설물 면적 *,***m² 승마장을 신축하여 ○○○○○○체험마을(대표자 : ㉠㉠㉠)에 20**. *. **. 수의계약으로 두 번째 재계약하여 관리·위탁을 체결 운영하게 하고 있다.

2. 행정재산 관리·위탁 조례 미제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39조제1항에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에서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에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승마장의 건축물 소유권은 산청군으로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시설관리 및 사용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위·수탁계약 체결 시 사용료(수입금)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산청군 ○○○과에서는 20**년 *월 승마장을 신축하여 수탁자에게 관리 위탁하면서 시설 관리에 따른 민간위탁금 경비 지원 대신 사용료(수입금)를 자체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음에도 관리위탁 계약서에는 시설이용에 따른 사용료(수입금)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승마장 시설관리 및 사용료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지도 아니한 채 승마장 이용객에게 관련 근거 없이 회원요금 *회 **천 원에서 월 ***천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자체수입으로 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2. 재계약 시 관리능력 등 평가 미실시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하며, 제2항에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하고, 제3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서는 수탁기관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군수는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위원회에 요청하여 수탁자에 대한 관리능력 등의 심사를 받아 위원회의 심사결과와 함께 60일 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고 수의계약으로 한 번 이상 재계약 시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산청군 ○○○과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20**. *. **,~20**. *. **. 수의계약으로 수탁자인 ○○○○○○체험마을(대표자: ㉠㉠㉠)과 승마장 관리위탁을 두 번째로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 평가를 위원회에 요청하여 심사를 받아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회에 보고 후 갱신하여야 함에도 관련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재계약한 사실이 있다.

3. 민간경상보조사업 정산검사 미실시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또한,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2조에는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산청군 ○○○과에서는 아래 【표3】 과 같이 승마체험지원사업으로 산청승마장(관리자 ㉠㉠㉠)에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매년 **,***천 원 지원하면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여 함에도 20**~20**년 *년 동안 승마체험지원사업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산청군 ○○○과에서는 산청승마장은 ○○○○○○체험마을에서 사업부지를 무상으로 **년간 제공한 점, 수익 발생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내부방침을 통하여 위·수탁 계약 체결을 하였고, 앞으로 위·수탁 계약 시 관련근거를 마련하여 체결하고 계약 관련 법·규정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내용을 평가 및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산청군수는

① 산청승마장 행정재산 관리·위탁 조례 제정, 재계약 시 관리능력 등 평가,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하지 않아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실무담당자 ○○○과 지방◆◆◆◆ ◆◆◆, ○○○과(현, ○○면) 지방◆◆◆◆◆ ◆◆◆, 실무책임자 ○○○과 지방◆◆◆◆ ◆◆◆에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의거 각각 “훈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훈계)

② 승마장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포함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주시고 수탁자의 위·수탁 계약서는 관리비용을 포함하여 재계약하여 주시며, 20**~20**년 *년간 승마체험지원사업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③ 앞으로 관련 법령연찬을 통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요구

제 목 내정 소하천 사방댐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산청군(○○○○과)

조 치 기 관 산청군(○○○○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산청군 ○○○○과에서는 내정 소하천 관리를 위해 사방댐 정비사업을 아래와 【표1】 과 같이 실시하였다.

2.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산림기술용역”이란 산림 기술을 응용하여 산림사업을 설계·감리하고 안전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산림사업 설계와 감리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으로 건당 공사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설계와 감리를 하여야 한다.

「사방사업법」 제2조에서 “사방사업”이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갖춘 자가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서 “엔지니어링기술”이란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과학기술로서 건설부문은 1) 도로·공항, 2) 항만·해안, 3) 철도, 4) 교통, 5) 농어업토목, 6) 도시계획, 7) 조경, 8) 구조, 9) 수자원개발, 10) 상하수도, 11) 토질·지질, 12) 측량·지적, 13) 품질시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산청군에서는 내정 소하천 사방댐 설치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을 시행하면서 산림기술용역업에 등록한 자에게 설계·감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에 의한 수자원개발 면허만을 가진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사방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설계 기술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3. 내정 소하천 관급자재 구입 전문건설업 검토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 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에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경계·방호·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와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종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댐 공사 중 본체 및 여수로 부분은 10년, 이외의 시설은 5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공사 철물에 대하여는 2년으로 하고 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리고 관급자재를 구입함에 있어 사방댐 버트리스 자재 구입에 대해 현장 설치 조건의 방재신기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산청군에서는 전문건설업 등록이 필요 없는 단순 구조물 조립으로 판단하였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상에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는 전문건설업에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방재 신기술 적용 버트리스에 대한 하자책임기간을 2년으로 부적정하게 설정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산청군 ○○○○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받은 예산으로 소하천 내에서의 사방댐 설치로 ○○○○와 조율을 하지 못하고 신속 집행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긴급하게 발주함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에 등록된 자와 계약하지 않고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에 따른 수자원개발면허를 가진 업체와 계약하게 되었다는 답변과

또한 조달청에서 전문건설업 적용 해당여부의 문의에 대하여 공장에서 빔을 가공하여 현장으로 운반 한 후 볼트 체결로 처리하는 간단한 공정으로 전문건설업 면허가 필요 없다는 해당 업체의 회신을 근거로 판단하였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방재신기술로 적용하여 납품된 버트리스의 하자기간(2년)을 사방댐으로 적용하여 5년으로 기간 연장 조치토록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산청군수는

① 내정 소하천에 사방댐 설치공사를 위한 설계용역 시행에 대한 검토와 구매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설정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처리한 **실무책임자 ○○○○과 지방◆◆◆◆ ◆◆◆◆**에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고(**훈계**)

② 또한 버트리스 부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재설정하시고 향후 사방댐에 대한 전문기술 검토 없이 설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부서인 ○○○○과와 협의 및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시고 설계 시 반영된 공법자재에 대하여는 계약부서의 자재선정위원회를 거쳐 제품을 선정하는 등,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숙지 및 직무교육 강화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숲가꾸기사업 수의계약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산청군(○○○○과, ⅢⅢ과)

조 치 기 관 산청군(○○○○과, ⅢⅢ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산청군 ○○○○과는 매년 조림지 풀베기, 덩굴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등의 숲가꾸기 사업을 ⅢⅢ과에 계약 의뢰하였으며 ⅢⅢ과에서는 수의 2인 견적으로 관련 계약을 추진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부문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정한 공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때 공사 종류별로 금액 한도를 정하여 소규모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표1】과 같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표1】 수의계약 구분

구 분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용역·물품, 그 밖의 계약 ²⁸⁾	비 고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추정가격 8천만 원 이하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지정정보처리 장치 이용
수의계약 (1인 견적)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지정정보처리 장치 미이용

28)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 등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아울러, 숲가꾸기사업은 감사원의 산림청 기관운영감사 시(2011년) 수의계약 금액 한도와 관련하여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사업을 정의하고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경우 법조문에 공사에 대한 정의가 없거나 공사면허를 요구하지 않는 등 공사 관련 법령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에 해당되어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처분이 있었으며,

또한, 2015년부터 발행된 산림청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숲가꾸기 예산 집행 및 관리분야)²⁹⁾과 매년 발행·배포 되는 「경상남도 산림시책」(숲가꾸기 세부 추진계획 예산 집행)에도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 감사 시 숲가꾸기사업은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규모를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숲가꾸기사업은 소액 수의계약(2인 견적 등)이 아닌 일반입찰 등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했어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과에서는 관련 규정에 구체적인 확인 없이 ㉡㉡과에 계약 요청했으며 ㉡㉡과에서는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숲가꾸기사업은 일반입찰 등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숲가꾸기사업 59건을 소액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으로 체결함으로써 20,162천 원(기초금액 대비 일반 경쟁 입찰 낙찰률 87.745% 차액) 정도의 예산절감과 업체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9) 숲가꾸기 예산 집행(2015년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

○ 숲가꾸기사업은 소액 수의계약 규모를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로 적용

-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 감사 시 숲가꾸기사업은 계약 관련 법령의 수의계약 대상에서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 해당하여 5천만 원 이하로 적용 필요

관계기관 의견

산청군 ○○○○○과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담당자의 잦은 인사 이동과 사업기준 변경에 대한 업무 연찬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 방식대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근본적 원인이고 업무 연찬 및 공유로 변경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계약부서인 ○○○과에서는 사업 발주 시 관련법에 의거 일반입찰을 실시하여 공개경쟁을 유도하고 공정한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산청군수는

- ①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 감사사례와 산림청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 및 「경상남도 산림시책」을 위반하여 수의계약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실무담당자 ○○○○○과 지방○○○○과 ○○○과 실무책임자 ○○○○○과(현 ○○○면) 지방○○○○과 ○○○, ○○○과(현 ○○○○○과) 지방○○○○과 ○○○에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② 숲가꾸기사업은 소액 수의계약 규모를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로 적용하여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준수와 소속 직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개선·주의 요구

제 목 일반운영비(피복비) 집행 부적정 및 관계서류 구비 소홀

소 관 기 관 산청군(○○○○과)

조 치 기 관 산청군(○○○○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산청군 ○○○○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따라 피복비를 집행하고 관련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2. 기간제근로자 등의 일반운영비 피복 구입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의하면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등으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 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않아야 하며, 소속 공무원 외의 자에게 피복을 구매하여 지급 할 수 없으며 현업부서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의 피복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의 피복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의 피복비는 보수에서 집행해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산청군 ○○○○과에서는 【표】와 같이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의 피복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에서 집행해야 함에도 일반운영비에 예산을 편성하여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기간제근로자 안전화 구입 등으로 *년간 *,***천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3. 피복비 집행 관계서류 구비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17조1항에 의하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대가의 지급)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 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라고 규정되어 있고,

「산청군 재무회계 규칙」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는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 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물품 구입 시에는 관계서류에 따라 검사 또는 검사조서 등을 작성 후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 의거하여 적법여부를 판단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과에서는 【표】와 같이 **건의 피복비 *,***천 원을 집행하면서 피복 지급의 근거가 되는 수령자 배부내역 또는 수령(인수)증과 피복 구입에 따른 납품사진 등 예산 집행 및 지출 근거가 되는 관계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감사일 현재까지도 제출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산청군 ○○○○과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세출예산 집행기준 미숙지로 일반운영비에서 피복비를 집행했으며, 지출 품의의 적정성, 관련 증빙서류 미확인 등으로 적정하지 못한 업무 추진은 교육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산청군수는

- 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지방계약법 제17조, 제18조 「산청군 재무회계 규칙」제50조에 의거 기간제근로자의 피복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과목에서 편성하여 집행하시기 바라며, 집행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는 등 업무에 대해 “개선”하시기 바랍니다.(개선)
- ② 관련 법령 연찬을 통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개선·시정 요구

제 목 주부민방위기동대 관리·운영 및 활동실비 지급 부적정

소 관 기 관 산청군(○○○○과)

조 치 기 관 산청군(○○○○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산청군에서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 시 현장 수습·복구 초기 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해 주부민방위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동대 활동 시 참여한 대원들에게 실비를 지급하고 있다.

2.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미제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민방위기본법」 제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 사태로부터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민방위 사태를 신속히 수습·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하되, 20~40세 남성 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방위대 편성 지침」(행정안전부 민방위과)에 따르면 지원 민방위대는 지방자치단체 지역여건 및 특성에 맞게 운영하며,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등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민방위 사태 시에는 대피 안내 유도, 현장 수습·복구,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지원 등 자발적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표2】**와 같이 임무와 역할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상남도 ○○○○과에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추진상황 제출(2015. 7. 28.)’ 문서를 통해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시·군의 실정과 여건에 맞게 조속히 추진하도록 안내하였다.

따라서, 산청군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을 위해 편성 기준, 구비서류, 조직, 대장 임기, 임원 임무, 정원, 실비 지급, 연합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산청군 ○○○○과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어 주부민방위 기동대의 편성, 조직, 임무, 정원 등이 아무런 기준 없이 부적정하게 관리·운영되고 있다.

3.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실비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민방위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수습 및 복구가 어려운 경우와 ①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②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한 민방위 관련 시설의 설치 및 보수, ③ 민방위 물자 및 장비의 보급 및 비축, ④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가 필요한 경우 재정상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회계법」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면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으며 다만, 출납원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하여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급식비 기준 단가(8,000원)를 적용하여 계좌 입금하고(단체급식 및 다과 시에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에 의한 결제를 원칙으로 함), 교통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관련 규정에 맞도록 산정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를 확인해 정당하게 지급이 되어야 하며, 실제활동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에게 계좌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산청군 **개 읍·면에서는 20**~20**년까지 총 ***회 **,***천 원의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실비를 지급하면서 행사 참석자 계좌로 입금하여야 할 실비를 민방위대원들의 동의를 받아 대장 또는 총무의 계좌로 총 **회 일괄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참석자 서명부 및 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불충분함에도 **명에게 *,***천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산청군 ○○○○과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조속히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겠고, 부적정하게 지급된 실비는 환수 조치하고, 일괄 지급하던 활동실비는 참석한 대원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주부민방위기동대 업무 전반에 대해 재정비 및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산청군수는

- ① 주부민방위기동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주시고, 조례 제정 후 민방위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역 내 안전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개선)
- ② 또한, 20**~20**년까지 부적정하게 지급된 활동실비 *,***천 원은 회수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 요구

제 목 공용차량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산청군(○○과)

조 치 기 관 산청군(○○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산청군에서는 원활한 행정 및 대민 업무 수행을 위해 ***대의 공용차량을 「산청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관리·운용하고 있다.

2. 공용차량 보험 가입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5. 분할계약의 금지의 라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에서 공용차량 차량 보험 가입에 따른 특혜 시비가 일어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논란과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용차량 운영과정의 예산 낭비 방지 권고안」을 2012. 7. 17. 자로 의결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1663(2012. 7. 27.)호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직유관단체에 제도 개선하도록 문서로 발송하였다.

제도개선 권고사항은 현행 차량보험을 차량별로 개별 가입 시 소액계약을 이유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특정보험사와 계약 체결이 빈발하고 특정 보험사에 대한 편중 및 지속 가입에 따른 특혜 시비 논란, 내부 직원과 관련된 보험사에 가입하는 등 유착 관계 발생, 차량보험 가입을 위한 청탁, 항의성 민원 등으로 일선 현장의 차량관리 업무상 부담과 애로가 발생하고 일괄 가입이 아닌 차량별 개별 보험 가입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므로 공용차량 보험 가입 시 공개경쟁입찰을 의무화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보험 가입 시 차량별 개별방식이 아닌 통합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산청군에서 관리·운용 중인 행정차량 전체에 대한 보험은 ⅣⅣ과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보험 수행업체를 선정하였어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산청군 ○○과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 감사일 현재까지 3년간 공용차량 보험에 대한 업체를 선정하면서 공개경쟁을 통해 계약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계약 만료일 직전 보험사와 차량별 개별방식의 수의계약을 하여 매년 공개 경쟁 대비 약 *,***천 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였으며, 개별 가입 시 소액계약을 이유로 특정 보험사에 대한 편중 및 지속 가입에 따른 특혜 시비 논란, 내부 직원과 관련된 보험사에 가입하는 등 유착관계 발생, 차량보험 가입을 위한 청탁 등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3. 공용차량 정수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청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장 차량 정수 관리에 따르면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 배정·임시차량 정수 배정·용도변경 승인·규모변경 승인·차량교체 승인·차량교환 승인을 군수에게 요청할 때에는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를 작성하여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군수가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단위 부서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하고, 군수는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위 부서에서 일반 현황, 기동력 소요 판단, 증차 또는 교체사유, 소요예산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하면, 군수는 요청 부서의 기능과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산청군 ○○과에서는 2017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대의 공용 차량을 교체·구입하면서 단위부서에서 차량 정수 배정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보완 조치 없이 차량 증차, 교체 필요성 등의 검토를 소홀히 하였으며, 총 *대의 차량은 차량 구입 후 정수 승인을 받는 등 공용차량 정수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임차차량 계약 및 관리·운영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청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³⁰⁾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차량 정수”란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용도·규모별 차량 대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0) “자동차”란 원동기에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재무과장은 다음 제1호의 서류를, 차량을 관리 운행하는 단위 부서의 장은 보유 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각각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① 차량정수관리대장, ② 배차신청(통보)서, ③ 차량유류수불대장,
④ 차량운행일지, ⑤ 차량정비대장, ⑥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용차량 운영과정의 예산 낭비 방지 권고안」에 따르면 공용차량 임차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임차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하도록 권고하였다.

따라서, 차량 임차 시에도 단위 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임차하여야 하며, 임차차량도 공용차량에 준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임차 계약 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야 하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면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유사한 사업일 경우 통합발주를 통해 지출성과를 극대화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산청군 ㉠㉡㉢㉣과, ㉤㉥㉦㉧과, ㉨㉩㉪㉫과에서는 임차차량을 관리·운용하면서 임시차량 정수 배정 요청 없이 차량을 임차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차량 관리 시 배차신청서, 유류수불대장, 운행일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함에도, ㉤㉥㉦㉧과에서는 2017년도부터 2020년 감사일 현재까지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공용차량 운행 및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산청군 ㉠㉡㉢㉣과, ㉤㉥㉦㉧과, ㉨㉩㉪㉫과에서는 임차계약 시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매년 임차계약을 하였으며, 특히 ㉨㉩㉪㉫과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 감사일 현재까지 매년 3대의 차량을 임

차하면서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유로 임차업체에서 수기로 제출된 견적서를 비교 후 각 담당별로 최저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산청군 ㉠㉠㉠㉠과, ㉡㉡㉡㉡과, ㉢㉢㉢㉢과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관련 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소홀히 하였으며,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및 공용차량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산청군수는

-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공용차량 보험업체 선정 시 차량별 개별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실무담당자 ㉣과(현 ㉣㉣㉣과) 지방㉤㉤㉤㉤ ㉤㉤㉤과 ㉣과 지방㉤㉤㉤㉤ ㉤㉤㉤에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국민권익 위원회에서 권고한 「공용차량 운영과정의 예산낭비 방지 권고안(2012. 7. 17.)」을 준수하여 공용차량 관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조리와 예산낭비 요인을 개선하고 도덕적 해이 차단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요구

제 목 특허공법 반영교량 발주 및 관급자재 구매검토 부적정

소 관 기 관 산청군(@@과, ##과)

조 치 기 관 산청군(@@과, ##과)

내 용

1. 업무개요

산청군 @@과(전 @@@실)에서 시행한 「00진입교량 확포장공사」는 2017.10.20. SS군 소재 A건설(주)(대표 WWW)와 도금액 585백만 원에 계약 체결하여 같은 해 10.25. 착공하고 2018. 9. 6. 총괄 3회 설계 변경으로 도금액 719백만 원으로 변경 계약하여 2018.10.12. 준공한 사업이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 사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³¹⁾ 및 단일공사³²⁾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 2018.3.30.)」

Ⅱ.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1-6.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는 기본적으로 통합발주를 해야 하며 예산 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통합발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청군은 공사의 시공성을 증대시키고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일구조물인 교량의 콘크리트빔을 관급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공사내역에 반영하여 공사도급업체 책임으로 교량전체를 일괄 시공하도록 통합하여 발주하도록 계획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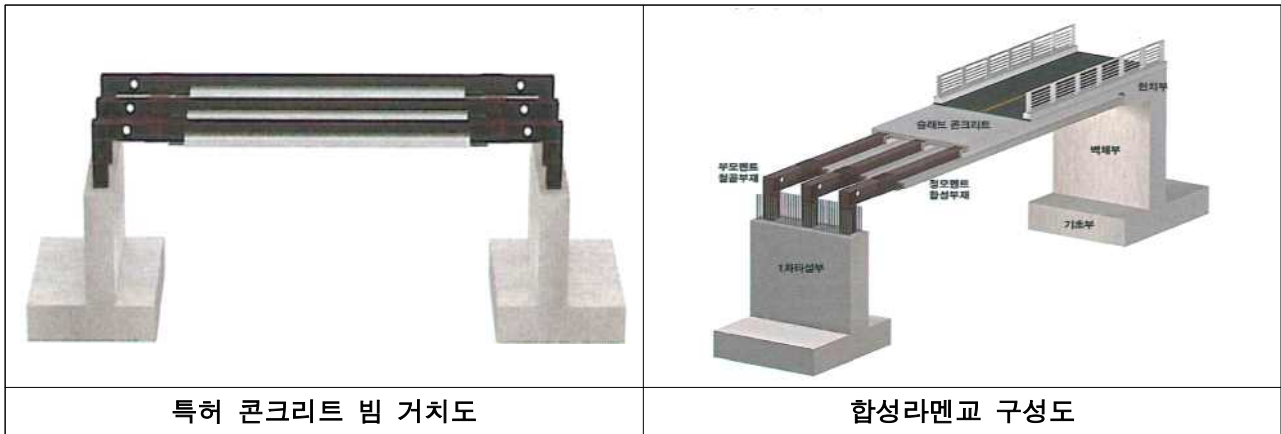
가. 동일구조물공사 분할계약

산청군 @@과(구 @@@실)에서 발주한 「00진입도로 확포장공사」로 신설되는 \$\$교는 합성라멘 콘크리트빔이 적용된 교량으로서 공사도급업체가 기초 및 교대, 교각을 시공해 놓으면 그 위에 콘크리트빔 생산·납품업체가 콘크리트빔을 거치하고 다시 그 위에 공사도급업체가 슬래브를 타설하여 시공하므로 기초 및 교대, 교각, 콘크리트빔과 슬래브는 서로 강결되거나 접합되어 차량하중 등 외력에 함께 거동하는 일체화된 구조물로서 각 부재를 서로 다른 업체가 시공할 경우 작업상의 혼잡 및 하자발생 시 책임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의 우려가 있고 이러한 분쟁으로 하자보수의 지연 등으로 교량유지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31) “동일구조물 공사”란 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32) “단일공사”란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그림] 합성 라멘교 거치현황 및 구성도



그런데 산청군은 동일구조물인 교량의 거더³³⁾ 부분을 기초, 교대, 교각 및 슬래브 등의 공사와 분리하여 특정업체가 현장에 직접 납품·설치하도록 물품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관급자재로 별도 발주함으로서 동일 구조물인 교량을 2개 업체에서 분할 시공하게 되어 작업상의 혼잡을 발생시키고 향후 하자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도록 지방계약법에 위배되게 동일구조물공사인 교량을 분할하여 발주하고 계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특허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검토소홀

또한, 산청군은 \$\$교에 반영된 특허제품인 합성형라멘 콘크리트빔 구매를 위하여 수의계약요청사유서를 첨부하여 ##과를 통해 경남지방조달청장에게 관급자재(현장설치도)로 수의계약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남지방조달청에서는 물품·공사가 혼재된 계약에 해당되어 면허가 요구되는 물품설치 구매 건에 대한 분리발주 가능여부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과 함께 최근 감사원에서 일부 특허·실용실안·디자인등록 제품 간에 기능이나 성능 등이 유사하여 대체·대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 나라장터(G2B) 종합쇼핑몰 등에 등록된 동일(유사)한 제품을 참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대체·대용품 유무를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산청군에 요구하였다.

33) 교량의 상부구조물을 떠받치는 보(beam)를 뜻하는 말로서 I형이나 박스형 단면으로 힘이나 비틀림에 입체적으로 저항하도록 만들어진 구조물.

그러므로 산청군은 조달청에서 요구받은 물품과 공사의 분리발주 가능여부와 함께 현재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특정회사 제품이 아니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여부 및 특허청·조달청 등에 유사제품 등을 조회하여 적절한 대체·대용품 존재유무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했다.

그런데 산청군이 특허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콘크리트빔 산출내역서에는 제작과 설치비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공장에서 제작된 빔 자재는 설치와 별도로 단독구매가 가능한데도 물품과 공사의 독립성·가분성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분리발주가 불가능하다고 검토하였으며, 대체·대용품 존재유무에 대하여는 교량 공법 선정을 위한 특허공법 심의회 개최 시 유사 특허교량 5개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특정회사 제품을 선정하였으므로 공사발주단계에서 이미 대체·대용품이 다수 존재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달청에 등록된 유사제품을 조회하면 콘크리트 빔 생산업체가 다수 존재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각 제품별로 제작방법에 대한 차이 외에는 기능 및 성능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 대체가능한 제품이 존재하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유사제품이 없으며, 현재 설계에 반영된 특정회사 제품 외에는 적절한 대체·대용품이 없다고 검토한 검토의견을 경남지방조달청장에게 회신함으로써 유사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업체에 입찰 참여기회를 상실되게 하여 설계에 반영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산청군은 지방계약법 미 숙지와 업무연찬부족으로 관련규정을 철저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동일구조물인 교량공사를 분리 발주하였으며, 공법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 관급자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유사제품 조회는 관례적으로 시행하는 대체용품 조회업무라고 생각하여 수의계약검토의견서 작성을 소홀히 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지방계약법령 숙지와 업무연찬 강화 등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산청군수는

① 동일구조물인 교량공사를 통합하여 발주하지 않고 거더 부분을 관급자재로 별도 구매·설치하도록 계획하여 교량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고 특허제품에 대한 대체·대용품이 다수 존재하는데도 대체·대용제품이 없다는 수의계약요청사유서를 작성하여 특정제품으로 수의계약을 요청한 @@@실(현 @@과) 전 실무담당자 B와 실무담당자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전 실무책임자 C에게 앞으로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아울러, 동일구조물인 교량공사를 발주할 경우 특허부분인 콘크리트 빔 등은 공사내역에 반영하여 공사도급업체 책임으로 교량전체를 일괄 시공하도록 통합 발주하는 방안과 특허제품 등을 관급으로 구매할 경우 특허제품 간 기능이나 성능 등이 유사한 대체·대용제품 존재유무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시고,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법규와 규정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요구

제 목 기반시설(도로)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미 이행
소 관 기 관 산청군(@@과)
조 치 기 관 산청군(@@과)
내 용

1. 업무개요

산청군은 지역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산물의 생산·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건설·관리 등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도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사유, 위치, 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8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도로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에 포함된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과 도로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다음 해의 도로사업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하여는 법 제9조(도로의 노선지정)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노선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르면 관할구역에 대한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시장·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는 관리계획을 입안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같은 법 제31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따르면 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에 따른 기반시설을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상기 내용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따르면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보전용도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서 규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사업계획면적이 5,000㎡ 이상,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면적 7,500㎡ 이상,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면적 10,000㎡ 이상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에 따라 해당사업의 승인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사전공사의 금지 등)에 따르면 사업자는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협의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착공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산청군은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비롯한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도로노선을 지정하거나 도로구역으로 결정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공고(고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산청군은 「##도로 개설공사」 등 3건의 기반시설(도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이 확정된 구간의 사업시행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로노선을 지정하거나 도로구역으로 결정하여 그 내용을 공고(고시)하여야 하는데도 노선지정 및 도로구역결정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군 관리계획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비롯한 사업시행으로 저촉되는 농지·산지·하천 등 각종 인·허가사항을 의제 받지 못하여 개별법령으로 별도 협의하거나 일부항목을 누락하고 협의하는 등 행정절차이행을 소홀히 하였으며,

특히, 기반시설(도로)사업 시행으로 변경되는 노선 및 도로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43조 등에 따른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없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이 고시되지 못하여 현실지형과 지형도면이 불일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의 승인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는 협의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착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를 누락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에 대한 협의절차 없이 공사를 착수하여 시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기반시설(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산청군은 관련법규에 대한 업무미숙지로 노선지정 및 도로구역 결정(변경) 절차를 비롯한 관련 인·허가사항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미 이행된 행정절차는 관련법에 따라 조속히 이행 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산청군수는

① 도로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 노선지정 및 도로구역 결정(변경) 절차를 비롯한 군 관리계획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발주한 @@과 전 실무담당자 A와 현 실무담당자 B, 실무담당자들의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과 전 실무책임자 C와 현 실무책임자 D 에게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아울러,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도로법」에 따른 노선지정 및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비롯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누락된 행정절차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시정)

③ 앞으로, 공공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사항에 대하여 사업승인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발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관련부서 담당직원들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와 규정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요구 및 권고

제 목 @@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산청군(##과)

조 치 기 관 산청군(##과)

내 용

1. 업무개요

산청군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00시설 확충사업」은 2020. 3.23. SS시 소재 A 건설(주)(대표 000)과 도금액 5,648백만 원에 계약 체결하여 같은 해 3.25. 착공하고 2023. 3. 9.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사유, 위치, 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는 관할 구역에 대한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시장·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는 관리계획을 입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같은법 제31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따르면 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에 따른 기반시설을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상기 내용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 착공 전에 안전관리조직 및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자가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건설안전 점검기관(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제21조 [별표 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³⁴⁾를 기준으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같은 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에 따라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등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는

34) 교량의 경우 - 1차: 가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 시(콘크리트 타설 전), 2차: 하부공사 시공 시, 3차: 상부공사 시공 시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등 공사시행 전반을 검토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선정 등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따른 용역감독자는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예정공정표,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고,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 계약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용역준공 전에 미리 시정 조치하는 등 용역과업이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용역과정을 면밀히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등 행정절차 미 이행

산청군은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변경되는 도로구역을 결정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공고(고시)하여야 하며, 군 관리계획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비롯한 공사시행으로 저촉되는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하여도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산청군은 본 공사 시행으로 기존도로가 확장 또는 신설되는 등으로 도로의 구역이 변경되는데도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여 고시하지 않고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도로구역 결정(변경) 절차를 누락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이 고시되지 못하여 현실지형과 지형도면이 불일치하는 결과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비롯하여 사업시행으로 저촉되는 각종 인·허가사항을 의제 받지 못하여 개별법령으로 별도 협의하였거나 공사발주 후 지연하여 협의하는 등 행정절차이행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나. 안전관리계획 검토소홀 및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또한, 본 공사로 신설되는 QQ교는 연장 L=184m의 합성형라멘+프리플렉스빔 교량으로서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2종 시설물에 해당되어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이므로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산청군은 본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금액에 안전관리비를 반영하지

않고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공사착공 전에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내용에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관리대책 등이 누락되는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작성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아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등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다. 설계도서 검토소홀 등 감독업무 소홀

산청군은 본 공사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 결과물로 납품받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용역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발주 후에는 설계도서가 현장조건과 부합되는지 여부와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가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 하는 등 공사감독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산청군은 실시설계용역으로 납품받은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교량기초 시공을 위한 암 터파기는 대형 굴착장비인 굴삭기와 브레이커 등으로 작업이 계획되어 있어 터파기 작업 시 이미 지반을 충분히 고르면서 작업이 가능하여 별도의 면 고르기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면 고르기 비용을 별도로 반영하여 공사비 약 18,427천원 상당을 과다하게 반영하여 발주 하였으며,

교량가설에 따른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위하여 반영된 낙하물 방지망은 공사원가계산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하천오염방지를 위하여 반영된 오탁방지망은 환경보전비로 사용이 가능한데도 별도로 공사내역에 반영하여 공사비 약 64,529천원 상당을 중복 계상하여 발주

하는 등 현 설계대로 시공할 경우 위 도합 약 82,956천원 상당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도록 설계도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공사발주 후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실정보고나 설계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산청군에서 시행중인 본 공사로 신설되는 QQ교(연장 184m)는 국가하천인 경호강을 횡단하는 교량으로서 시점부 교대를 기존교량과 동일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계획함에 따른 시공 간섭으로 신설교량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교량 간섭구간인 기존교량 79m 구간을 철거한 후 임시가교를 설치하여 통행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가교설치기간 동안 우회도로를 지정하여 기존교량의 통행을 전면 제한시키도록 계획하였다.

하지만, 임시가교설치 기간과 신설교량 설치에 소요되는 기간을 비교해 보면 임시 가교설치에 따른 통행제한기간은 기존교량 철거기간과 가교설치에 필요한 절대공기 등을 합산하여 약 13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존 교량 간섭구간(L=79m)에 대한 신설교량 설치공기는 약 19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불과 60일 정도의 기간밖에 차이가 없으므로 임시 가교 없이 본 교량을 바로 설치하는 것이 경제성 및 통행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한데도 임시가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함으로써 현 설계대로 시공할 경우 가교설치비용 약 613,198천 원 상당의 예산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도록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다.

관계기관 의견 산청군은 업무미숙 및 관리감독업무 소홀로 도로구역 결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발주하고 안전관리계획 및 사업추진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미 이행된 행정절차와 미흡하게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은 관련법령에 따라 조속히 이행·보완하도록 하고 과다계상 된 공사비는 설계 변경하여 감액하겠으며 가교설치여부에 대하여는 주민의견반영을 위한 설명회 개최와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앞으로 법령검토 및 현장여건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관리감독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산청군수는

- ①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비롯한 군 관리계획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발주하고 안전관리계획과 사업추진에 따른 검토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과 현 실무담당자 B와 실무담당자의 행정절차이행에 대한 지도·감독업무와 사업추진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과 현 실무책임자 C에게 앞으로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② 아울러,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관리계획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누락된 행정절차와 미흡하게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은 관련법령에 따라 조속히 이행·보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소홀로 과다하게 반영된 공사비 약 82,956천 원 상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계변경 하여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③ 또한, QQ교 가설에 따른 임시가교 설치에 대하여는 가교설치와 본 교량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통행제한기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하여 경제성 및 통행안전성 등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사업추진 전반을 재검토하여 가교설치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권고)
- ④ 건설공사 담당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승인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발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에 부합되는 경제적인 설계 및 시공이 되도록 설계용역 및 공사감독 업무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요구

제 목 사업 인가절차 미 이행 등 사업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산청군(@@과)
조 치 기 관 산청군(@@과)
내 용

1. 업무개요

산청군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EE지구 지방상수도 인입공사」는 2020. 2. 7. XX군 소재 A산업(주)(대표 000)와 도금액 4,012백만 원에 계약 체결하여 같은 해 2.12. 착공하고 2023. 1.26.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며,

「KK 급수구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는 2020. 3.18. GG시 소재 B건설(대표 000)과 도금액 3,179백만 원에 계약 체결하여 같은 해 3.25. 착공하고 2022. 3.14.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수도법」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에 따르면 일반수도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일반수도사업 인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관계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인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한 같으며, 시·도지사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르면 관할구역에 대한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시장·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는 관리계획을 입안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

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같은 법 제31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따르면 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에 따른 기반시설을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상기 내용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등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등 공사시행 전반을 검토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선정 등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따른 용역감독자는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예정공정표,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고,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 계약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용역준공 전에 미리 시정 조치하는 등 용역과업이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용역과정을 면밀히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 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수도사업 인가 등 행정절차 미 이행

산청군은 배수지 신설 등 수도시설에 대한 수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도법」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근거로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에게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인가 변경포함)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시행 전에 미리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후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등 공사시행으로 저촉되는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하여도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산청군에서 추진 중인 「EE지구 지방상수도 인입공사」 및 「KK 급수 구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시설용량 1만 톤/일

이하인 지방상수도 사업으로서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수도사업 인가대상 사업인데도 수도사업 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발주함으로써 군 관리계획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비롯한 사업시행으로 저촉되는 하천·산지 전용 등의 협의사항을 의제 받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인 배수지 시설 등에 대하여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이 고시되지 못하여 현실지형과 지형도면이 불일치 될 우려가 있도록 수도사업을 부적절하게 추진하고 있다.

나. 예산낭비요인에 대한 검토소홀

산청군은 본 공사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 결과물로 납품받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용역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발주 후에는 설계도서가 현장조건과 부합되는지 여부와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가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 하는 등 공사감독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산청군은 실시설계용역감독 및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여 「EE지구 지방상수도 인입공사」의 경우 상수관로 시공을 위한 기존도로의 포장두께를 15cm(기층 10cm + 표층 5cm)로 설계하여 포장깨기 및 복구를 계획하였으나 포장복구물량을 20cm(기층 15cm + 표층 5cm)로 산출함으로서 공사비 약 289,872천 원 상당의 예산을 과다하게 반영하여 발주하였으며,

도수관공에 반영된 취수시설은 지방2급 하천인 00천에 유공관을 매설하여 취수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관 되메우기용 골재는 현장 터파기로 굴착된

하천골재를 유용하여 사용이 가능한데도 자연자갈(강자갈)을 별도로 구입(운반 포함)하여 시공하도록 계획하여 공사비 약 79,541천 원 상당의 예산낭비요인이 있는 등 현 설계대로 시공할 경우 위 도합 약 369,413천원 상당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도록 설계도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공사발주 후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실정보고나 설계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KK 급수구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의 경우 상수관 매설에 따른 터파기 작업 시 사면붕괴 방지를 위하여 굴착 깊이 2m이상 구간에 반영된 조립식간이 흙막이는 상수관로 매설깊이를 최소 동결심도 이하로 조정하는 등 관 매설 깊이를 조정하여 간이흙막이 시공구간을 재 산정할 경우 공사비 약 135,565천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관보호용 골재로 반영된 모래는 현재 전국적인 수급 불안정에 따른 공급차질로 상대적으로 고가이므로 관 보호용 골재로 대체가능한 석분으로 변경할 경우 공사비 약 202,853천 원 상당의 예산절감과 함께 안정적으로 자재를 공급할 수 있으며, 상수관로 시공을 위한 기존도로 층에는 동상방지층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별도의 동상방지층 시공을 계획하여 공사비 약 68,815천 원 상당의 예산낭비요인이 있다.

본 공사는 총 공사비 100억 원 미만인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로서 현장 품질관리를 위하여 배치된 품질관리자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서 지출하여야 하는데도 공사내역에 별도의 품질관리활동비를 반영하여 공사비 약 76,564천원 상당이 과다 계상되어져 있으며, 단순 관로매설이 주공종인 본 공사에는 특별히 상세도면을 요하는 복잡한 공정이 없으므로 실시설계도서 및 설계도면으로도 충분히 시공이 가능하여 별도의 시공상세도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시공상세도 작성비용 약 43,519천 원 상당이 반영되어 있으며,

공사용 자재는 현장사무실 부지를 활용하여 보관이 가능한데도 별도의 자재적치를 위한 부지임대료 약 15,240천 원 상당을 반영하는 등 현 설계대로 시공할 경우 위 도합 약 542,556천원 상당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도록 설계도서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공사발주 후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실정보고나 설계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산청군은 관련법령 숙지 및 업무연찬 부족으로 수도사업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발주하고 예산낭비요인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잘못 등을 인정하면서 현재 수도사업 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낭비요인에 대하여는 설계 도서를 전면 재검토하여 신속히 변경조치 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관련법령을 숙지하고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산청군수는

①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누락하고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과 전 실무담당자 C와 실무담당자의 행정절차이행에 대한 지도·감독업무와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검사업무를 소홀히 한 @@과 현 실무책임자 D에게 앞으로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아울러, 인가청의 승인 없이 추진 중인 수도사업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른 인가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소홀로 과다하게 반영된 공사비 약 911,969천 원 상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계변경 하여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③ 또한, 건설공사 담당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공공사업 시행으로 저촉되는 각종 인·허가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승인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발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에 부합되는 경제적인 설계 및 시공이 되도록 설계용역 및 공사감독 업무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경징계·훈계·시정 요구

제 목 ○○○○ 신축공사 설계변경 및 준공전 사용 부적정

소 관 기 관 ○○군(●●과, ◇◇◇◇과, △△△△과)

조 치 기 관 ○○군(●●과, ◇◇◇◇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군 ●●과는 「○○○○ 신축공사」를 위해 ○○군 소재 ■■■■■(주)(대표 AAA)과 2019. xx. xx. ○○○백만원에 계약하고 2019. xx. xx. 착공하여 2020. xx. xx. 제3회 설계변경 시 도금액 ○○○○백만원으로 변경 계약하여 준공하였음.

2. 행정절차 이행없이 공사시행 및 공사준공 이전 무단 사용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규정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같은 법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 및 도시·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 제1항 규정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공사 완료보고서에 준공조서, 설계도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제2항 규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하고, 제3항에서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같은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항 규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에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항 제6호 나목 규정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금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 또는

사용검사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군은 「○○○○ 신축공사」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건축사사무소 ▽ ▽(대표 BBB)과 ○○○○천 원에 계약하여 2019. xx. xx. ~ 2019. xx. xx. 기간 동안 용역을 시행하였고, 공사 착공이후 2019. xx. xx. 최초 건축허가(협의)하였다.

이후 건축물 위치변경 및 건축공간 확충을 위해 2019. xx. xx. 및 2019. xx. xx. 두차례에 걸쳐 ‘○○○○ 신축 변경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내용 및 이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 세부현황은 각각 [표1] 및 [표2]와 같다.

○○○○ 건립을 위한 부지는 군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되어 있으므로 부지조성 및 건축물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 ●●과는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사전에 득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공사 착공이후 약 5개월이 경과하고 구조체 공사가 완료된 시점인 2020. xx. xx. 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다.

그리고, 건축규모 및 위치이동을 위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면 「건축법」 규정에 따라 변경 시공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지하층 층수가 2개층 증가하고 연면적이 599.07㎡에서 970.78㎡로 당초 대비 약 62%나 증가하였으나, 공사업체의 실정보고 사항을 우선 승인하여 공사업체가 선공사를 시행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른 건축허가 변경은 실정보고 승인이후 3개월이 경과한 2020. xx. xx. 완료되는 등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건축허가 변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용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의 당초 준공기한은 2020. xx. xx.이었으나, ○○○군은 최종(3회) 설계변경을 시행하면서 준공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부적절하게 공사기간을 5일 연장하였고, ■■■■■(주)은 2020. xx. xx. 준공계를 제출하였다.

○○○군은 준공검사 기한 마지막 날인 2020. xx. xx. 「지방계약법」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또한, 「건축법」과 관련하여 공용건축물인 경우 사용승인 절차에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행정절차상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지 건축관계법령의 기준을 예외로 적용하는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³⁵⁾ 공용건축물이라 할지라도 허가권자가 공사완료가 적법하게 되었음을 인정하여야 건축물대장 등재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군 ●●과는 ○●과에 2020. xx. xx. 사용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

「하수도법」 및 「○○○군 하수도 사용 조례」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을 위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군 ●●과는 2020. xx. xx. ㉠과로부터 건축협의를(변경) 통보를 받으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천 원을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납부하도록 안내받았다.

3. 실시설계 용역 계약 방법 및 과다한 설계변경 부적정

「○○○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규정에 따르면 공사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 1회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계약심사를 받아야 하고, 「○○○군 일상감사 규정」 제2조(범위) 규정에 따르면 일상감사의 대상은 [별표 1]로 정하고 있고, 연면적 661㎡ 이상인 건축공사이거나 설계변경 10%이상 증액될 경우 시행품의전 일상감사를 받아야 한다.

- 194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시행령 제59조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공사 설계의 변경)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군은 착공이후 건축물 위치변경 및 건축공간 확충을 위해 2019. xx. xx. 공사업체인 ■■■■(주)에 ○○○○ 신축공사의 설계변경을 요구하였고, 공사업체는 감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던 ▷▷▷▷(대표 CCC)에게 설계용역을 의뢰하면서 건축공사 1회 변경 시 설계비 ○○○○천 원을 도급공사에 반영하였다.

「○○○○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최초 건축사사무소 ▽▽ (대표 DDD)과 ○○○○ 천 원에 계약하여 2019. xx. xx. 준공되었으나, ○○○군은 공사 착공이후 주차공간 및 건축공간을 확보하고 전망이 좋은 곳으로 건축물 위치를 이동하고자 당초 설계용역

을 활용하지 않고, 설계 용역을 재시행하게 함으로써 예산 〇〇〇〇천 원을 낭비하였다.

또한, 「건축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하여야 하고 수의계약 금액범위를 초과하는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경쟁입찰로 발주하여야 하는데도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건설업자에게 설계용역대가를 포함하여 결과적으로 건축물의 재설계분에 대해 특정업체(감리업체)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사업체는 기본설계안 작성 후 제1회 실정보고를 제출하였으며, 〇〇군은 2019. xx. xx. 이를 승인하였고 변경된 공사내용은 [표3]과 같다.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제1회 설계변경 시 추가 설계비 〇〇백만원을 제외하고 도급공사가 〇〇〇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중 목공사 증가분이 순공사비 기준 〇〇〇백만원에 이른다. 지하1~2층은 사용하지 않는 공간인데도 전망확보를 위해 지상층을 높이하고자 공간을 형성하면서 공사비가 추가적으로 증액되는 등 설계변경 과정에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였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경우 당초 설계시 콘크리트 강도를 24MPa로 적용하였으나 구조형식상 불리한 무량판구조³⁶⁾를 사용하면서 강도를 30~35Mpa로 높게 적용하였고, 지하층에 공사단가가 높은 노출콘크리트를 사용함에 따라 거푸집 설치 및 레미콘 자재비 등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었으며, 목구조 공사로 시공하면서 벽·천장 마감재를 목재 루버로만 시공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특히 목구조 공사의 경우 수입 집성목재(스프루스)를 주요 재료로 하는 특정업체 제품을 적용하면서 품목별 단가 건적이 적절하게 적용되지 않았는데도 설계내역에 검토없이 반영하였으며, 도급업체가 설계용역을 직접 발주함에 따라 설계용역의 준공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제2회 설계변경 시에는 NLT벽체 및 바닥공사비 〇〇백만원을 삭감하였으나 바닥 장선 및 천정 스프루스 루버 등 목구조 공사 명목으로 〇〇백만원을 추가 반영하였다.

업무시설 외벽에 설치되는 시스템 창호의 경우 당초 24mm 복층유리가 반영되었으나

36) 평판바닥구조 또는 플랫슬래브구조. 보가 없이 기둥과 슬래브로 구성되며, 보를 설치하기 위하여 50~70cm의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지 않아도 되므로 층의 높이를 줄일 수 있으나 대신 두께가 두꺼운 슬래브가 필요하고, 특히 기둥 주위의 슬래브를 구멍내거나 절단하려는 힘이 크게 작용하므로 기둥 주변 슬래브를 보강해야 함(출처 : 두산백과)

42mm 삼중유리로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공사비 〇〇백만을 추가 증액하였다.

이상과 같이 〇〇군은 노출콘크리트 및 무량판 구조로 사용하지 않는 지하층을 건축하고, 공사비가 고가인 목구조 형식을 설계에 반영한 후 지속적으로 금액을 증액하였고, 외벽 창호 규격을 과다하게 설계하는 등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에어컨 설치비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부족한 실정인데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하게 설계 변경하였다.

〇〇군은 공사비가 〇〇〇백만원이 증가하여 당초 공사비 대비 48.7% 증가하였다면 1회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〇〇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및 「〇〇군 일상감사 규정」에 따라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그리하지 않아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설계변경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고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였다.

그리고, 〇〇군 ●●과는 건축규모 확대 등으로 사업예산이 부족하자 당초 설계내역에 포함되었던 토목공사 및 관급자재 대부분을 삭감하면서 포장공사 등 삭감된 물량을 △△△△과에서 발주한 「〇〇〇〇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하는 등 공사 시행방법과 절차가 부적절하였다.

또한,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준공되지 않았는데도 사용승인 신청 후 〇〇〇〇을 사용하는 등 공사 준공 절차없이 건축물 및 부지를 사용 중인 사실이 있다.

4. 지하층 검토 부적정에 따른 내화구조 미적용 및 구조안전확인 규정 미준수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1항 규정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제5호 규정에 따르면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제1항 규정에 따르면 6층 이상, 특수구조, 다중·준다중이용,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설계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고, 제6항 규정에 따르면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공사가 제18조의2제2항제3호 나목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대표 HHH)는 ○○○○을 지하2층~지상2층으로 설계하면서 지하1층 일부분을 절토한 후 건축물이 형성되도록 설계하였다.

이와 같이 건축물 바닥의 일부가 주위 지표면보다 아래에 있을 경우 건축물 주위의 지표면 평균 높이를 산정하여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1 이상이 되어야만 지하층으로 결정하고, 지하층의 최종 판단은 설계도서 등에 표시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건축된 현상을 기준으로 판단³⁷⁾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은 당초 지하층을 형성하기 위해 배면 32.4m와 양측면 5.75m(전체 길이 11.5m의 1/2에 해당)가 고저차가 있는 지표면에 접하도록 설계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건축물의 현상은 지표면과 배면부가 0.9m 이격되고, 측면부는 각각 3.3m 씩 이격되었으며, 지하층이 지표면과 접하는 연장도 부족하게 시공되었다.

설계업체인 ▷▷▷▷▷는 지하층으로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공도면을 작성하였으나, 도급업체가 설계용역을 직접 발주함에 따라 준공검사 등이 생략되어 ○○○군에 의한 허가 및 시공도면의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은 3층이상 건축물(지하1층~지상3층)에 해당되며, 3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시공하여야 하는데도, 기존 1~2층은 화재에 취약한 목구조로 시공되었으며, 벽체 및 천장마감재 모두 목재 마감재로 시공하였다.

또한,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설계자 및 감리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데도 설계자는 직접 구조 검토 및 안전을 확인하였고, ○○○군은 이를 묵인하고 방치한 사실이 있다.

5. 소방시설 설치없이 지하1층 공간을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 부적정

37) 건축행정 길라잡이 33p.(2013, 국토교통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1항 규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제1항 규정에 따르면 법 제9조 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5관련)

1. 소화설비

(중략)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격납고
- 2)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이 경우 연면적 80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

(이하 생략)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소방시설법) 규정에 따라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군 ●●과는 ㉠과-11732(20.xx.xx.)호로 공용건축물 건축협의를(변경)를 통보받으면서 ‘지하1층 피로티부분을 차고 또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경우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대상에 해당되므로 소방동의 요청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안내받았다.

그런데, ○○군은 바닥면적이 399.05㎡인 지하1층을 공간배치, 동선계획 및 시공도면(그림5)에서 알 수 있듯이 주차장으로 계획하였고, 준공이후 주차장으로 사용될 것이 명백한데도 ‘공중 보행 통로’로 사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제출하여 「소방시설법」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건축협의를 득하였다.

이후 부득이 지하1층 공간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소화설비 설치 및 소방동의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했는데도 감사기간 중 확인한 결과 ○○군은 「소방시설법」을 위반하여 건물을 부적절하게 사용 중인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과 실무담당(책임)자 EEE은 「지방계약법」상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건축법」상 공용건축물의 사용승인 특례 규정에 따라 공용건축물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계약법」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할 경우 계약서·설계서 등에 따른 계약의 이행여부 확인에 문제가 있고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므로 준공검사 후 해당 목적물을 인수한 후 사용하여야 했었다.

또한, 공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을 포함한 법령에 적합하게 건축되어야 하고, 건축물대장 등재를 위해서는 사용승인에 준하는 허가권자의 승인이 필요하나, ○○○○은 내화구조 미충족으로 인해 건축물대장 등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 같은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공사 착공 이후에 설계변경을 무리하게 한 사실에 대해 건축연면적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받아서 변경하였기 때문에 적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 착공이후 변경 설계도서가 작성되기도 전에 시공업체에게 지상2층에서 지하2층~지상2층으로 변경하고, 연면적을 2배 이상 증가하는 규모로 우선 시공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같은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② 관계기관 의견 및 판단

○○군은 건축규모 확대 필요성이 발생함에 따라 시공업체에게 변경설계용역을 의뢰하였고 사무실 이전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어 공사를 우선 시공하였으며, 이후에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보완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 요건을 보완 시공함으로써 「건축법」상 요건을 충족할 계획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업추진 또는 변경 시 사전에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도록 한 것은 당해 사업에 대한 적법 여부 등을 미리 살펴 사업이 완료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건축법」에서도 이를 위반할 경우 상응하는 벌칙이 가법지 않으며, ‘○○○○’은 변경 설계에 대한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사항을 적법하게 치유하는데 상당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사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군의 답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징계요구 양정 「건축법」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착공이후 당초 허가내용과 완전히 다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공사업체에게 선공사를 시행하도록 요청하였고, 변경 설계에 대한 용역감독 및 준공검사가 생략됨으로써 지상층이 내화구조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 청사 증축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과 실무담당(책임)자 EEE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위 ‘2~5’와 같이 행정절차 이행없이 공사 시행 및 준공이전 무단 사용하고, 재설계 용역 발주, 설계변경 및 지하층 검토를 부적절하게 하고, 사용할 수 없는 지하1층을 무리하게 조성한 **실무담당(책임)자 EEE**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경징계**” 조치하시고, 실무책임자의 업무 처리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그리하지 아니하고 의무를 소홀히 한 **감독책임자 FFF**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 제

48조(성실의 의무) 위반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고 향후 업무 추진에 대해 신중을 기하도록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경징계·훈계**)

② 위 ‘2~3’ 과 같이 준공검사자로서 공사 준공이전 무단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고, 착공 후 도급업체가 변경 설계용역을 직접 시행하는 것에 합의하는 등 설계 변경 및 준공절차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실무담당자 GGG**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고 향후 업무 추진에 대해 신중을 기하도록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③ 위 ‘2’ 및 ‘4’ 와 같이 변경 허가없이 우선 시공하는 것을 묵인하고, 지하층 규정에 맞지 않게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시공 후 지상3층 건축물에 해당되어 내화구조 규정에 적합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설계·감리하고, 위법 사항이 있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조사·검사를 부적절하게 한 **(주)▷▷▷▷ 대표 HHH**에 대해서는 「건축사법」 제30조의3(징계)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에 **위법 건축사 행정처분** 의뢰하고, 건축법 제109조(벌칙) 및 제110조(벌칙)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④ 아울러, ○○○○ 건축물이 내화구조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손실이 현 시점에서 시정으로 얻는 효과에 비해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증축 등 건축행위가 수반될 경우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 조치하시고, 관련부서 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 요구

제 목 건축물 설계시 특정업체 중목구조제품 지속 반영 부적정

소 관 기 관 □□군(■■■■■과, ▽▽과, ◎◎◎◎과, △△△△과)

조 치 기 관 □□군(■■■■■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군 ■■■■■과 등 4개 부서는 공공건축물 건축사업을 중목구조로 추진하였고, 세부 건축물 현황은 아래와 같다.

2. 타당한 사유없이 특정업체 중목구조 채택 및 내역서 검토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제3항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하고, 제4항에서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규정에 따르면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감정가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정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 견적가격: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원가계산이나 표준시장단가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고, 가격정보,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군은 「○○○○○ 신축공사」 등 5개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고, 설계용역에 중목구조 및 경골목구조 형식을 반영하였다.

공공건축물은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하여 이용하므로 화재 및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군은 주요 건축물을 발주하면서 업무시설 등 공공건축물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중목구조형식으로 설계하도록 용역업체에게 요구하였고, 설계를 시행한 4개의 건축사사무소는 특정업체인 ▲▲시 소재 ●●●●(주)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설계도면 및 내역서를 작성하였다.

중목구조는 주요 구조부의 치수가 125×125mm 이상인 큰 부재로 건축되는 목구조 형식으로 공사비가 철근콘크리트에 비해 고가(약1.5배)³⁸⁾이고, 화재 및 습기에 취약하며 표면 도색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물에 목구조를 도입하고자 하였다면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했었다.

그런데, □□군은 근래 추진한 주요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에 대해 특정업체가 생산하는 집성목재를 이용한 중목구조로 지속적으로 반영하면서 설계용역 기간 동안 구조형식 및 적정 공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정에 따르면 예정가격 결정 시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가격정보,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군은 20xx년 xx월 실시한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에서 「●●●●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이 제출한 견적금액과의 비교를 위해 첨부된 타 견적서의 부실로 인해 설계내역의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없는데도 설계업체에게 시정 지시없이 그대

38) 「□□□□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 자료 중 철근콘크리트구조 4백만원/평, 목구조 6백만원/평으로 제시

로 준공처리하고 발주한 사실에 대해 용역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가 부적절하였다고 지적되었다.

그런데, □□군은 감사결과 지적된 내용에 대해 개선하지 않고 [표1] 건축물에 대해 동일한 형태로 설계도서를 납품받은 후 발주하였다.

전체 건축공사 금액 중 약 40%에 해당하는 중목구조를 설계하면서 비교견적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비교 견적서를 첨부하였더라도 공사금액만 1식으로 제시하여 단위 공종 및 물품단가에 대한 비교가 불가능하였으며, ○○○○○(주)의 견적서에도 주요자재인 수입산 집성목재에 대한 비교 견적이 제시되지 않는 등 단가산출근거가 부적합하게 작성 제출되어 중목구조공사 설계금액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이처럼 □□군은 거래실례가격에 대한 조사·확인없이 특정업체인 ○○○○○(주)이 공사를 하도급할 목적으로 제출한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반영하면서 견적가격 적정여부에 대한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는 등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을 도모해야 하는 용역감독 및 준공검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3. 공사에 해당하는 목구조 공사를 관급자재로 반영하여 물품 구매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계약의 방법)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및 [별표1]에서 건설업의 업종 및 업종별 업무내용을 분류하고 있다.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비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실내건축공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건축공사,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같은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제1항 규정에 따르면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3.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건축법」 제2조(정의)에서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하고,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시행령 제59조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군은 「○○○○○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군 소재 건축사사무소 ◎◎◎◎(대표 AAA)과 ○○○○천 원에 계약 체결하여 2019. xx. xx. ~ 2019. xx. xx. 기간 동안 시행하였다.

용역 시행 중 구조변경검토(목구조) 및 경상남도교육청 협의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어 당초 2019. xx. xx.로 예정되었던 용역기간을 3차례 총 4개월 연장하였으

나, 이에 따른 구조변경 사유 및 협의내용 등에 대한 검토 자료를 작성하지 않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용역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군은 ○○○○○ 건립공사의 주요 구조부를 중목구조로 결정하면서 ●●●●(주)의 견적서에 근거한 설계도서를 납품받았으나, 비교 견적이 제시되지 않은 금액을 설계내역서에 그대로 반영하면서 도급내역서와 분리하여 관급자재로 설계하였다.

중목구조는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기둥 및 보)에 해당하는 공종이고, 당해 공종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종으로서 「건설기술진흥법」 등 공사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간이 경과하여 노후할 경우 구조부만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교체할 수 없는 시설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허가 또는 리모델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목구조 공사를 별개의 물품 제작·설치로 발주할 수 없는데도 관급자재로 분리하여 설계하였다.

또한, 중목구조의 내역서를 살펴보면 현장설치비에 해당하는 노무비가 ○○○백만원으로 적지 않고, 집성목재가 아닌 일반목재를 이용한 목공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공사 중 도급공사에 포함되는 수장공사로서 대부분 현장 시공되는 공종인데도 관급자재로 부적절하게 반영하였다.

□□군 ▽▽과는 2020. xx. xx. 집성목 제작 설치를 조달청에 구매계약 의뢰하였고, 경남지방조달청은 2020. xx. xx. 「물품 공사 등 혼합계약으로 인한 구매업무 협의」에서 ‘실내건축공사업(0006)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입찰참여 조건을 명시하였으나, 물품과 공사는 분리발주가 원칙으로 □□군의 의견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경미한 공사로서 공사업면허 등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 물품 설치인 경우 일괄발주가 가능함을 안내하였다.

이에 따라 ■■■■■과는 물품 및 공사 혼재 계약 검토 및 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해 [표4]와 같이 회신하였다.

■■■■■과는 중목구조 설치 및 수장공사에 해당하는 일반목구조 공사의 물품과 공사의 분리발주가 가능하고, 당해 공사가 공사업 면허 등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 물품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하자 및 기술적인 문제 발생 우려로 물품 및 공사를 분리할 수 없다고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총칙 중 7-나.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에 따르면 특수한 기술·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요건 등으로 제한하거나 설계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군은 물품제작·설치로 판단하여 관급자재를 설계하였는데도 실내건축공사면허를 요구하고, 건축법 상 내화구조 대상이 아닌데도 내화구조 인증서를 소지한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구하는 등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조달청 구매계약을 요청하였다.

2020. xx. xx. 조달청은 □□군이 회신한 입찰참가자격을 반영하여 제한경쟁으로 입찰공고하였고, 아래 [표5]와 같이 2개사가 입찰하여 최종 ●●●●(주)이 계약 상대방으로 결정되었다.

감사일 현재 조달청에 등록되어 집성목재를 납품하는 업체는 약 1,800개에 이르고, 이들 중 집성목재를 직접 생산·납품하는 업체 수는 45개로 조회되었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군은 주요구조부에 대한 검토과정을 생략한 채로 전체 공사비의 ○○○○백만원 중 약40%에 해당하는 중목구조에 대해서 특정업체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였고, 공사에 해당하는 중목구조 항목을 분리하여 일괄로 관급자재로 설계하였다.

또한, 견적서를 제출한 ●●●●(주)에 유리하게 조달청 구매업무 협의에 대해 회신하고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특정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묵인하는 등 □□군은 「○○○○○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감독 및 준공 검사를 부적절하게 하였고, 관급자재 발주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군은 「○○○○○ 건립공사」의 목구조 공사가 물품과 공사가 혼재된 계약으로 판단하여 관급자재로 반영하였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주요구조부를 변경할 경우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허가 또는 리모델링 절차를 거쳐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200㎡이상인 건축물은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구조체를 형성하는 목구조 공사를 별개의 물품 제작·설치로 발주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군은 나머지 3건의 중목구조 설치를 도급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하였고, 「◇◇◇◇◇ 신축공사」의 경우에 물품과 공사를 분리하여 시공하였으므로 물품과 공사를 분리할 수 없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연면적 1,000㎡이내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어 내화구조 인증서를 소지한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구하였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은 「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따른 내화구조 대상이 아니므로 위 의견은 인정할 수 없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 ① 위 ‘2~3’과 같이 ‘○○○○○ 건립공사’ 설계용역 감독 및 관급자재 발주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BBB**과 실무담당자의 업무 처리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그리하지 아니하고 의무를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CCC** 및 **DDD**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고 향후 업무 추진에 대해 신중을 기하도록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② 위 ‘2~3’과 같이 ‘○○○○○ 건립공사’ 등 3개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 준공검사를 부적절하게 한 **실무담당자 EEE**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고 향후 업무 추진에 대해 신중을 기하도록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③ 아울러, 관련부서 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 요구

제 목 ◇◇◇◇ 신축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소 관 기 관 □□군(■■■■과)

조 치 기 관 □□군(■■■■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군 ■■■과는 「◇◇◇◇ 신축공사」를 위해 거제시 소재 ○○○○주식회사 (대표 AAA)와 2019. xx. xx. ○○○백만원에 계약하고 2019. xx. xx. 착공하여 2020. xx. xx. 제3회 설계변경 시 도금액 ○○○○백만원으로 변경 계약하여 준공하였음.

2. 설계용역 분리발주 및 건축물 위치 변경에 따른 과다 설계변경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계약의 방법)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에 따르면 설계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하도록 하고 있다.

-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시행령 제59조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공사 설계의 변경)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군은 「◇◇◇◇◇◇ 신축공사」 추진을 위해 기본설계를 실시하였고, 이후 부지 조성 및 건축물 설계를 위해 두 차례 나누어 설계용역을 시행하였다.

◇◇◇◇◇ 신축공사는 소규모 한옥형 건축물 2동을 건립하는 공사로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분리할 필요성이 없고, 발주 당시 설계내역서 상 순공사비가 토목공사비가 ○○백만원, 건축공사비가 ○○○백만원으로 이루어져 건축물 시공이 대부분이며 부지조성은 부대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로서 실시설계용역에 대해 부지조성 및 건축물 설계로 나누어 발주해야 할 사유가 없었다.

그런데, □□군 ■■■■■과(구, ■■■■■실)는 용역금액을 수의계약가능 금액 이하로 조정하여 최초 기본설계용역, 부지조성 및 실시설계용역 등 총3건 모두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설계용역 발주하는 등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입찰 및 분리발주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였다.

□□군은 2019. xx. xx. 최초 건축신고(협의)후 공사업체인 ○○○○○ 주식회사(대표 AAA)와 2019. xx. xx. 계약하여 2020. xx. xx. 공사 준공하였다.

당초 준공예정일은 2019. xx. xx.이었으나, 2020. xx. xx.까지 공사기간 45일을 최초 연장하였고, 제1회 설계변경 시 공사비 ○○○○천 원 증액 및 공기를 40일 연장하였으며, 2020. xx. xx. 공사기간을 추가로 24일 연장하면서 당초 6개월이었던 공사기간이 10개월 가까이 늘어나면서 약 60% 증가하였다.

□□군 ■■■■■과(구, ■■■■■실)는 2019. xx. xx. 숲속의 집 2동을 각각 상류부로 23m, 13m 이동하고, 기단을 1단에서 2단으로 증설하고, 자연각석 쌓기를 성곽석 쌓기로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1회 실정보고 검토 보고하였다.

그리고, ■■■■■실-10539호(2019. xx. xx.)로 공사 변경사항에 대해 □□군 ■■■■■실에 일상감사를 요청하였고, 통보된 일상감사 의견의 주요내용 및 ■■■■■실의 회신내용은 [표3]과 같다.

□□군 ○○○○에서는 ■■■■■과에 일상감사 의견을 통보하면서 ‘건물 위치이동에 대한 사유 제출’을 요구하였고 ■■■■■과는 배수 문제, 성토로 인한 부등침하 및 건물내부 노출로 인해 착공 후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였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과가 밝힌 설계변경 사유는 기본계획 수립 및 부지조성 설계 단계 초기에 이미 검토되는 사항이므로 착공 후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사유로 적절하지 않다.

공사비가 당초 대비 22.9%로서 2억원 이상 증가한 실질적인 설계변경의 사유는 ‘숲속의 집 조망권 확보’를 위한 것이었으며, 공사착공이후 불가피한 사정없이 공사를

증액하는 사유는 설계변경의 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군은 설계용역기간 중 이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착공 후 설계변경을 추진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대지조성을 포함한 건축물 기초를 2019. xx월경 시공하였다면 시공 전에 공사업체로부터 실정보고 내용을 제출받아 검토 후 승인하여야 했으나, 위치이동에 대한 실정보고 승인없이 공사업체에게 구두로 지시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5개월이 지나 구조체공사가 완료된 2019. xx월에 공사업체로부터 실정보고를 제출 받았다.

이로 인해 공사 시공 전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가 생략되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는데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으며, 공기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건축물 위치 이동에 따른 신고 절차없이 우선 공사 시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지관리법」 제15조(산지전용신고)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군은 ■■■■■과는 2019. xx. xx. 최초 건축신고(협의)하였으나, 2019. xx.

xx.숲속의 집 2동을 각각 상류부로 23m, 13m 이동하기 위해 설계변경 실정보고하였으나, 대지조성을 포함한 건축물 기초는 2019. xx월경부터 시공하였다.

이처럼 건축물 위치이동을 위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면 「산지관리법」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변경 시공하기 전에 신고를 하여야 했었다.

□□군 ○○○○에서는 2019. xx. xx. ■■■■과에 일상감사 의견을 통보하면서 ‘사업대상지 위치 이동에 따른 각종 인허가(산지전용 등) 절차(변경)’를 준수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과는 1개월이 경과한 2020. xx. xx. 산지전용신고 변경 신청을 하였고, 2020. xx. xx. 부지조성이 완료된 후 산지전용 변경 신고를 득하였다.

마찬가지로 ■■■■과는 2020. xx. xx. 건축협의(변경) 신청을 하였고, 2020. xx. xx.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협의(변경) 신고를 득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군은 숲속의 집 2동의 위치가 각각 23m, 13m 이동하였으나 공사업체의 실정보고 사항을 우선 승인하여 공사업체가 선공사를 시행하도록 묵인하였고, 이에 따른 산지전용 신고수리 및 건축신고 변경은 시공 후 약 7개월이 경과한 2020. xx. xx. 및 2020. xx. xx.에 각각 완료되는 등 「산지관리법」 및 「건축법」을 위반하여 공용건축물을 부적절하게 건축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관련법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업무연찬이 부족하여 이 건이 발생하였으나 향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위의 ‘2~3’과 같이 ‘◇◇◇◇◇ 신축공사’ 설계용역 및 공사관리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BBB**와 실무담당자의 업무 처리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그리하지 아니하고 의무를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CCC**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고 향후 업무 추진에 대해 신중을 기하도록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관련부서 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